

#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XII)

## : 사회 인식 변화의 다차원성

정세정

강신욱·김기태·오성재·우선희·이수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성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우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이수현	King's College London

연구보고서 2025-30

###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Ⅻ)

: 사회 인식 변화의 다차원성

발 행 일 2025년 12월  
발 행 인 신 영 석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사)공감과어울림 세종인쇄정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ISBN 979-11-7252-105-9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5.30>

## 발|간|사

우리 사회는 최근 민주적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사건을 경험하였다. 세대, 정치 성향, 성별, 계층 등을 교차하는 집단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세대 간, 성별 간, 계층 간 갈등이 주로 다뤄졌다면, 최근 들어서는 계층과 세대, 성별과 세대, 성별과 정치 성향과 같이 갈등과 균열의 지점이 더 작은 집단으로 쪼개져 논의되는 양상도 관찰된다. 지구적 차원에서는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통합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다. 그런데 용어의 활용은 빈번한 가운데 사회통합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12차 연도를 맞는 2025년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사회통합 개념과 의미를 고찰하고, 사회통합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하며, 궁극적으로 그 요인들이 복지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진들은 사회통합 개념이 태동에서부터 가장 최근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살피고 우리 사회에서 지금보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사회통합 개념 확장의 필요를 제안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확장된 개념에 근거한 사회통합의 측정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진의 분석과 고찰에 따르면 2025년 조사에서는 여러 지표가 2014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 인식 정도와 사회 신뢰 수준, 삶의 만족도와 행복이 그러하다. 다만 이러한 수치를 다른 주요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이 외에도 연구진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하여 주관적 웰빙과 사회 참여, 정치 성향, 가치 지향, 미래 인식과 복지에 대한 태도, 민주주의와 복지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물질적인 조건뿐 아니라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요소들에 지금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본원의 정세정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강신욱 선임연구위원, 김기태 연구위

---

---

원, 오성재 부연구위원, 우선희 전문연구원과 King's College London 이수현 교수의 참여로 수행되었다. 연구진과 더불어 본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유익한 조언과 통찰을 나눠주신 중앙대학교 신진욱 교수와 본원 노대명 선임연구위원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이들의 노력으로 빚어진 연구 결과물이 사회통합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신 영 석





요약 .....	1
<b>제1장 서론 .....</b>	<b>5</b>
제1절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	7
제2절 연구 방법 .....	12
<b>제2장 사회통합 논의의 동향과 개념 검토 .....</b>	<b>27</b>
제1절 사회통합 논의의 동향 및 쟁점 .....	29
제2절 사회통합 개념 검토 .....	41
<b>제3장 사회통합 인식 .....</b>	<b>49</b>
제1절 사회통합 관련 주요 지표 분석 및 국제 비교 .....	51
제2절 사회 인식 .....	67
<b>제4장 주관적 웰빙과 사회 참여 .....</b>	<b>87</b>
제1절 들어가며 .....	89
제2절 문헌 고찰 .....	90
제3절 분석 방법 및 결과 .....	92
<b>제5장 정치 성향, 가치 지향, 미래 인식과 복지에 대한 태도 .....</b>	<b>117</b>
제1절 들어가며 .....	119
제2절 문헌 고찰 .....	119
제3절 분석 방법 및 결과 .....	123

---

<b>제6장 민주주의와 복지에 대한 태도 .....</b>	<b>139</b>
제1절 들어가며 .....	141
제2절 문헌 고찰 .....	149
제3절 분석 방법 및 결과 .....	153
 <b>제7장 결론 .....</b>	 <b>163</b>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	165
제2절 제언 .....	171
 <b>참고문헌 .....</b>	 <b>175</b>
 <b>부록 .....</b>	 <b>185</b>
[부록 1] 2025 사회통합 실태조사 표본 설계 .....	185
[부록 2] 2025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표 .....	199
 <b>Abstract .....</b>	 <b>219</b>

#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2014~2025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연구의 연차별 주제와 주요 연구 내용 .....	10
〈표 1-2〉 연도별 조사 완료 표본 규모 .....	13
〈표 1-3〉 '2025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개요 .....	14
〈표 1-4〉 응답자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 .....	15
〈표 1-5〉 실태조사 조사 내용 .....	16
〈표 1-6〉 2014~2025년 국내외 주요 사건과 조사 시점 .....	25
〈표 3-1〉 사회통합 정도 인식, 신뢰, 사회 참여 문항 .....	52
〈표 3-2〉 사회통합 정도 인식, 신뢰, 사회 참여 조사 연도 .....	53
〈표 3-3〉 연도별 사회통합 정도 인식, 신뢰, 사회 참여 수준 .....	54
〈표 3-4〉 연도별 국가 자부심, 사회 이동성, 사회적 지지, 사회 참여 .....	56
〈표 3-5〉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한 요소 .....	57
〈표 3-6〉 주관적 웰빙 문항 .....	58
〈표 3-7〉 주관적 웰빙 조사 연도 .....	59
〈표 3-8〉 연도별 주관적 웰빙 수준 .....	60
〈표 3-9〉 한국과 유럽 주요국의 삶의 만족도 .....	62
〈표 3-10〉 한국과 유럽 주요국의 행복 수준 .....	63
〈표 3-11〉 한국과 유럽 주요국의 자원봉사 경험률 .....	64
〈표 3-12〉 한국과 유럽 주요국의 정치 관심도 .....	65
〈표 3-13〉 소득 격차 축소에 대한 정부의 역할 인식 .....	66
〈표 3-1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인식 .....	69
〈표 3-15〉 실업, 구직에 대한 걱정 정도 .....	70
〈표 3-16〉 재정 상황에 대한 만족도 .....	71
〈표 3-17〉 '나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해 주는 정당이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 .....	72
〈표 3-18〉 정치에 대한 관심, 정부의 역할 인식 문항 .....	73
〈표 3-19〉 정치 관심도 및 정부의 역할 문항 조사 연도 .....	73
〈표 3-20〉 연도별 정치에 대한 관심,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	74
〈표 3-21〉 2025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	76
〈표 3-2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치 성향이 다른 이와 연애 및 결혼을 할 의향 .....	80
〈표 3-2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치 성향이 다른 이와의 교제 의향 .....	81
〈표 3-2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종교가 다른 이와의 교제 의향 .....	82
〈표 3-2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소득수준이 다른 이와의 교제 의향 .....	83



〈표 3-2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교육수준이 다른 이와의 교제 의향 .....	84
〈표 3-2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인종이 다른 이와의 교제 의향 .....	85
〈표 3-28〉 2025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포용성 .....	86
〈표 4-1〉 친사회적 행동 조사 연도 .....	93
〈표 4-2〉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문항 구성과 분석 활용 여부 .....	94
〈표 4-3〉 주관적 웰빙 문항 조사 연도 .....	96
〈표 4-4〉 주관적 웰빙과 친사회적 행동: 자원봉사 1 .....	99
〈표 4-5〉 주관적 웰빙과 친사회적 행동: 자원봉사 2 .....	101
〈표 4-6〉 주관적 웰빙과 친사회적 행동: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1 .....	104
〈표 4-7〉 주관적 웰빙과 친사회적 행동: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2 .....	106
〈표 4-8〉 주관적 웰빙과 19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	110
〈표 4-9〉 주관적 웰빙과 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1 .....	113
〈표 4-10〉 주관적 웰빙과 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2 .....	115
〈표 5-1〉 정치 성향 .....	125
〈표 5-2〉 가치 지향 .....	128
〈표 5-3〉 증세에 대한 태도 .....	129
〈표 5-4〉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정치 성향 .....	130
〈표 5-5〉 정치 성향과 복지에 대한 태도 .....	132
〈표 5-6〉 사회 인식과 복지에 대한 태도 .....	133
〈표 5-7〉 정치 성향, 사회 인식과 복지에 대한 태도 .....	134
〈표 5-8〉 미래 인식과 복지에 대한 태도 .....	136
〈표 6-1〉 주요 변수와 측정 방법, 기초 통계량 .....	155
〈표 6-2〉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복지 확대 및 복지 증세 태도 회귀분석 결과 .....	159
〈표 6-3〉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세목별 복지 증세 태도 회귀분석 결과 1 .....	161
〈표 6-4〉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세목별 복지 증세 태도 회귀분석 결과 2 .....	162



[그림 1-1] 재정 상황 만족도 문항 .....	18
[그림 1-2] 기관 신뢰도 문항 .....	19
[그림 1-3] 정치, 종교, 소득수준, 교육수준, 인종이 다른 사람과의 교류 의향 문항 .....	20
[그림 1-4]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문항 .....	22
[그림 1-5] 복지 수준에 대한 태도 문항 .....	22
[그림 1-6] 증세 방안 문항 .....	23
[그림 2-1] 사회통합과 관련된 이론적 실증적 연구의 흐름 .....	30
[그림 2-2] 시기별 사회통합 연구의 초점 .....	31
[그림 2-3]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하는 정도 .....	32
[그림 2-4] 공공지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국가 리더십에 대한 신뢰 .....	33
[그림 2-5] 국가 리더십(대통령실)에 대한 신뢰와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	34
[그림 2-6] 포용성 수준별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 .....	35
[그림 2-7] 일에 대한 불안정성 인식과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와의 관계 .....	36
[그림 2-8] 복지국가에 대한 선호도: 2017년과 2022년 .....	38
[그림 2-9] 대북 지원 선호도: 2017년과 2022년 .....	39
[그림 2-10] 성평등 기구/조치 폐지에 대한 인식: 2022년 .....	40
[그림 3-1] 2025년 기관신뢰도 .....	54
[그림 3-2] 연도별 사회통합 정도 인식, 사회신뢰 수준 .....	55
[그림 3-3] 연도별 사회 참여(자원봉사, 기부) 참여율 .....	56
[그림 3-4]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한 요소 .....	58
[그림 3-5] 주관적 웰빙 추이 .....	60
[그림 3-6] 연도별 사회갈등 인식 .....	67
[그림 3-7] 집단별 갈등에 대한 인식 .....	68
[그림 3-8] 연도별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	75
[그림 3-9] 2025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1 .....	76
[그림 3-10] 2025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2 .....	77
[그림 3-11] 2025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3 .....	77
[그림 3-12] 성향이나 특성이 다른 이와의 교제 의향 .....	79
[그림 3-1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포용성 .....	86
[그림 4-1] 2014~2022년 자원봉사,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여부 문항 .....	93
[그림 4-2] 2023~2024년 자원봉사,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여부 문항 .....	93



[그림 4-3] 2025년 자원봉사,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문항 .....	93
[그림 4-4] 삶의 만족도 문항 .....	96
[그림 4-5] 긍정정서(어제 행복 정도) 문항 .....	96
[그림 4-6] 부정정서1(어제 우울 정도) 문항 .....	96
[그림 4-7] 부정정서2(어제 걱정 정도) 문항 .....	97
[그림 4-8] 유다이모니아(일(삶)에 대한 가치 인식) 문항 .....	97
[그림 4-9] 삶에 대한 평가 문항 .....	97
[그림 4-10] 19대 대통령 선거(2017. 5. 9) 지역별 투표율 .....	109
[그림 5-1] 연도별 정치 성향 분포 .....	124
[그림 5-2] 연도별 정치 성향 분포: 19~39세 .....	126
[그림 5-3] 연도별 정치 성향 분포: 40~59세 .....	126
[그림 5-4] 연도별 정치 성향 분포: 60세 이상 .....	127
[그림 5-5] 가치 지향 분포 .....	128
[그림 6-1]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퇴조 현상 1 .....	144
[그림 6-2]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퇴조 현상 2 .....	145
[그림 6-3] 권위적인 리더에 대한 선호 .....	147
[그림 6-4] 국가별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선호 비율 .....	148
[그림 6-5] 민주주의 선호에 따른 복지 태도 .....	156
[그림 6-6] 민주주의 선호에 따른 복지 증세 지지 수준 .....	156
[그림 6-7] 민주주의와 복지 증세에 대한 태도 분포 .....	157
[그림 6-8]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복지 증세 지지 수준 .....	157



## 요약

### 1.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과 국회를 통한 계엄의 해제, 2025년 4월 4일 현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과 6월 조기 대선에 이르기까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은 급박하고도 지난했음.
-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관련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한국의 민주주의도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정치적 갈등이 세대, 젠더와 교차한다는 세간의 주장과 함께 사회통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는 저성장 기조의 고착과 사회 이동성의 저하, 이주민 이슈에 대한 뚜렷한 해결 방안 모색이 어려운 가운데 인공지능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음. 이처럼 오늘날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다양한 변화에 동시다발적으로 직면하고 있음.
- 12차 연도를 맞는 2025년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회통합 개념과 의미를 고찰하고 사회통합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하며, 그 요인들이 복지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
  -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회통합 개념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개념의 확장과 보완의 필요성을 다루고 실태조사 자료 및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하여 사회통합의 실태를 진단(제3장)하고자 했음.
  - 제4장에서는 사회통합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통합의 구성 요소인 사회 참여를 높일 방안을 찾고자 2014~2025년(2020년 제외) 자료를 통합 횡단면 자료로 구축하여 로짓분석과 회귀분석을 수행했음. 제5장에서는 통합 횡단면 자료를 기반으로 정치 성향, 가치 지향, 미래 인식과 복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음. 제6장에서는 민주주의와 복지에 대한 태도를 2025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음.

## 2. 주요 연구 결과 및 제언

-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는 1897년부터 1999년에 이르기까지 개인이 집단에 소속되고 통합되는 것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2010년대에 들어 다양한 집단을 포용하고 사회자본을 축적하며,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가장 넓은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음.
-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와 이를 토대로 도출한 함의는 다음과 같음.
  - 국가 리더십(대통령실)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증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며, 타인에 대한 포용성이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음을 확인함.
  - 2025년에는 사회통합과 관련된 주요 지표들이 조사가 시작된 2014년 이래 가장 긍정적인 수준을 보여주었음. 사회통합 인식, 사회 신뢰, 국가 자부심,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행복 지표가 그것임.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와 행복을 유럽사회조사와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포르투갈, 헝가리와 같이 그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하는 국가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사회통합 관련 주요 지표들의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한 지속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감소 추세가 확인되는 지표들도 있었음. 사회 이동성에 대한 인식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꾸준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에는 2.57점으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사회참여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율도 2014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음.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상용직에 비해 실직과 구직에 대한 걱정과 재정 상황에 대한 불만족이 두 배가량 높다는 점도 정책 설계 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임.
  - 사회 이동성과 사회참여는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요소임. 따라서 사회 이동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참여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회통합 인식, 사회 신뢰, 삶의 만족도, 행복 등이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추후 학문적, 정책적 차원에서 이들 간의 관계를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은 2018년과 2023년에 이어 2025년에도 집단 간 갈등

이 가장 높은 것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를 다양화해 볼 수 있음.

- 갈등은 공동체의 역동성을 증진할 수도, 혁신의 단초가 될 수도 있음.
- 최근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 추세와 포퓰리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방화, 폭력을 기반으로 하는 시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역할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는 2014년 대비 감소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분석이 필요해 보임. 그러나 정부 역할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가 5점 척도에서 3점 이상이라는 점은 여전히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다양성에 대한 수용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정치, 종교, 소득수준, 교육수준, 인종이 다른 사람과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음.

-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수준이 다르더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정치 성향과 인종의 경우에는 상대적 수용성이 낮은 편이었음. 그러나 2023년 조사 결과(곽윤경 외, 2023)에 비해서는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의 교류 수용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을 확인함.

○ 주관적 웰빙이 좋을수록 사회참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제4장의 분석 결과는 긍정정서와 삶에 대한 기대, 삶에 대한 평가 등으로 측정되는 미래에 대한 낙관이 자원봉사, 기부, 투표 참여와 같은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포퓰리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Ward, 2019; Ward et al., 2021) 결과와 일치함. 이러한 결과는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미래를 낙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시사함.

○ 세간의 우려와 달리, 정치 성향은 양극화 경향이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청년층의 정치 성향 또한 보수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음. 그러한 차원에서 충분한

#### 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XII): 사회 인식 변화의 다차원성

표본크기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 제6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가 복지 확대 찬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증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은 추후 연구의 여지를 남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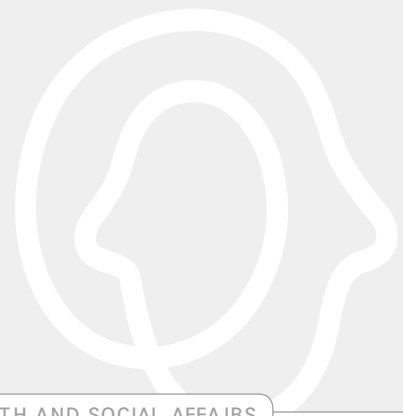
□ 향후 연구에서는 지속 조사 문항 설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지속 문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지난 10여 년과 향후 10여 년간 사회통합을 저해해 왔거나 향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사회통합 정의 및 지표에 대한 합의가 요구됨.

주요 용어: 사회통합, 사회 인식, 민주주의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제2절 연구 방법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과 12월 4일 새벽 1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2025년 4월 4일 현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과 6월 조기 대선에 이르기까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은 급박하고도 지난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관련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한국의 민주주의도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정치적 갈등이 세대, 젠더와 교차한다는 세간의 주장과 함께 사회통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저성장 기조의 고착과 사회 이동성의 저하, 이주민 이슈에 대한 뚜렷한 해결 방안 모색이 어려운 가운데 인공지능의 발전과 디지털 전환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다양한 변화에 동시다발적으로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12차 연도를 맞는 2025년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는 사회통합 개념과 의미를 고찰하고, 사회통합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요인들을 점검하며, 궁극적으로 그 요인들이 복지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높은 사회통합 수준은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책 집행을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정책이 생산성과 성장의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강한 사회’(엔 뉴 안테르손, 2014)에서의 사회통합과 다양성과 시민 참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통합은 다른 모습일 필요가 있다. 전자와 후자의 가장 큰 차이는 ‘다름’에 대한 관용의 정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통합 개념의 태동과 관련이 있다. 구성원 간의 감정적 연대에 초점을 두었던 초기의 사회통합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와 존중으로 확장됐고, 오늘날에는 개인이 소속된 사회와 국가를 넘어 지구적 차원의 사회통합 과제도 숙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구의 이동이 개념의 확장과 숙고를 추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의 흐름 속에서 Fonseca et al. (2019)<sup>1)</sup> 사회통합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구조화하고자 했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회통합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연구를 중심으로 사회통합의 정의를 검토하고 사회통합과 연관된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으며 다문화 특성을 반영한 사회통합 개념 재구성을 시도한 것이다. 해당 연구를 통해 이들은 사회통합을 “사회 구성원의 웰빙과 소속감, 자발적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용인하고 장려하며, 사회에서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되는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사회통합 개념은 시대적 변화와 사회 구조의 복잡성 증가에 따라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할 때, 현시점은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 개념에 대한 검토와 시대 상황을 반영한 사회통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은 오늘날 인류가 가장 필요로 하는 핵심 개념이지만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의나 도구,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Pahl, 1991; Friedkin, 2004; Fonseca, 2019)는 점이 이러한 시대적 필요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사회에는 서로 다른 정치 성향과 가치를 지닌 개인과 집단들이 있다. 또한 개인과 집단들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지니게 되는 견해는 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되기보다 유동성을 지닌다. 이를테면, 스펙트럼선상에서 같은 범주로 묶일 수 있는 정치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소수자 문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지만 이주민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지닐 수도 있다.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재분배 확대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지닐 수도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흔히 관찰된다.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정치적 갈등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작은 정체성에 기반을 둔 사회적 갈등, 사회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회 균열의 양상을 진단하고 균열의 지형에 따른 사회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청년 세대의 정치적 양극화 심화에 대한 논의도 충분한 시계열과 표본 수를 기반으로 보다 엄밀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정치적 양극화 심화 경향 논의에 사회가 주목하는 것은 이들이 이

1) 이들은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통합에서 ‘회복력’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행기에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의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는 집단임에 따라 이들의 의식이 사회통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영국 가디언지 기자인 Cole(2025)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16~26세 청년 6,7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전체 응답자의 48%, 독일 청년의 61%가 자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롭다고 평가했다.

독일의 정치학자인 포어랜더(2023)는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는 사회의 다원성, 문화의 다양성, 경제 영역에서의 경쟁이며(p.153), 민주주의는 부분 문화에 의해 위협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특히 언어, 문화, 종교, 인종, 지역 등이 상이하고 분절된 문화들이 강력한 정체성을 형성할 때, 부분적인 정체성들과 문화들이 급격히 확장될 때, 위협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았다(p.162). 알고리즘을 따라 흐르는 “다수의 네트워크 권력(p.193)” 또한 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이다.

복지의 관점에서 민주주의가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는 복지는 정체되거나 해체되는가?’와 같은 질문들이다. 불평등과 불안정은 신뢰와 사회의 유대(social bonds)를 침식시키고 사회 계약을 위협한다(Pawar, 2025). 즉 복지의 약화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 물론 버나드 크릭(2021, p. 93)이 민주주의는 만인의 연인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가장 문란한 단어에 해당할 것이라 표현한바, 민주주의 자체에 관한 질문을 던질 경우 논의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회통합 개념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개념의 확장과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제2장), 연도별 실태조사 자료 및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하여 사회통합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제3장). 제4장에서는 사회통합 제고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사회통합의 구성요소인 사회참여(자원봉사, 기부, 투표 참여)를 높일 방법을 찾기 위해 주관적 웰빙과 사회참여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새로운 문제들이 범람한 상태에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통합의 부재는 사회통합의 저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제5장에서는 정치 성향, 가치 지향, 미래 인식과 사회 인식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민주주의와 복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볼 것이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시대적인 판단 속에서 민주주의 정체 혹은 후퇴가 복지국가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끝으로 제7장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와 제언을 다룬다.

다음 <표 1-1>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차별 연구 주제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1> 2014~2025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연구의 연차별 주제와 주요 연구 내용

연차 (연도)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1년차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목적: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과 <b>행복</b> 수준의 결정요인 규명, 사회통합과 행복 간의 관계 분석</li> <li>- 연구방법: 문헌·이론연구, 실태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통합의 개념 및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사회통합 수준 및 상태 진단</li> </ul> </li> <li>- 사회통합 인식의 결정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통합 인식의 결정요인 분석</li> </ul> </li> <li>- 행복의 개념 및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 유형별, 개인 특성별 행복 수준</li> </ul> </li> <li>- 행복의 결정요인</li> </ul>
2년차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목적: <b>사회이동</b>과 사회통합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li> <li>- 연구방법: 문헌·이론연구, 실태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호트별 사회이동의 현황</li> <li>- 교육성취와 사회이동</li> <li>-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논의 및 선행연구</li> </ul> </li> <li>- 사회이동 수준 국제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계층 이동 국제비교 분석 및 결과</li> <li>• 사회이동 수준 비교의 함의</li> </ul> </li> </ul>
3년차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목적: 사회통합 국민인식 구조를 <b>갈등 인식과 박탈</b>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사회통합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li> <li>- 연구방법: 문헌·이론연구, 실태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인의 사회통합 인식 구성</li> <li>- 사회통합 수준의 국제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통합 측정 지표 및 자료</li> </ul> </li> <li>-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갈등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li> </ul> </li> <li>- 박탈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li> <li>- 행복과 사회통합 인식 간의 관계</li> </ul>
4년차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목적: 국민이 경험하는 <b>불안, 불신, 불만</b>의 현상과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사회통합 증진의 단초 마련</li> <li>- 연구방법: 문헌·이론연구, 실태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통합 개념의 확대를 위한 이론적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통합과 사회병리의 관계</li> </ul> </li> <li>- 트라우마 경험과 정신건강 간 관계</li> <li>- 물질적 박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li> <li>-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사회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경험</li> <li>•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정신건강</li> <li>• 갈등과 정신건강의 사회통합 인식 영향</li> </ul> </li> <li>- 사회적 불안과 사회통합</li> </ul>

연차 (연도)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5년차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목적: 국민이 경험하는 <b>사회갈등</b>의 양상 및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응을 모색함</li> <li>- 연구방법: 문헌·이론연구, 실태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갈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론적 검토</li> <li>- 사회계층에 따른 인식과 (재)분배에 대한 태도</li> <li>- 젠더갈등과 사회통합</li> <li>- 세대별 인식의 분기와 사회통합</li> <li>- 공공갈등과 사회통합</li> </ul>
6년차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목적: 사회통합 실태 연구 성과에 대한 <b>종합</b>과 더불어 사회통합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시도</li> <li>- 연구방법: 문헌·이론연구, 실태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주요 내용 및 사회통합 인식 변화</li> <li>- 사회적 포용 상태의 진단 및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li> <li>- 사회적 자본의 상태 진단 및 국민인식과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li> <li>- 사회 이동성의 상태 진단 및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분석</li> <li>- 사회통합 인식의 종합 진단</li> </ul>
7년차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목적: 국민들의 <b>사회이동성</b>에 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실태와 인식을 살펴보고, 공정성을 비롯한 사회이동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이슈들을 조망</li> <li>- 연구방법: 문헌·이론연구, 실태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 간 사회이동의 경험과 불공정 인식</li> <li>- 자산의 세대 간 이전과 사회이동 인식</li> <li>- 불안정성 인식과 사회이동 인식</li> <li>- 사회이동 인식의 결정요인</li> <li>-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인식</li> </ul>
8년차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목적: 국민들의 <b>사회경제적 위기(코로나19) 경험, 사회통합 인식, 정신건강 영향</b> 등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 도출</li> <li>- 연구방법: 문헌·이론연구, 실태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전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 변화</li> <li>- 코로나19 전후 위험 인식의 변화와 영향요인</li> <li>- 코로나19 전후 신뢰·차별 인식의 변화</li> <li>- 코로나19와 위기 대응력</li> <li>- 코로나19 전후 정신건강 수준 변화와 영향요인</li> </ul>
9년차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목적: 국민들의 <b>코로나19 영향과 경제적 충격, 건강불평등, 사회적 지지, 사회통합 인식, 복지정책 대응 인식</b> 등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 도출</li> <li>- 연구방법: 문헌·이론연구, 실태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이후 삶의 만족도, 사회통합, 정부 대응에 대한 인식 변화</li> <li>-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사회통합 및 복지정책 인식</li> <li>-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영향과 건강정책 인식</li> <li>- 코로나19 전후 사회적 지지와 사회통합 및 사회갈등 영향요인</li> </ul>
10년차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목적: 한국 사람들이 인지하는 <b>사회갈등 수준과 변화 양상</b>을 파악하고, <b>공정성, 청년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한 사회갈등 유형과 대상</b>을 살펴보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함의점을 도출</li> <li>- 연구 방법: 문헌·이론연구, 실태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인식</li> <li>- 공정성 인식과 사회갈등 인식</li> <li>- 청년세대의 차별과 갈등에 대한 인식과 경험</li> <li>-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갈등</li> </ul>

## 1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XII): 사회 인식 변화의 다차원성

연차 (연도)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주요 연구 내용
11년차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목적: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민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 이주민의 사회권과 복지 태도를 중점적으로 이해하고 정책적 함의점을 도출</li> <li>- 연구 방법: 문헌·이론연구, 실태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통합 인식</li> <li>- 다양성과 이주민 수용성</li> <li>-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에 대한 태도</li> <li>- 이주민 사회권과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li> </ul>
12년차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목적: 사회통합 개념 확장의 필요성과 사회통합 인식을 검토하고, 사회통합의 균열 요인과 복지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여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함의를 도출</li> <li>- 연구 방법: 문헌 고찰, 실태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통합 개념 검토</li> <li>- 사회통합 인식</li> <li>- 주관적 웰빙과 사회 참여</li> <li>- 정치 성향, 가치 지향, 미래 인식과 복지에 대한 태도</li> <li>- 민주주의와 복지에 대한 태도</li> </ul>

주: 필자 작성

## 제2절 연구 방법

### 1.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관련 국내외 문헌 고찰과 통계자료 분석이다. 통계자료에는 본 과제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실태조사 자료의 분석과 유관 통계가 포함된다.

문헌 고찰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통합 개념을 검토한다. 그간 본원 과제로 수행되어 온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와 사회통합을 다룬 국내외 문헌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주관적 웰빙과 시민 참여와의 관계를 살펴본 문헌들을 검토한다. 사회 참여는 사회통합의 하위 구성요소인 사회자본에 포함된다.<sup>2)</sup> 다양성과 복지에 대한 태도도 살펴본다. 다양성은 정치 성향, 가치지향, 미래 인식,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일컫는다. 이러한 다양성은 공론장에서 사회통합에 균열을 일으키는 지점으로 다뤄지고 있기도 하다.

통계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 주되게 활용한 데이터는 본 과제의 일환

2) OECD(2011)는 사회통합이 사회자본(social capital),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사회 이동성(social mobility)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으로 실시한 2014~2019년, 2021~2025년 실태조사 자료이다. 2020년 실태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환경 속에서 조사 대상과 조사 방법을 달리하여 비교에서 일괄 제외하였다. 사회통합 관련 지속 문항과 가능한 경우 국제 비교 또한 실시하였다. 국제 비교에 활용한 통계자료는 유럽사회조사(ESS; European Social Survey)이다.

## 2. 조사 설계 및 내용

### 가. 조사 설계 개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 연구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는 목표 표본 규모는 4,000명이었으며, 2024년부터는 예산 제약 하에 목표 표본 규모가 3,000명으로 축소되었다. 주어진 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2025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또한 19~75세 국민 3,000명을 목표 표본 규모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최종 3,009명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표 1-2〉).<sup>3)</sup>

〈표 1-2〉 연도별 조사 완료 표본 규모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사례수	3,648	4,052	3,669	3,839	3,873	3,889	3,923	3,944	3,952	3,011	3,009

2025년의 실태조사는 7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대면 면접 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조사의 개요는 다음 〈표 1-3〉과 같다.

3) 2025년 6월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내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다(제2025-048호).

#### 1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XII): 사회 인식 변화의 다차원성

〈표 1-3〉 ‘2025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전국의 19세 이상 ~ 75세 이하 대한민국 남·여
조사 대상	19세 이상(2006년 6월 1일 이전 출생) ~ 75세 이하(1949년 5월 31일 이후 출생) 남·여
표본 크기	전국 500개 집계구(지역) 내 6가구 3,000명(3,009명에 대해 조사 완료)
표본 추출틀	2024년 통계청 SGI 집계구 - 표본 집계구 500개에서 6가구를 계통 추출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
조사 기간	2025년 7월 14일 ~ 9월 1일
조사 기관	(주)한국리서치

주: 필자 작성

응답자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4〉와 같다. 남성이 50.85%, 여성이 49.15%를 차지했으며, 경제활동 상태는 상용직이 38.8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비경제활동인구로 21.53%를 차지했으며, 고용주, 자영자는 20.47%였다. 임시, 일용, 특고는 14.52%였으며, 실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각각 3.23%, 1.40%였다. 주관적 소득계층은 중간층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50.28%), 중하층(34.53%), 하층(8.43%), 중상층(6.49%), 상층(0.27%)의 순서였다.

〈표 1-4〉 응답자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3,009	100.00
성별	남성	1,531	50.85
	여성	1,478	49.15
연령	20대 이하	408	16.16
	30대	531	17.13
	40대	518	18.95
	50대	664	21.27
	60대 이상	888	26.50
지역	수도권	841	51.74
	비수도권	2,168	48.26
월평균 근로소득	200만 원 미만	1,035	32.26
	200만 원대	694	23.36
	300만 원대	614	21.84
	400만 원대	278	9.33
	500만 원 이상	388	13.2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62	8.43
	중하층	1,011	34.53
	중간층	1,526	50.28
	중상층	201	6.49
	상층	9	0.2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96	9.70
	고졸	1,031	34.18
	대졸 이상	1,582	56.12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088	38.86
	임시,일용,특고	416	14.52
	고용주,자영자	711	20.47
	무급가족종사자	66	1.40
	실업자	94	3.23
	비경제활동인구	634	21.53

주: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개인 모수 가중치 적용 후 수치임.

## 나. 주요 조사 내용

조사 내용은 지속 문항을 일부 보완하고 신규 문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조사표는 A. 가구 구성 및 응답자 일반사항, B. 주관적 웰빙, C. 사회,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태도, D. 사회 참여, E. 복지에 대한 태도, F. 가구의 경제상태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태조사의 조사 내용은 다음 〈표 1-5〉와 같다.

## 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XII): 사회 인식 변화의 다차원성

〈표 1-5〉 실태조사 조사 내용

조사표 영역	조사 내용
A. 일반적 특성	성별 / 나이 / 가구원 수(노인 수, 장애인 수, 만성질환자 수, 아동 수, 실업자 수) / 가구주와 관계 / 교육수준 / 혼인상태
	현재 경제활동 / 경제활동 참여 상태/ 고용형태
	사회보험 가입 / 일자리를 잃거나 찾는 것에 대한 걱정(25 신규)
B. 주관적 웰빙	어제 행복 / 어제 걱정(25 신규) / 어제 우울 / 삶의 만족도 / 유다이모니아 / 삶에 대한 평가
	사회적 지지 / 주관적 소득계층 / 재정 상황 만족도(25 신규) / 지난 10년 가구 생활수준
	우리 사회 노력에 따른 경제적 지위 높아질 가능성 / 자식세대 변화 가능성 /
C. 사회,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태도	우리 사회 신뢰 / 기관 신뢰(일부 하위 문항 '25 신규) / 사회구성원 신뢰
	한국 사회 소득격차 큼, 정부책임 등 동의 정도
	우리나라 갈등 정도 / 집단 간 갈등 / 성향이나 특성이 다른 사람과 함께 활동할 의향(일부 하위 문항 '25 신규)
	차별과 소외의 경험(25 보완) / 혐오 문제에 대한 인식과 경험(25 신규)
	이주민에 대한 태도/ 국가 자부심 /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공통의 비전에 대한 인식(25 신규)
	사회 변화 방법에 대한 인식(25 신규) / 사회통합 정도 인식 /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일부 하위 문항 '25 신규) / 성공을 위한 조건(25 신규)
D. 사회참여	자원봉사자 기부 정도 / 최근 선거 투표 참여 경험 / 정치에의 관심 정도(25 신규) /
	정치 관련 뉴스·콘텐츠 소비 정도 및 활용 미디어(25 신규) / 정치적, 이익과 의견에 대한 대표(25 신규) / 정치적 효능감(25 신규) / 이념적 성향 /
	자유-평등 가치 지향(25 신규) / 법에 대한 인식과 태도(25 신규) /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과 태도(25 신규)
E. 복지에 대한 태도	개인-공동체 가치 지향(25 신규) /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 증세에 대한 태도/ 증세 방안 (25 신규)
F. 가구의 경제상태	재산과 부채 규모/ 주택유형, 점유형태/ 지난 3개월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

주: 필자 작성

### 1) 가구 구성 및 응답자 일반사항

A. 가구 구성 및 응답자 일반사항에서는 가구원 수,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아동 수, 실업자 수,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직업, 고용 형태를 조사한다. 2025년에는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걱정 정도를 추가로 조사했다.

## 2) 주관적 웰빙

B.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는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걱정/우울), 유다이모니아, 삶에 대한 평가, 사회적 지지, 주관적 계층, 재정 상황에 대한 만족도, 지난 10년간의 생활수준 변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 세대 간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다. 이 중 2025년 추가된 삶에 대한 평가와 걱정 정도, 재정 상황 만족도 문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삶에 대한 평가

삶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인 삶을 평가하는 단문항과 삶의 특정 측면(예: 직업)들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설계될 수도 있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설계해 볼 수도 있다. 여기서는 현재의 삶에 대한 평가와 5년 뒤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캔트릴 사다리를 통해 응답하도록 했다. 삶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평가에 대한 조사는 현재의 주관적 웰빙뿐 아니라 시간적 차원, 즉 미래에 대한 긍정 혹은 희망을 살펴볼 수 있게끔 한다는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Ward et al., 2021).

OECD(2013)는 이 척도를 활용하여 현재에 대한 평가가 7점 이상, 미래에 대한 평가가 8점 이상인 경우를 번영(thriving)으로, 현재와 미래에 대한 평가 모두가 4점 이하인 경우를 고통(suffering)으로, 나머지는 분투(struggling)로 구분하고 유럽연합 국가들의 범주별 응답 비율을 분석하여 제시하기도 했다.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구분을 시도하고자 한다.

### ② 걱정 정도

주관적 웰빙에 포함되는 걱정 정도는 정서에 해당하며, 정서는 행복, 평온함 등과 같은 긍정정서와 걱정, 우울, 고통(pain)과 같은 부정정서로 구분된다. 참고로, 정서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정신건강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험을 통해 평가된다(OECD, 2025). 2025년에는 주관적 웰빙의 다차원성을 염두에 두고 어제의 걱정 정도를 신규 문항으로 포함했다.

### ③ 재정 상황 만족도

2025년 조사에서는 재정 상황에 대한 만족도 문항을 포함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소득 불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최근에는 자산 불평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여기서는 다음 문항을 통해 재정 상황 만족도를 측정했다.

[그림 1-1] 재정 상황 만족도 문항

문) 귀하는 현재의 재정 상황에 얼마나 만족하거나 불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①	②	③	④	⑤

## 3) 사회,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태도

C. 사회,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태도 영역에는 비교적 다양한 조사 내용들이 포함됐다. 사회 신뢰, 기관 신뢰, 대인 신뢰,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 갈등 인식, 혐오 문제, 이주민에 대한 태도,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한 요소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기관 신뢰와 정치, 종교, 소득수준, 교육수준, 인종이 다른 사람과의 교류에 대한 태도,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기관 신뢰도

기관 신뢰도는 2014년, 2019년, 2021년, 2023년, 2024년 13개 기관-1) 대기업, 2) 종교계, 3) 교육계, 4) 노동조합, 5) 언론계, 6) 의료계, 7) 행정부(청와대, 중앙정부, 지자체), 8) 입법부(국회), 9) 사법부(법원), 10) 군대, 11) 금융기관, 12) 시민운동단체, 13) 검찰, 경찰-에 대해 ‘매우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모르겠다’로 응답하도록 조사되어 왔다.

2025년에는 행정부를 세분하여 행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실로 구분하였고,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어 사법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으로 구분했다. 기존 검찰과 경찰 또한 검찰과 경찰 각각에 대한 신뢰도를 물었다. 또한 최근 디지털 전환

논의를 염두에 두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응답하도록 했다. 즉, 2025년에는 총 18개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다.

[그림 1-2] 기관 신뢰도 문항

문) 귀하는 다음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매우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1) 대기업	①	②	③	④
2) 종교계	①	②	③	④
3) 교육계	①	②	③	④
4) 노동조합	①	②	③	④
5) 언론계(신문사, TV 방송국 등)	①	②	③	④
6) 의료계	①	②	③	④
7) 행정부(중앙부처)	①	②	③	④
8) 입법부(국회)	①	②	③	④
9) 헌법재판소	①	②	③	④
10) 법원	①	②	③	④
11) 군대	①	②	③	④
12) 금융기관	①	②	③	④
13) 시민운동단체	①	②	③	④
14) 검찰	①	②	③	④
15) 경찰	①	②	③	④
16)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일반)	①	②	③	④
17) 대통령실	①	②	③	④
18) 빅테크 기업(예: 구글, 네이버)	①	②	③	④

## ② 정치, 종교, 소득수준, 교육수준, 인종이 다른 사람과의 교류

2023년과 2024년 정치성향이 다른 사람과 식사 또는 술자리, 연애 및 결혼,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함께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2025년에는 종교, 소득수준, 교육수준, 인종이 다른 사람과의 교류로 그 범주를 확대했으며, 취미·봉사 활동을 함께 할 의향이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했다.

[그림 1-3] 정치, 종교, 소득수준, 교육수준, 인종이 다른 사람과의 교류 의향 문항

문) 귀하는 다음의 성향이나 특성이 다른 사람과 함께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1) 정치 성향	이 다른 친구 및 지인과의 식사 또는 술자리	①	②
	이 다른 이와와의 연애 및 결혼	①	②
	이 다른 이와 취미·봉사 활동	①	②
	이 다른 이와 시민·사회단체 활동	①	②
2) 종교	가 다른 친구 및 지인과의 식사 또는 술자리	①	②
	가 다른 이와와의 연애 및 결혼	①	②
	가 다른 이와 취미·봉사 활동	①	②
	가 다른 이와 시민·사회단체 활동	①	②
3) 소득수준	이 다른 친구 및 지인과의 식사 또는 술자리	①	②
	이 다른 이와와의 연애 및 결혼	①	②
	이 다른 이와 취미·봉사 활동	①	②
	이 다른 이와 시민·사회단체 활동	①	②
4) 교육수준	이 다른 친구 및 지인과의 식사 또는 술자리	①	②
	이 다른 이와와의 연애 및 결혼	①	②
	이 다른 이와 취미·봉사 활동	①	②
	이 다른 이와 시민·사회단체 활동	①	②
5) 인종	이 다른 친구 및 지인과의 식사 또는 술자리	①	②
	이 다른 이와와의 연애 및 결혼	①	②
	이 다른 이와 취미·봉사 활동	①	②
	이 다른 이와 시민·사회단체 활동	①	②

### ③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은 지속 문항에 해당하며, ‘귀하는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1)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 2)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 등에 대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조금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을 조사하는 문항은 2016년 19개 항목에 대한 의견이 조사됐으며, 2019년 ‘사회 고위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조사했다. 2025년에는 여기에 더해 ‘정치적 이념이 다른 사람을 용인(인정, 수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의 정도를 질문했다.

#### 4) 사회 참여

D. 사회 참여 영역에는 지난 1년간의 자원봉사, 기부, 투표 참여, 정치에의 관심 정도, 정치 효능감,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했다. 이 중, 시민 참여, 투표 참여, 정치 성향,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자원봉사, 기부, 정치집회, 모임 및 시위 참여

시민 참여는 자원봉사, 기부, 정치집회 모임 및 시위 세 가지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참여했는지 여부와 지난 1년 동안은 아니지만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했다.

##### ② 투표 참여

2025년에 조사한 투표 참여는 1)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2) 2022년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 3)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4)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투표권이 없었음’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 ③ 정치 성향

정치 성향은 ‘매우 보수적’, ‘대체로 보수적’, ‘중도적’, ‘대체로 진보적’, ‘매우 진보적’으로 구성된 응답 범주에 대해 주관적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 ④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민주주의와 관련한 문항은 다음 문항 이외에도 정치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민주적 통치 정도에 대한 생각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민주주의와 관련한 문항 중 통치 방법에 대한 선호를 질문하는 문항이다.

[그림 1-4]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문항

문) 다음 두 가지 통치 방법 중 어느 쪽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선거를 개입치 않는 강한 지도자					보통					민주적 정치 시스템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복지에 대한 태도

E. 복지에 대한 태도 영역에서는 개인주의-공동체주의 가치 지향, 복지 수준에 대한 태도, 증세에 대한 태도, 증세 방안에 대해 조사했다.

① 개인주의-공동체주의 가치 지향

가치 지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귀하는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문항은 2025년에 신규 포함된 문항이다.

② 복지 수준에 대한 태도

복지 수준에 대한 태도는 현재 수준과 비교하여 축소할 필요가 있는지, 적당한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했다.

[그림 1-5] 복지 수준에 대한 태도 문항

문) 귀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수준보다 축소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 수준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
- ②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
- ③ 현재 수준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 ③ 증세에 대한 태도, 증세 방안

증세에 대한 태도는 ‘귀하는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동의 정도를 0~10점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증세 방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소비세, 기업의 법인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증여세, 사회보장세 신설, 탄소세 신설에 대한 동의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했다.

[그림 1-6] 증세 방안 문항

문) 귀하는 다음의 증세 방안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높인다	①	②	③	④
2) 소비세(부가가치세)를 높인다	①	②	③	④
3) 기업의 법인세를 높인다	①	②	③	④
4)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높인다	①	②	③	④
5) 상속세/증여세를 높인다	①	②	③	④
6) 사회보험료를 대체하는 사회보장세를 신설한다	①	②	③	④
7) 탄소세를 신설한다	①	②	③	④

## 6) 가구의 경제 상태

가구의 경제 상태는 재산과 부채, 가구소득, 지난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소득, 거주하고 있는 집의 유형 및 점유 형태를 조사했다.

### 3. 조사 분석 결과 해석의 유의 사항

첫째, 올해 연구에서는 2025년을 포함하여 연도별 조사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했다. 단, 앞서 언급했듯 2020년은 코로나19로 19~59세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여 연도별 비교에서 일괄 제외하였다.

둘째, 앞서 언급했듯 2024년부터 기존 4,000명 조사에서 3,000명으로 목표 표본

규모가 축소되었다. 상대표준오차가 크게 변동하지 않아 조사 결과를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나 표본 규모 자체가 축소됐다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 분석과 통계 모형에서는 개인 모수 가중치를 적용했다. 사례 수는 가중치 적용 전, 비율은 가중치 적용 후 수치를 제시했다.

넷째, 인식을 살펴볼 때는 조사 전후의 주요 정치, 경제, 사회적 사건을 염두에 둘 필요도 있다. 인과를 직접적으로 연결 지어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으나 조사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복기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에 <표 1-6>에 서는 2014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내외 몇 가지 주요 사건을 정리하였다.

〈표 1-6〉 2014~2025년 국내외 주요 사건과 조사 시점

연도	국내외 주요 사건	조사명,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조사 완료 표본 규모
2014	국내 -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 2014년 7월 7일~8월 20일 19세~75세, 3,648명
2015	국내 - 5월 메르스 유행 및 7월 종식 국제 - 1월 유럽 난민 위기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5년 6월 20일~9월 2일 19세~75세, 4,052명
2016	국내 - 4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12월 18대 대통령 탄핵 표결, 국제 - 6월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11월 미 45대 대통령 선거(도널드 트럼프 당선)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2016년 5월 30일~8월 3일 19세~75세 3,669명
2017	국내 - 5월 제19대 대통령 조기 선거 및 취임, 국제 - 10월 미투운동 확산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7년 5월 31일~8월 31일 19세~75세 3,839명
2018	국내 - 2월 평창 동계올림픽, 4월, 9월 남북정상회담 국제 - 6월 북미정상회담, 3월 미·중 무역 갈등 본격화, 11월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8년 6월 22일~9월 4일 19세~75세, 3,873명
2019	국내 - 8월 공정성 이슈 확산 국제 - 12월 코로나19 발병 보고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2019년 7월 1일~9월 15일 19세~75세, 3,889명
2020	국내 - 1월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국제 - 3월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선언 11월 미 46대 대통령 선거(조 바이든 당선)	(본 연구에서 비교 분석 제외) 사회이동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2020년 8월 1일~8월 31일 20세~59세, 6,000명(온라인 조사)
2021	국내 - 2월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2021년 6월 21일~9월 17일 19세~75세, 3,923명
2022	국내 -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취임	코로나19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2022년 6월 18일~8월 30일 19세~75세, 3,944명
2023	국제 - 5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태 해제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2023년 6월 1일~8월 1일 19세~75세, 3,952명
2024	국내 -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12월 비상계엄(12.3) 및 해제(12.4) 국제 - 11월 미국 대선(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주민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2024년 6월 1일~8월 9일 19세~75세, 3,011명
2025	국내 - 6월 제21대 대통령 조기 선거 및 취임	사회통합 실태조사 2025년 7월 14일~9월 1일 19~75세, 3,00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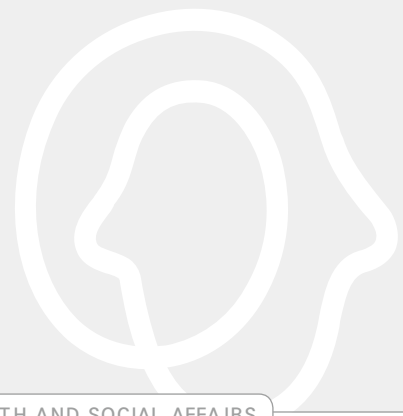
주: 필자 작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2장

### 사회통합 논의의 동향과 개념 검토

제1절 사회통합 논의의 동향 및 쟁점

제2절 사회통합 개념 검토



## 제2장 사회통합 논의의 동향과 개념 검토

### 제1절 사회통합 논의의 동향 및 쟁점

#### 1. 다양성과 포용성

최근의 사회통합 논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것은 다양성의 인정과 포용성의 강화이다. 이는 이주민, 소수자와 같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여러 집단과 다양화되고 있는 삶의 양상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그간 이뤄져 온 사회통합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의 흐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1]). 1897년 Le Bon(1897), Durkheim(1897)의 논의를 포함하여 Festinger et al. (1950)을 지나 Alaluf(1999)에 이르기까지 백여 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사회통합 개념은 개인이 집단과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고 강력한 정서적 유대를 가지며, 잠재적 갈등이 부재한 상태로 정의되어 왔으며, 소속된 상태와 소속감을 강조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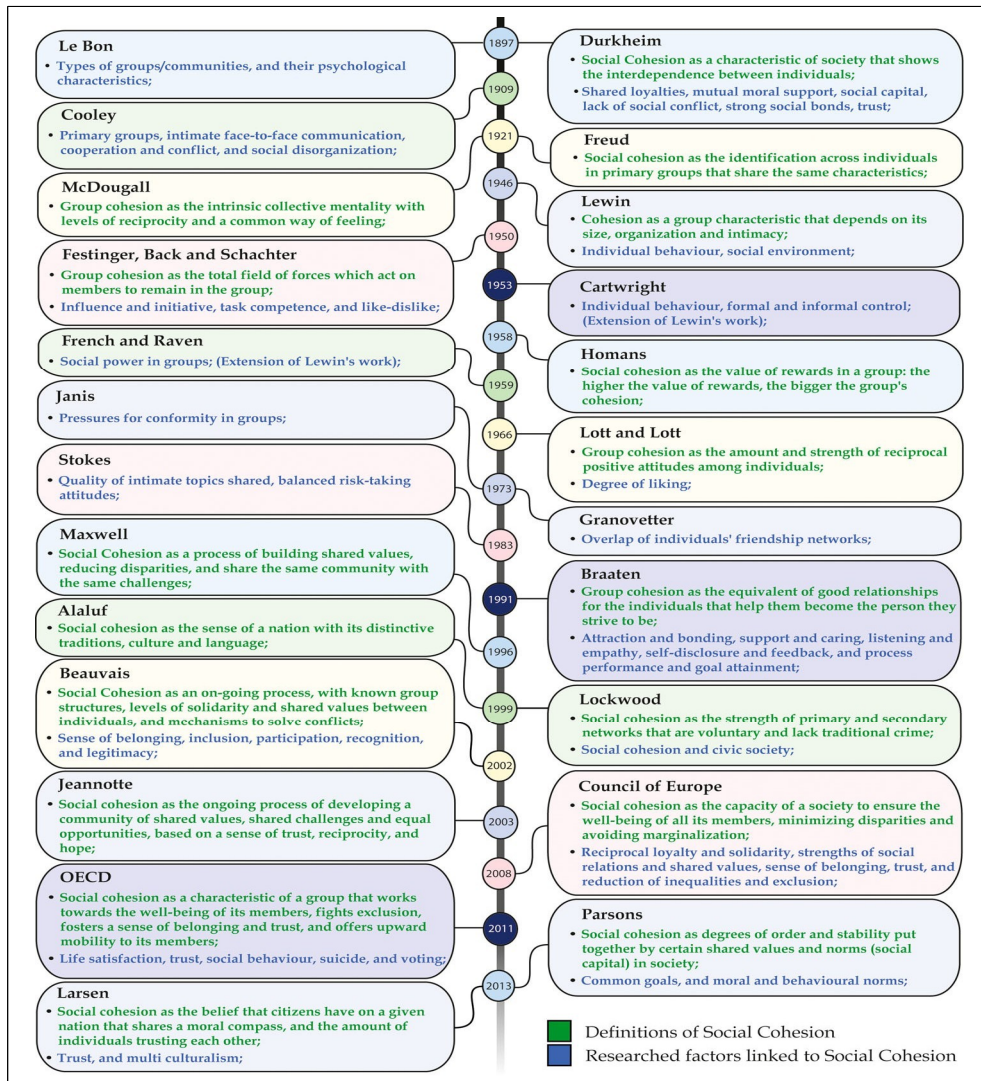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은 보다 열려 있고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이동한다. 이를테면, Jeannotte(2003)는 사회통합을 신뢰, 호혜, 희망을 기반으로 공유된 가치와 도전,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2010년대 들어 사회통합에 대한 관점은 포용성과 사회자본을 강조하고 사회배제를 예방하며, 다문화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한층 더 확대된다. OECD(2011)는 사회통합을 구성원들의 웰빙을 증진하고 배제를 방지하며 소속감과 신뢰를 촉진하고 구성원들이 상향 이동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집단적 특성으로 정의했다. 유럽 의회(Council of Europe, 2008) 또한 사회통합을 위해 구성원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소외를 예방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 외에 Parsons(2013)는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사회자본을, Larsen(2013)은 다문화주의를 언급했다.

이와 같이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는 1897년부터 1999년에 이르기까지는 사회통합

의 정의, 즉 개인의 집단에서의 소속과 통합에 관심을 뒤 왔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구성 요소와 사회통합을 이뤄가는 과정으로 관심이 이동하였다. 끝으로 2010년대에 들어서서는 다양한 집단을 포용하고 사회자본을 축적하며,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가장 넓은 관점으로 이동·논의되고 있다.

[그림 2-1] 사회통합과 관련된 이론적 실증적 연구의 흐름



출처: "Social cohesion revisited: A new definition and how to characterize it," 2019, Fonseca, X., S. Lukosch and F. Brazier. 2019, Innovation: The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32(2), p. 234. <https://doi.org/10.1080/13511610.2018.1497480>

[그림 2-2]는 Fonseca et al. (2019)이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연구자들이 사회통합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연구해 왔는지, 다시 말해 그들이 사회통합과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연구하고 측정했는지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 사회통합 개념은 초기에는 집단의 응집력, 개인과 집단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다뤄져 왔으나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공유된 가치와 규범, 신뢰가 강조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Fonseca et al. (2019)은 그간의 사회통합 개념을 고찰하면서 오늘날의 사회통합 개념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문화에 대한 관용을 포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림 2-2] 시기별 사회통합 연구의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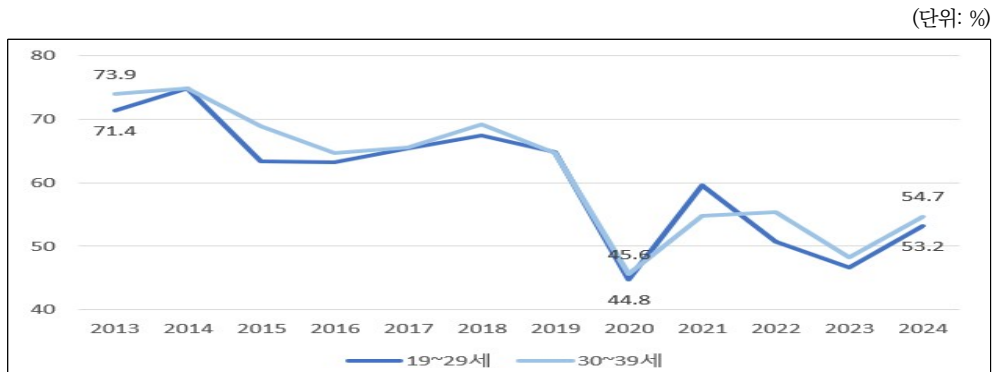
출처: "Social cohesion revisited: A new definition and how to characterize it," 2019, Fonseca, X., S. Lukosch and F. Brazier. 2019, Innovation: The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32(2), p. 237. <https://doi.org/10.1080/13511610.2018.1497480>

## 2. 신뢰의 결핍<sup>4)</sup>

UN이 최근 발간한 2025 세계 사회 보고서(Pawar, 2025)에 따르면 신뢰는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이나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으며, 1930년대 출생자부터 1990년대 출생자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정부 신뢰도가 낮다. 동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신뢰의 하락은 2008 경제·금융 위기,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분쟁의 발발과 관련된 글로벌 위기와 맞물려 있으며, 2008년 고소득 국가에서 하락한 제도에 대한 신뢰는 회복에 10년 이상이 걸렸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신뢰 하락의 흐름은 한국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하는 정도’ 문항을 분석하면([그림 2-3]), 19~29세의 긍정적 신뢰(매우 믿을 수 있다+약간 믿을 수 있다)는 2013년 71.4%에서 2020년 44.8%로 급감했으며, 2024년에는 53.2%, 30~39세의 경우 2013년 73.9%에서 2020년 45.6%로 급감, 2024년 54.7%로 회복했으나 2013년 수준으로는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sup>5)</sup>

[그림 2-3]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하는 정도



주: 그래프의 수치는 ①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약간 믿을 수 있다'와 '매우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13~2024,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6&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6&conn_path=I3)(2025. 10. 1.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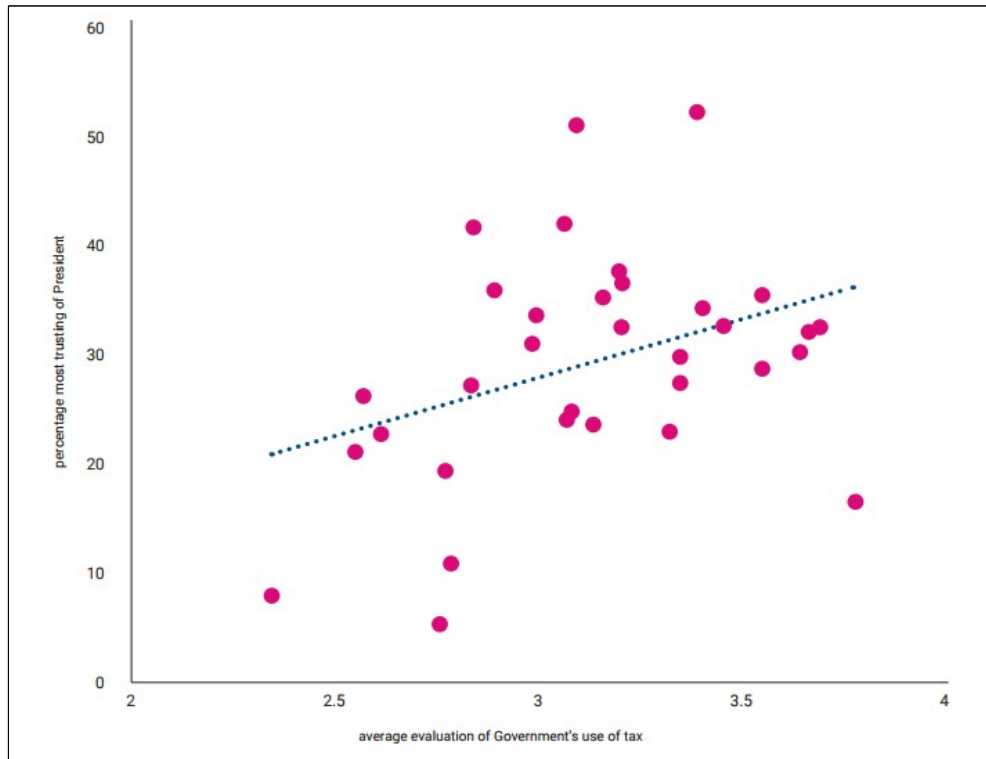
4) Pawar, M. (2025)의 2025년 UN 세계 사회리포트를 포괄 인용하였다.

5)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는 2020년부터 70대 이상을 조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감정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 또한 불신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자신과 유사한 생각을 가지거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감정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경향은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다(Pawar, 2025). Pawar(2025)는 공공지출과 국가 리더십 간의 정적 관계를 다음 [그림 2-4]와 같이 제시했다. [그림 2-4]는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세금이 잘 쓰였다고 생각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과 정부의 노력에 만족하는 곳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그림 2-4] 공공지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국가 리더십에 대한 신뢰

(단위: %)



출처: “World social report 2025: A new policy consensus to accelerate social progress,” Pawar, M., 2025, United Nations, p.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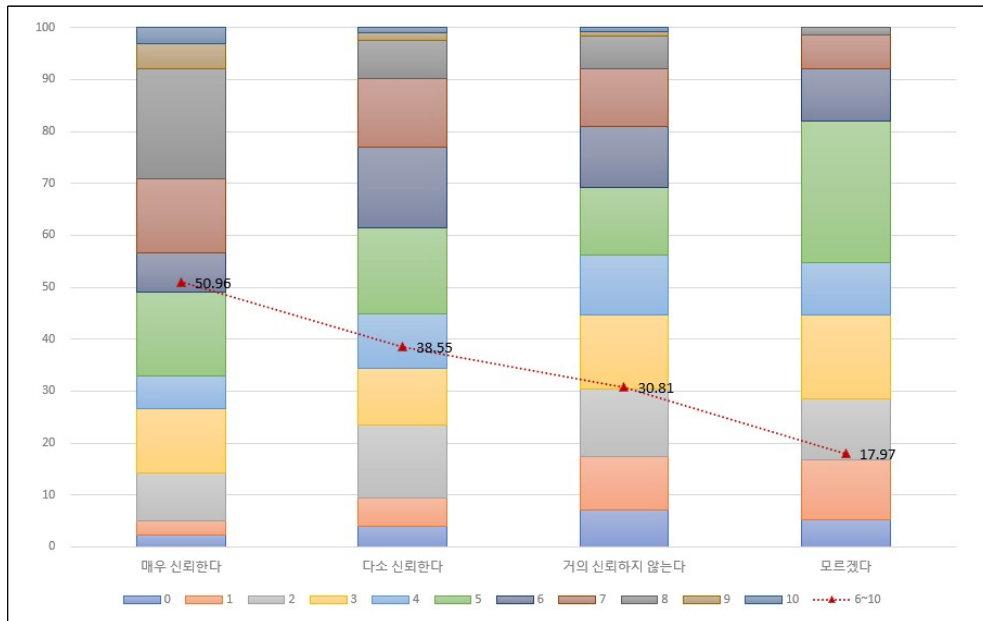
다음 [그림 2-5]는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2025년 실태조사 자료로 이상의 논의를 탐색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가로축은 대통령실에 대한 신뢰 정도를, 세로축은

증세에 대한 태도(0점: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음~10점: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의견에 매우 동의함)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그림 2-4]와 유사하다. 국가 리더십(대통령실)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증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6점~10점)하는 비율은 대통령실에 대해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이 50.96%, ‘다소 신뢰한다’는 응답이 38.55%,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81%였다.

[그림 2-5] 국가 리더십(대통령실)에 대한 신뢰와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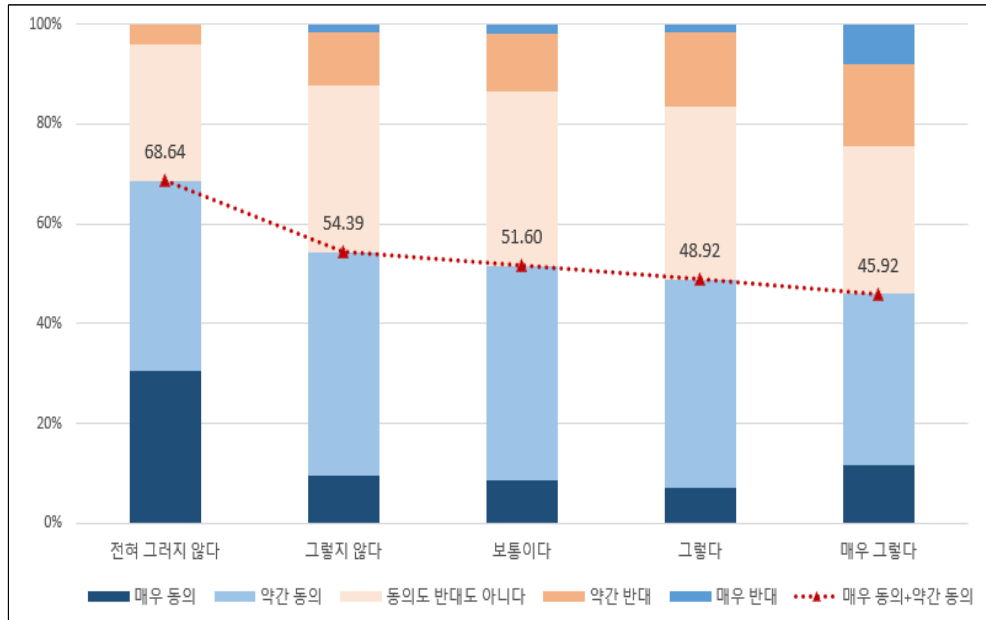
(단위: %)



다음 [그림 2-6]은 포용성(‘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수준별 타인에 대한 신뢰(‘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로 응답)를 교차 분석한 결과이다. 이 역시, 타인에 대한 포용성이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음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2-6] 포용성 수준별 타인에 대한 신뢰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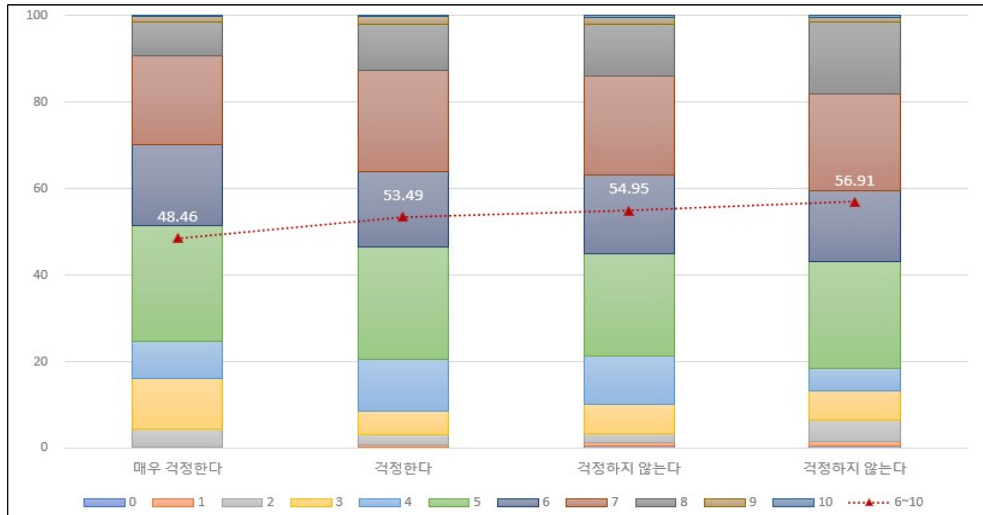


신뢰의 하락은 불안정성과 관련이 높다(Pawar, 2025)고 알려져 있다. 이에 우리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불안정성을 ‘나의 일을 잃는 것 혹은 일자리를 찾는 것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십니까?’로, 신뢰는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인식(0점: 전혀 믿을 수 없다 ~ 10점: 매우 믿을 수 있다)으로 보고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교차 분석했다([그림 2-7]). 분석 결과, 일에 대한 불안정성 인식 수준이 낮은 경우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은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이상의 문헌 검토와 자료 분석 결과는 높은 불안정성은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수준을 낮추고, 낮은 포용성은 불신을 야기하며, 신뢰의 결핍은 사회정책의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는 국제 논의가 한국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7] 일에 대한 불안정성 인식과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와의 관계

(단위: %)



### 3. 정치적 균열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쟁점 중의 하나로 정치적 양극화가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다.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이 논의는 처음에는 소위 사회 엘리트 계층 내부에서의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연구로 시작해서 2010년대부터는 일반대중들 사이의 정치적 양극화(mass polarization), 특히 정당 지지자들 간 이념적으로 반대 성향을 보이는 정당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일컫는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한국에서도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21년도에 실시된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 열명 중 아홉 명이 정당 지지자들 간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선진국 중 미국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Pew Research Center, 2021). 이 조사 시행 다음 해에 치러진 2022년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청년층의 성별에 따른 양극화가 관찰되어서 양극화가 엘리트, 대중 또는 정당 지지자들 수준에서만 아니라 연령 또는 세대별로 성별에 따른 정당과 정책 선호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소위 '이대남 현상'으로 언론에 널리 회자되었던 이 현상은 젊은 유권자들이 성별에 상관없이 진보성향의 정당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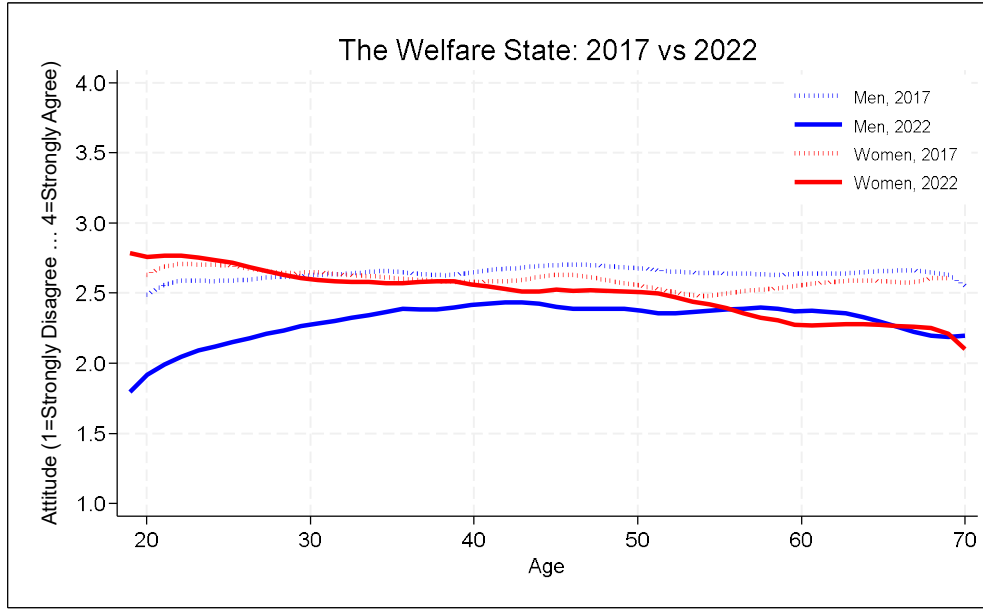
지지했던 이전 선거에서와는 달리 젊은 남성들이 대거 보수당인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반면 젊은 여성들은 여전히 진보성향의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것을 말한다(Lee, 2024). 이와 같이 청년층 내에서 정당 지지패턴의 변화 기류가 보인 것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은 16~29세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약진하여 21%의 지지를 얻은 반면, 같은 연령대 여성 유권자에게서는 14%에 그쳤다(Milosav et al., 2025). 2025년 독일 총선에서도 유사한 격차가 나타났는데,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18~24세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크게 약진하여 27%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젊은 여성의 35%는 급진좌파 정당인 ‘디 링케(Die Linke)’에 투표했다(Jung et al., 2025).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18~29세 남성의 49%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했는데, 이는 2020년 42%보다 높은 것이나, 같은 연령대 여성의 트럼프 지지율은 38%에 그쳐 청년층 정치 성향에서의 성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CNN, 2020; ABC News, 2024).

한국에서도 이와 같이 청년층에서 성별에 따른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유권자 의식을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2017년과 2022년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대통령 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아래에 분석한 모든 문항의 응답은 4점 척도로 1은 매우 반대, 2는 대체로 반대, 3은 대체로 찬성, 4는 매우 반대를 의미한다.

먼저, 복지국가에 대한 선호도의 경우 2017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청년층의 복지국가 선호도에서 성별 격차의 출현이 관측된다. 2017년 문항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였고, 2022년에는 ‘복지보다는 경제발전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로 바뀌었기에 동일한 질문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각 해마다 남녀가 동일한 문항에 응답했기 때문에 동년 내 성차를 확인할 수 있다. 2017년에는 어느 연령대에서도 성별 격차가 관찰되지 않았고, 남녀 모두 태도가 2.5의 중간값을 상회해 ‘복지 확대에 다소 동의’하는 공감대가 있었다. 반면 2022년에는 청년층에서 뚜렷한 성별 격차가 나타나며, 특히 20대 초반에서 남녀 간 약 1점 차로 가장 크게 벌어지고 30대로 갈수록 좁혀지긴 하나 계속 유지된다. 이 시기 젊은 여성은 일관되게 2.5를 상회하여 ‘성장보다 복지를 우선’에 다소 동의하는 반면, 젊은 남성은 2.5 미만에 머문다. 요컨대, 젊은 여성은 복지 선호 성향, 젊은 남성은 성장 선호 성향으로 갈라지며, 연령이 증가하며 성별 격차가 줄어들기는 해도 20대와 30대에는 의미 있는 성별 차이가 지속된다.

[그림 2-8] 복지국가에 대한 선호도: 2017년과 2022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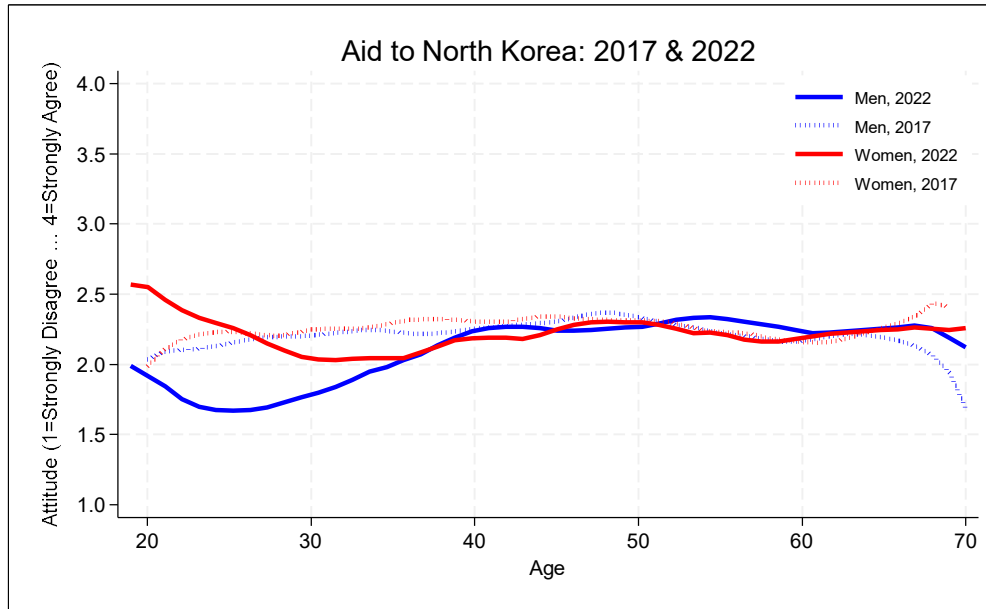


출처: “대통령선거 관련 유권자 의식조사,”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17, 2022,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분석함.

다음으로 대북 지원 선호도를 살펴봤다. 2017년 문항은 ‘북한의 무력도발과 상관없이 민족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 한 많이 해야 한다’였으며, 2022년 문항은 이에서 약간 변형된 ‘상황과 관계없이 대북 지원은 유지되어야 한다’로 두 질문 모두 북한에 대한 어느 정도 무조건적인 지지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일단은 복지국가에 대한 선호도와 유사하게, 대북 지원에 대한 청년층의 태도에서도 2017년에 비해 2022년도에 성별 격차의 출현이 관찰되지만, 그 폭은 더 작다. 2017년에는 60대 중반까지 어느 연령대에서도 성별 격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남녀 모두 점수가 2.5의 중간값 이하에 머물러 전 연령대에 걸쳐 무조건적 지원에 대한 반대를 시사한다. 반면 2022년에는 30대 중반 이하에서만 유의미한 격차가 나타나는데, 이 격차는 20대 초반에서 대략 0.5점 수준으로 가장 낮다. 그렇지만 19~20세 여성 집단을 제외하면 모든 연령에서 남녀 모두 중간값 이하에 머물러, 2022년도 전반적으로 무조건적 지원에 반대하는 여론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2017년과 2022년 모두 한국 유권자들은 대체로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을 선호하지 않았다.

[그림 2-9] 대북 지원 선호도: 2017년과 2022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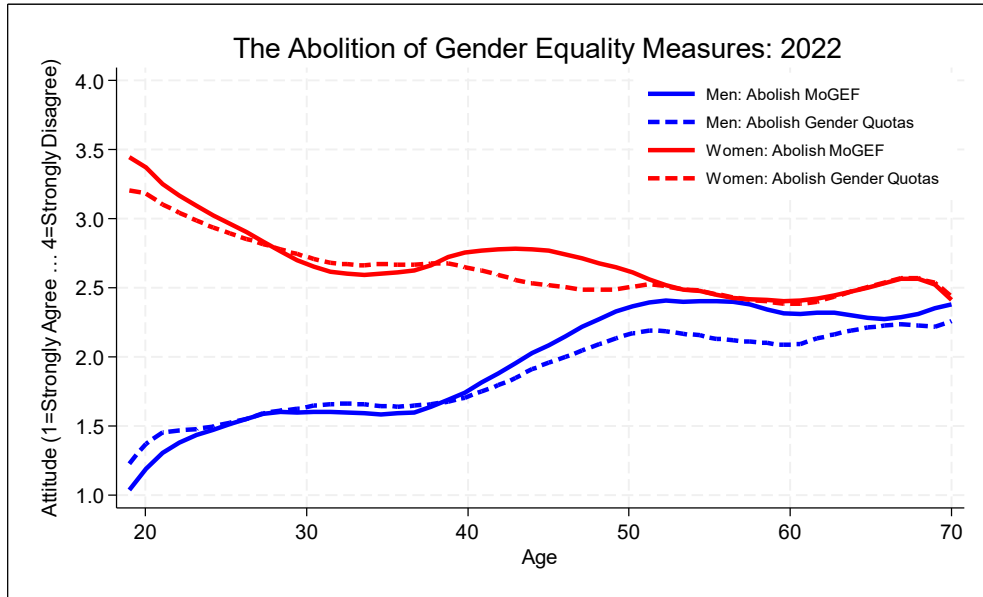
출처: “대통령선거 관련 유권자 의식조사,”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17, 2022,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분석함.

세 번째로 성평등 기구, 성평등 조치 폐지에 대한 의견을 살펴봤다. 이 자체가 2022년에 여성가족부 폐지로 대표되는 젠더갈등에 관련된 정책들이 대선정국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항이었음을 보여준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여성할당제 폐지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했을 때 두 가지 사안에서 거의 동일한 패턴이 관찰된다: 두 경우 모두 가장 젊은 연령대에서의 성별 격차가 크게 두드러진다. 40세 미만 여성은 성평등 조치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인 데 반해, 같은 연령대 남성은 압도적으로 폐지를 선호한다. 성별 격차는 19~20세 유권자에서 가장 크며 2.0점 이상인데, 이는 여성의 점수가 매우 높은 3점을 훨씬 넘는 수준에서 시작하여 폐지에 ‘분명히 반대’하는 데 반해, 남성의 점수는 1에 가까운 수준인 폐지에 ‘강하게 찬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후 연령이 증가해도 격차는 매우 서서히 줄어들며, 대략 50세 전까지 뚜렷한 성별 분화를 유지한다. 50세 이상 유권자는 성평등 조치를 강하게 지지하지도, 격렬하게 반대하지도 않으며, 평균적으로는 약간 폐지 선호 쪽에 기울되 그 정도는 크지 않아 ‘폐지 찬성’과 중립 사이를 오간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현대적 성차별(modern sexism) 성향이 젊은 남성, 특히 30세 미만의 남성들 사이에서 가장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2-10] 성평등 기구/조치 폐지에 대한 인식: 2022년

(단위: 점)



출처: “대통령선거 관련 유권자 의식조사,”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17, 2022,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분석함.

이와 같은 청년층의 정치적 양극화가 앞으로 고착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으로 판명될 것인지는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설령 청년층의 정치적 양극화가 시간이 지나며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2022년 대선은 한국에서도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급속히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지면상의 제약으로 충분히 다루지 못했지만, 이른바 ‘취업 절벽’에 직면한 젊은 세대가 부모 세대가 누렸던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광범위한 박탈감이 존재하는 한, 이는 언제든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잠재적 요인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 제2절 사회통합 개념 검토

### 1. 사회통합의 의미

사회 내의 균열과 사회집단들 사이의 갈등이 두드러질수록 사회통합에 관한 관심은 높아지게 된다. 한국도 최근 민주적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또한 그 사건의 해석을 둘러싼 다양한 주장을 접하면서 사회통합이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분열과 갈등의 위험성을 내포한 사회일수록 통합된 사회를 유지하거나 재건하는 일은 핵심적인 과제로 인식된다.

사회통합이란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 데 반해 그 개념이 명확하고 모두에게 공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sup>6)</sup>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이 사회통합 문제에 주목하게 될수록 그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sup>7)</sup> 개념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가 반복될수록 사회통합 개념에 대한 인식은 더 구체화되고 이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도 분명히 드러난다. 이 절에서는 사회통합 개념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통해 사회통합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이 개념이 갖는 특성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는 조사나 자료를 통해 사회통합의 정도를 측정하거나 사회통합의 다양한 조건들을 검토할 때 사회통합의 범위와 분류, 맥락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사회통합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이 개념을 다소 직관적으로 설명한다. 즉 사회통합이란 사회를 하나로 묶는 풀(glue)로 비유된다(UNECE, 2023, pp. 1~2).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이다. 하지만 사회는 개인들의 단순한 묶음이 아니라 공동의 생활 단위, 즉 공동체이다. 한 사회 안에서 생활하는 개인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생활의 일부분을 서로 의존한다. 이런 의존 관계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동질감과 유대가 형성되며, 그 결과로 생겨나는 응집력(결속력)을 사회통합이라고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다. 결속력이 약하면 사회통합이 약한 것이고, 달리 말해 그런 사회는 통합되지 않은(또는 통합의 정도가 약한) 사회이다.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감정적 연대는 초기 사회학에서부터 언급되었다. 뒤

6) 개념의 모호성과 추상성에 대한 지적은 Angell and de Beer(2022), Moustakas(2023) 등을 참조할 것.

7) Fonseca, Lukosch and Brazier(2019)와 비교적 최근의 논의로는 Aruquaj(2023), UNECE(2023) 등을 참조할 것.

르캄(Durkheim)은 사회통합을 사회 안에서 강한 유대의 존재와 잠재적 갈등의 부재로 정의했다(Durkheim, 1879; Aruqaj, 2023, p. 230에서 재인용). 그 이외에도 사회통합을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유대나 소속감 등의 감정 및 태도로 이해하려는 관점은 매우 다양하다. 사회통합을 개인이 집단과의 소속감을 유지하려는 욕구로 정의하거나(Festinger et al., 1950),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결속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된다.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신뢰(즉, 타인에 대한 신뢰), 다른 사회 구성원 및 사회 집단에 대한 개방적 태도(또는 차이에 대한 인정과 존중), 특정한 지역적, 문화적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했던 차별의 경험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개인의 감정과 인식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다른 사회구성원들이 아닌 사회적 질서, 제도, 기구 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가 사회통합의 정도를 가늠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 나아가 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 주요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참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즉 사회의 통합이란 사회구성원 상호 간에 존재하는 결속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집합적으로 나타나고 유지되고 있는가와도 관련된다.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결속력은 다양한 물질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물질적 조건들은 사회통합의 정도를 표현하기도 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더욱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 핵심적인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모든 구성원에게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지, 핵심적인 자원이 얼마나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 사회구성원의 지위가 얼마나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인지, 즉 사회 내에서 계층적 지위가 얼마나 개방되어 있는지 등이 사회통합의 조건이자 그 표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사회통합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결속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라고 좁게 정의할 수 있으나, 그러한 인식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거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물질적 조건들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다면성과 모호성이 사회통합의 개념적 모호성에 대한 지적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적 변용성이 왜 생겨났는지를 살펴보면 개념의 모호성이 개념의 적용(특히 정책적 적용)에 확장성을 부여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국가기구나 국제기구가 사회통합을 규정할 때는 객관적 조건을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사회통합을 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복지(well-being)를 보장하고 격차를 최소화하며 주변화(marginalization)를 피하는

역량이라고 정의한다. OECD는 사회통합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통합된 사회란 모든 구성원의 복지를 추구하고 배제와 소외에 맞서며, 사회적 상향 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캐나다 정책 연구 네트워크(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s)는 사회통합에 대한 맥스웰(J. Maxwell)의 정의, 즉 사회통합이란 공유 가치와 해석 공동체를 구축하고, 부와 소득의 격차를 줄이며, 사람들이 공동의 사업에 참여하고 공유된 도전에 직면하며,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정의를 인용하면서, 사회통합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Jenson, 1998, p. 3).

이러한 관점에는 격차의 축소, 사회구성원의 참여, 사회 이동성의 확대 등 관측 가능하고, 따라서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들을 사회통합 개념의 중요한 계기로 포함한다는 특징이 있다. 객관적 조건들은 그 변화를 계측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관리에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 2. 사회통합 개념의 특징

사회통합 개념의 첫 번째 특징은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이라 할 수 있다. 즉 사회통합은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UNECE는 다차원성을 다양한 구성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특징짓는다. 사회통합과 관련된 문헌들을 통해 볼 때에도 사회통합의 관심 대상 영역은 다양하게 구성된다. 소속감, 통합, 참여, 인정, 정통성 등의 차원으로 구성되기도 하고(Jenson, 1998), 경제, 정치, 사회의 영역을 크게 구분되기도 하며(Rajulton et. al., 2007), 신뢰, 소속감, 참여 의지(Chan et. al., 2006) 등의 차원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OECD(2011)는 사회적 자본, 사회적 포용, 사회적 이동성을 세 차원으로 구분하기도 했다(UNECE, 2023, pp. 3~4).

그런데 다차원성을 설명하는 논의들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차원의 구분 기준도 다양하다. 예컨대 정치, 경제, 사회라는 차원 구분의 틀로 보면 신뢰나 소속감, 참여 의지 등은 모두 사회의 영역에 해당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이동성이라는 차원이 사회통합의 구성 영역인지 아니면 별개의 개념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sup>8)</sup> 요컨대 다차원성을 설명하는 개념틀 또한 다양한 해석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 개념에 주목하는 문헌들이 다차원성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이 개념의 확장성에 대한 기대와 정책적 적용과 관련된 실용적 요구가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통합 개념의 두 번째 특징으로 지목되는 것은 다층성이다. 사회통합이 다층적 개념(multi-level concept)이라는 것은 그것이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층위에서 정의된다는 점이다. 사회통합은 개인 간의 신뢰 정도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고 개인이 공동체나 공적 기구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에 근거하여 정의되기도 한다. 개인이나 상태와 무관하게 사회적 상태가 사회통합 정의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불평등을 사회통합의 척도로 삼는 경우 사회통합은 개인의 집합체를 전제로, 집계 변수(aggregate variables)를 통해 측정되는 현상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사회통합 개념에 대한 이해가 그 개념을 사용하고 정치적 혹은 정책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회의 특수한 상황이나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UNECD(2023)는 이를 맥락 특수성(context specificity)이라고 지칭하는데, 개념이 사용되는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정의의 일부 내용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혹은 개념의 구성 요소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개인의 삶이 공동체의 규범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집단 간 갈등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집단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지역, 인종, 세대 등) 등은 사회통합의 내용은 물론 그 개념 규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3. 사회통합의 측정과 관련된 문제

사회통합 개념의 추상성과 복잡성이라는 문제는 사회통합의 측정과 지표화라는 기술적 문제에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 사회통합이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 과제가 됨에 따라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해진다. 사회통합이 측정 가능한 지표일 때 그것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일이 가능해지며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배치하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8) Schifer and vad der Noll(2017)은 이러한 이유로 일부 차원의 조정을 주장한다.

이런 이유로 사회통합의 측정을 둘러싼 논의가 각 국가의 통계 작성 당국을 중심으로 이뤄진 바 있고, 국가 간의 사회통합 정도를 비교하고 성취를 촉구하려는 국제기구들도 유사한 노력을 시도한 바 있다. 예컨대 네덜란드 통계청(Statistics Netherlands)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지표 가운데 하나로 사회통합과 불평등을 제시하고, 사회통합을 참여(사회적 접촉, 클럽활동, 자원봉사, 비공식 지원), 주관적 평가(타인에 대한 신뢰, 차별 인식, 가치와 규범 변화, 삶에 대한 자기 통제) 등의 항목으로 평가한다(네덜란드 통계청, 2025.).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삶의 질을 측정하는 영역 가운데 사회통합과 연계라는 범주를 두고 그 안에서 지역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의지할 사람이 있는지 여부, 타인에 대한 신뢰, 자발적 참여,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 외로움, 영역별 활동에 대한 장애 등의 지표를 작성한다(캐나다 통계청, 2025).

OECD는 웰빙을 측정하는 영역 가운데 사회적 연계(Social Connection) 영역을 두고 사회적 지지, 사회적 교류,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등을 국가별로 비교한다. 또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영역에서는 공식적 조직 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 신뢰(타인, 정부 기구 등), 정치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포용성, 부패에 대한 인지도 등의 지표를 채택하고 있다(OECD, 2020).

사회통합을 측정하고 지표화하여 비교하는 데에는 개념의 추상성에서 비롯되는 어려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일부 예에서 지표의 유사성과 차이가 발견되는 이유도 그것이다. 사회통합 지표를 전체 사회경제적 지표체계 하에서 어떻게 위치시키는가도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UN은 각 나라의 통계 당국이 사회통합을 측정할 경우 경계해야 할 몇 가지 지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통합이 갖는 지역적, 시대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가별 비교보다는 개별 국가의 상태 파악에 주목할 것, 사회통합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통합지표를 작성하려는 시도를 경계할 것,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할 것 등이 그것이다(UNCED, 2023, pp. 9~11).

사회통합 개념의 다차원성과 다층성, 그로 인한 측정과 지표화의 어려움은 본 연구의 범위와 구성을 설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양한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회통합의 요소들을 조사와 분석에 포함시켜야 함은 물론 2025년 현재 한국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점을 확인하고 통합과 균열의 정도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 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도별 연구에서 개념 이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4년부터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거나 위협하는 다양한 잠재적 요인들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연구가 주목해 왔던 현상들은 매년 다른 것이었고, 그에 따라 사회통합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직접적 선행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연구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통합과 국민의 행복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했던 김미곤 외(2014)에서는 사회통합을 신뢰, 공정성, 사회 참여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한 바 있다. 반면 여유진 외(2015)는 사회적 이동성을 사회통합의 핵심으로 이해하면서 이동 경로의 개방성과 공정성이 사회통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다. 정해식 외(2016)에서는 사회통합이 단일한 상으로 이해될 수 없음을 전제하면서 사회통합 정책 역시 다원적 경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이후 사회통합 개념의 포괄 범위를 확장하여 불안, 불신, 불만, 트라우마 등 심리적, 사회적 위험 요인을 사회통합 개념과 연관시키거나(정해식 외, 2017), 더 나아가 갈등을 관리하는 역량을 사회통합의 조건으로 간주하고 있다(정해식 외, 2018).

이와 같이 사회적 통합의 영역에는 사회구성원의 행복, 사회적 이동성과 개방성, 사회구성원의 정신적 안녕, 갈등의 축소 등 다양한 영역들이 번갈아 포함되었다. 한국 사회의 통합에 관한 연구들도 개념적 다차원성에 주목하면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영역들의 실태를 측정하고 사회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2020년의 코로나19 충격 이후에는 위기 이후의 사회적 회복력(resilience)을 중심으로 사회통합을 재해석하려는 경향이 새롭게 나타난다.<sup>9)</sup> 이들 연구에서는 팬데믹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집단에 대한 사회적 연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주장한다. 또한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저해하거나 집단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강조하고, 사회적 신뢰를 재구축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인 지원을 강조하였다. 사회통합의 초점을 사회적 포용(inclusion)에 다시 맞추려는 접근

9) 여유진 외(2021), 이태진 외(2022) 참조.

은 취약계층 및 이주민 등의 실태에 주목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다.<sup>10)</sup>

코로나19 충격 이후의 연구는 사회통합이란 주제가 사회적 맥락과 무관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코로나19가 미친 영향과 그로 인한 취약성의 노출은 사회통합이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팬데믹은 전통적으로 취약계층으로 간주되던 집단의 위기를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취약성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집단도 보편화된 위험으로부터 충격을 받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사회통합은 위기로부터 회복의 전제이자 결과로 인식되게 되었고, 사회통합 문제의식은 더 다양한 계층의 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접근하도록 하는 관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사회통합 개념의 맥락 의존성은 2025년 현시점에서도 새로운 문제에 주목할 여지를 열어 둔다.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갈등의 내용과 지점이 무엇인지를 포착하고 균열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유용한 개념적 틀을 제공해 줄 것이다.

---

10) 박윤경 외(2023) 참조.





## 제3장

### 사회통합 인식

제1절 사회통합 관련 주요 지표 분석 및 국제 비교

제2절 사회 인식



## 제3장 사회통합 인식

### 제1절 사회통합 관련 주요 지표 분석 및 국제 비교

#### 1. 사회통합 정도 인식, 국가 자부심, 사회자본(신뢰, 사회적 지지, 사회 참여)

여기서는 사회통합 개념의 특성인 다차원성과 다층성, 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면서, 사회통합의 정도와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사회통합 정도 인식, 국가 자부심, 사회자본(신뢰, 사회적 지지, 사회 참여) 수준을 본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통합 정도 인식과 사회자본 구성 요소로서의 신뢰, 사회적 지지, 사회 참여를 살펴보았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의 통합 정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는 사회통합 문제의 심각성을 진단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신뢰는 사회신뢰, 대인신뢰, 정부신뢰 수준을 검토하였다. 국가 자부심, 개인의 사회이동성, 사회적 지지는 각각 한 문항으로 조사했으며, 자원봉사와 기부는 각각 측정하였다. 자원봉사와 기부는 연도별 응답 보기에 차이가 있어 참여 여부로 재코딩하여 분석했다.

〈표 3-1〉 사회통합 정도 인식, 신뢰, 사회 참여 문항

구분			내용	보기
사회통합 정도 인식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①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⑩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
국가 자부심			귀하는 한국 국민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자랑스럽다~④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역코딩하여 분석
사회 이동성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높다, ②약간 높다, ③약간 낮다, ④매우 낮다, ⑤모르겠다
사회 자본	신뢰	사회 신뢰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믿을 수 없다~⑩매우 믿을 수 있다
		대인 신뢰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①매우 동의한다~⑤매우 반대한다
		정부 신뢰	귀하는 '행정부(청와대,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25년 행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대통령실 구분하여 조사	①매우 신뢰한다~③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역코딩하여 분석
	사회적 지지		귀하는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①전혀 받고 있지 않다~⑩매우 많이 받고 있다
	사회 참여	자원 봉사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 각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셨습니다?  ①지난 1년 동안 3번 이상, ②지난 1년 동안 1~2번, ③지난 1년은 아니지만 해본 적 있음, ④한 번도 해본 적 없음 *경험 여부로 리코딩하여 분석	
		기부		

주: 필자 작성

다음 표는 사회통합 및 사회자본 문항 조사 연도이다. 사회통합 정도 인식은 2016년부터 조사되었다. 사회신뢰와 대인신뢰는 2014년부터 조사되었고, 정부신뢰는 2014년, 2019년, 2021년, 2023년, 2024년 다섯 차례 조사되었으며, 2025년에는 정부를 보다 세분화하여(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실) 조사되었다.

국가 자부심 역시 2014년부터 조사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2017년 한 차례 조사되었다가 2021년 이후 다시 조사되었다. 자원봉사와 기부도 2014년부터 지속 조사되었고, 개인의 사회 이동성 문항은 2015년부터 조사되었다.

〈표 3-2〉 사회통합 정도 인식, 신뢰, 사회 참여 조사 연도

구분			조사 연도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사회통합 정도 인식					○	○	○	○	○	○	○	○	○
국가 자부심			○	○	○	○	○	○	○	○	○	○	○
사회이동성				○	○	○	○	○	○	○	○	○	○
사회 자본	신뢰	사회신뢰	○	○	○	○	○	○	○	○	○	○	○
		대인신뢰	○	○	○	○	○	○	○	○	○	○	○
		정부신뢰	○					○	○		○	○	○
	사회적 지지					○		○	○	○	○	○	
	사회 참여	자원봉사	○	○	○	○	○	○	○	○	○	○	○
		기부	○	○	○	○	○	○	○	○	○	○	○

주: 정부신뢰 문항은 2025년 조사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통령실로 세분하여 조사하였음. 필자 작성

다음은 사회통합 정도 인식, 신뢰, 사회 참여를 분석한 결과이다. 2025년 사회통합 정도 인식과 신뢰(사회, 대인, 정부) 수준은 조사 초반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사회통합 정도 인식은 2016년 4.18점에서 2025년 4.87점으로 상승하였으며, 사회신뢰는 2014년 4.59점에서 2025년 5.70점, 대인신뢰는 각각 2.46점에서 2.54점, 정부신뢰는 1.37점에서 1.66점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2025년 사회통합과 사회신뢰 수준은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인신뢰는 2023년 2.58점보다는 다소 감소하였다. 2025년 정부신뢰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통령실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각각 1.67점, 1.66점, 1.69점으로 정부신뢰 수준이 가장 높았던 2021년 1.5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5년 실태조사의 기관별 신뢰 정도를 매우 신뢰와 다소 신뢰를 합쳐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기업(79.22%), 금융기관(78.45%), 교육계(78.06%), 의료계(77.93%)의 신뢰도가 70% 이상으로 높았고, 검찰(37.11%)과 입법부(36.48%)의 신뢰도는 30%대로 낮은 편이다. 그 외, 대통령실은 58.47%, 헌법재판소 56.18%, 경찰 54.99%였으며 법원은 51.90%, 시민운동단체 51.77%로 나타났다.

5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XII): 사회 인식 변화의 다차원성

〈표 3-3〉 연도별 사회통합 정도 인식, 신뢰, 사회 참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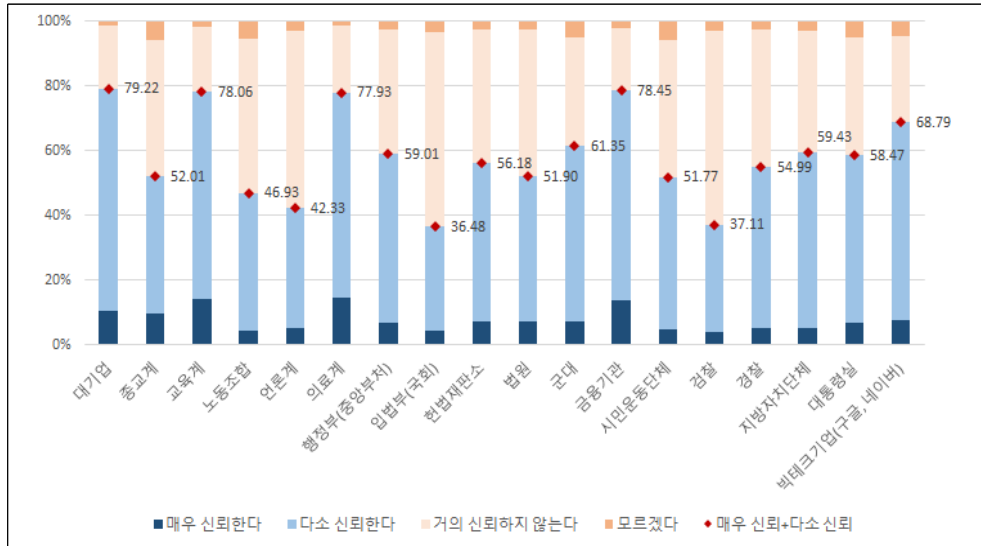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조사 연도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사회통합 정도 인식	10점	-	-	4.18	4.50	4.17	4.17	4.59	4.31	4.20	4.32	4.87
사회신뢰	10점	4.59	4.73	4.73	5.12	4.86	5.00	5.37	5.07	5.27	5.22	5.70
대인신뢰	5점	2.46	2.31	2.49	2.43	2.35	2.30	2.33	2.51	2.58	2.40	2.54
정부신뢰	3점	1.37	-	-	-	-	1.48	1.51	-	1.45	1.42	-
중앙정부 신뢰		-	-	-	-	-	-	-	-	-	-	1.67
지방정부 신뢰		-	-	-	-	-	-	-	-	-	-	1.66
대통령실 신뢰		-	-	-	-	-	-	-	-	-	-	1.69

주: 정부(중앙, 지방, 대통령실)신뢰는 '⑨모르겠다' 응답 제외 후 분석한 수치임.

〔그림 3-1〕 2025년 기관신뢰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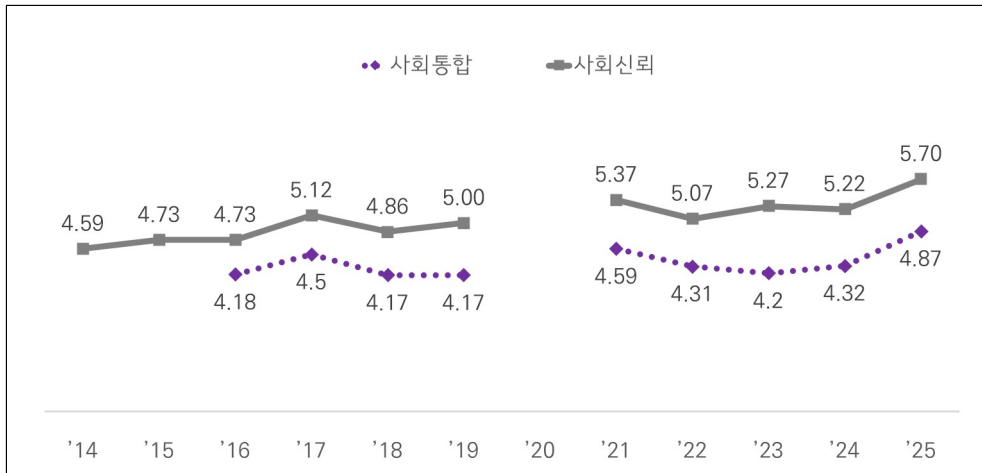
사회통합 정도 인식과 사회 신뢰수준은 사회적 위기 이후 일정 시점에서 일시적 상승세가 관찰된다. 예컨대, 사회통합 정도 인식과 사회신뢰 수준은 2025년 올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2021년에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신뢰 수준은 2014~2025년 중 2014년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2014년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2021년과 2025년은 팬데믹과 대통령 탄핵에 따른 사회적·정치적 위기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림 3-2] 연도별 사회통합 정도 인식, 사회신뢰 수준

(단위: 점)



국가 자부심과 사회적 지지 수준 역시 2025년 각각 3.03점, 6.39점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가 자부심은 2010년대 2.8점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대 들어 2.9점대로 상승하였고, 2025년 올해 3.03점으로 처음 3점을 넘어섰으며, 사회적 지지 수준도 전반적으로 소폭이지만 상승 추세를 보인다. 사회 이동성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꾸준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2.57점으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사회 참여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율은 2014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인다. 2014년 지난 1년간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7.42%이지만, 2025년 14.11%로 감소하였으며, 기부 역시 2014년 33.87%에서 2025년 18.19%로 감소하였다. 특히, 자원봉사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으며,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큰 폭으로 감소한 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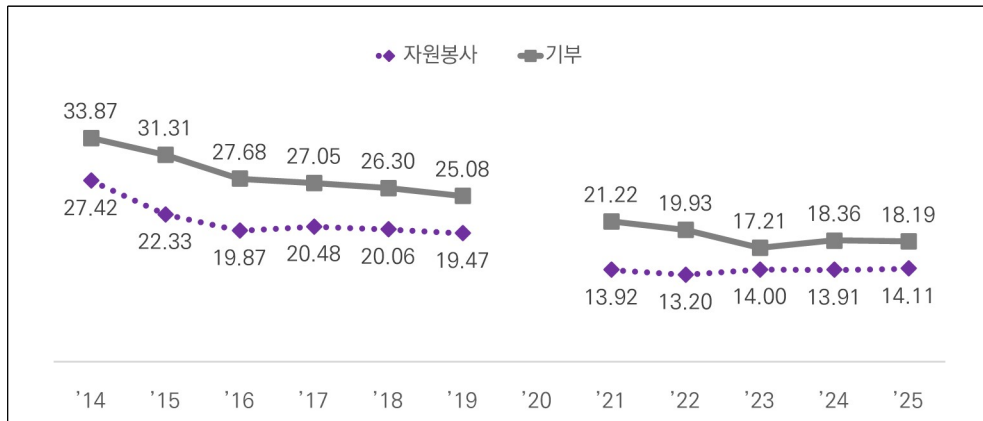
〈표 3-4〉 연도별 국가 자부심, 사회 이동성, 사회적 지지, 사회 참여

(단위: 점, %)

구분		조사 연도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국가 자부심		4점	2.84	2.84	2.82	2.86	2.83	2.88	2.96	2.99	2.97	2.94	3.03
사회 이동성		4점	-	2.60	2.73	2.70	2.76	2.62	2.71	2.70	2.65	2.62	2.57
사회적 지지		10점	-	-	-	5.94	-	-	5.67	5.71	6.08	6.02	6.39
사회 참여	자원 봉사	참여율	27.42	22.33	19.87	20.48	20.06	19.47	13.92	13.20	14.00	13.91	14.11
	기부		33.87	31.31	27.68	27.05	26.30	25.08	21.22	19.93	17.21	18.36	18.19

〔그림 3-3〕 연도별 사회 참여(자원봉사, 기부) 참여율

(단위: %)



코로나19와 자원봉사, 기부와의 관계를 살펴본 대표적인 연구로는 Cnaan et al. (2022)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사람 중 25%가 팬데믹 기간 자원봉사를 중단했고, 팬데믹 기간 기부 행위는 팬데믹 이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을 살펴볼 때는 친사회적 행동은 공식적 친사회적 행동과 비공식적 친사회적 행동으로 구분될 수 있고, 자원봉사의 방식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기부의 경우 기부 참여율과 평균 기부 금액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을 위해 각 항목에 대한 중요성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물한 가지 항목 중 ‘매우 중요하다’를 기준으로 가장 중요도가 높은 세 가지 항목은 15) 노력

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 47.31%, 10) 사회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 41.34%, 17) 좋은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 40.95%로 나타났다.

반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적었던 항목은 6)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이민자,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인정하는 것, 21) 정치적 이념이 다른 사람을 용인(인정, 수용)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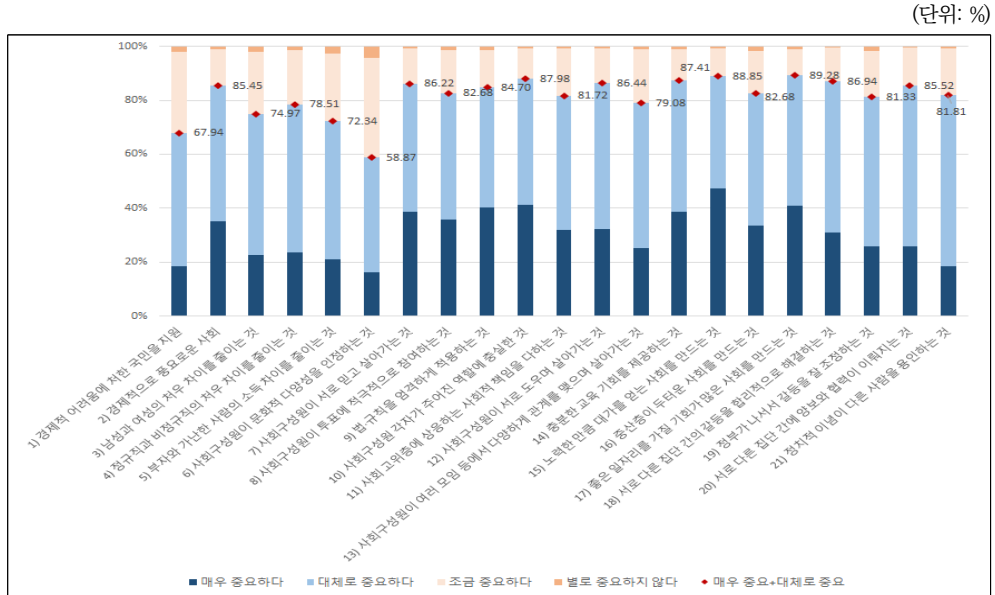
분석 결과는 사회통합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다양성이 강조되어 가는 반면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성 수용의 중요성 인식 수준은 아직 두드러지지 않는 않으며, 향후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3-5〉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한 요소

(단위: %)

구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조금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계
1)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	2.17	29.89	49.42	18.52	100.00
2)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	0.99	13.56	50.26	35.19	100.00
3) 남성과 여성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1.94	23.09	52.41	22.56	100.00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1.41	20.09	54.80	23.71	100.00
5)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2.72	24.94	51.39	20.95	100.00
6)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이민자,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인정하는 것	4.21	36.93	42.79	16.08	100.00
7) 사회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	0.72	13.06	47.62	38.60	100.00
8) 사회구성원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1.37	15.95	47.07	35.61	100.00
9)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1.25	14.04	44.34	40.36	100.00
10) 사회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	0.86	11.16	46.64	41.34	100.00
11) 사회 고위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0.71	17.58	49.93	31.79	100.00
12) 사회구성원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0.80	12.76	54.36	32.08	100.00
13) 사회구성원이 여러 모임 등에서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0.93	19.99	54.01	25.07	100.00
14)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0.93	11.66	48.92	38.49	100.00
15)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	0.75	10.40	41.54	47.31	100.00
16)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드는 것	1.57	15.75	49.30	33.38	100.00
17) 좋은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	1.13	9.59	48.33	40.95	100.00
18)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	0.55	12.51	55.86	31.08	100.00
19)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	1.63	17.05	55.35	25.98	100.00
20)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	0.49	13.99	59.76	25.76	100.00
21) 정치적 이념이 다른 사람을 용인(인정, 수용)하는 것	0.72	17.47	63.30	18.51	100.00

[그림 3-4]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한 요소



## 2.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은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행복), 유다이모니아(일·삶)에 대한 가치, 부정정서(우울)로 살펴보았으며, 4개 문항 모두 11점 척도(0~10점)로 조사되었다.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 일·삶)에 대한 가치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우울은 점수가 낮을수록 우울감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표 3-6〉 주관적 웰빙 문항

구분		내용	보기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귀하는 요즘 전반적으로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⑩매우 만족한다
	긍정정서(행복)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다?	①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⑩매우 행복했다
	유다이모니아(일·삶)에 대한 가치 인식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또는 삶)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가치가 없다~⑩매우 가치 있다
	부정정서(우울)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다?	①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⑩매우 우울했다

주: 필자 작성

주관적 웰빙 문항 중 삶의 만족도와 행복 문항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1년간 조사되었으며, 일(삶)에 대한 가치 문항은 2016년과 2025년 조사되었다. 우울감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9년간 조사되었다.

〈표 3-7〉 주관적 웰빙 조사 연도

구분		조사 연도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	○	○	○	○	○	○	○	○	○	○
	긍정정서 (행복)	○	○	○	○	○	○	○	○	○	○	○
	유다이모니아 (일(삶)에 대한 가치 인식)	○		○								○
	부정정서 (우울감)	○		○	○	○	○	○	○	○	○	○

주: 필자 작성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는 증감의 추세가 유사했으며 증감의 폭은 크지 않았다. 2014년과 2025년을 비교해 보면 삶의 만족도는 6.05점에서 6.63점, 행복은 6.20점에서 7.01점으로 증가했다. 2017년 삶의 만족도는 6.33점, 행복은 6.73점으로 2010년대 최고점을 찍었다가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5년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는 2017년보다도 높은 6.63점, 7.01점으로 나타났다.

3개 연도의 비교가 가능한 일(삶)에 대한 가치 문항 역시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2014년에는 6.43점, 2016년에는 6.57점이었으며, 2025년 6.81점으로 증가하였다. 부정정서를 대표하는 우울 역시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우울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데, 2014년 3.21점에서 2025년 2.73점으로 감소하였다. 코로나19는 감소 추세에 있던 우울 정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2019년 2.71점에서 2021년 2.93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정서와 지속 기간을 염두에 두고 측정하는 정신건강으로서의 우울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 환자가 32.9%, 조울증 환자가 2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와 30대에서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동아일보, 2025.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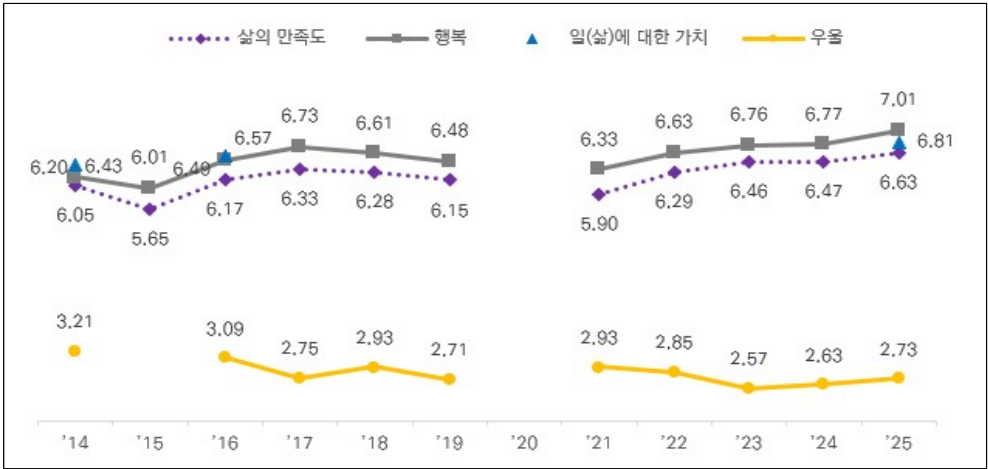
〈표 3-8〉 연도별 주관적 웰빙 수준

(단위: 점)

구분			조사 연도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10점	6.05	5.65	6.17	6.33	6.28	6.15	5.90	6.29	6.46	6.47	6.63
	긍정정서 (행복)	10점	6.20	6.01	6.49	6.73	6.61	6.48	6.33	6.63	6.76	6.77	7.01
	유다이모니아 (일(삶)에 대한 가치 인식)	10점	6.43	-	6.57	-	-	-	-	-	-	-	6.81
	부정정서 (우울)	10점	3.21	-	3.09	2.75	2.93	2.71	2.93	2.85	2.57	2.63	2.73

〔그림 3-5〕 주관적 웰빙 추이

(단위: 점)



### 3. 주요 지표의 국제 비교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일부 문항을 유럽사회조사(ESS, European Social Survey)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요 인식 수준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유럽사회조사는 2021년부터 시작되어 격년으로 비유럽국을 포함하여 40여 개국을 조사하고 있다. 자료의 수집은 Bertelsmann Stiftung, The Comparative Political Data Set, 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 Democracy Barometer, Eurostat, OECD, The United Nations, World Bank, Freedom House, Transparency International 등의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절에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가장 최근 조사 자료로 2023년 중순부터 2024년 초에 조사된 Round 11이며, 유럽 18개국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조사와 비교 가능한 ‘삶의 만족도’, ‘행복’, ‘자원봉사 경험’, ‘정치에 대한 관심’, ‘소득 격차 축소에 대한 정부의 역할’ 수준을 살펴보았으며, 한국의 인식 수준은 2023년과 2025년 두 개 연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삶의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 18개국 중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8.1점)이며,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핀란드가 7.9점으로 다음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유럽국 중 그리스가 6.4점으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포르투갈과 헝가리가 각각 6.5점, 6.6점으로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는 2023년 6.5점, 2025년 6.6점으로 유럽국 중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 포르투갈과 헝가리와 유사한 수준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국가들은 0~10점 중 7~10점 응답자가 85% 이상(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이며, 낮은 국가들은 5~8점 응답자가 67~73%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5~8점 응답자가 2023년 82.9점, 2025년 82.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3-9〉 한국과 유럽 주요국의 삶의 만족도

(단위: 점, %)

국가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합계
스위스	8.1	0.1	0.1	1.1	1.5	1.1	3.8	3.8	12.1	31.9	27.5	17.1	100.0
오스트리아	7.9	0.4	0.1	0.7	1.0	2.0	5.4	5.2	15.2	32.8	25.7	11.5	100.0
네덜란드	7.9	0.6	0.0	0.3	0.2	1.2	3.2	5.7	17.4	40.3	24.1	6.9	100.0
핀란드	7.9	0.3	0.1	0.8	1.7	1.9	5.2	4.5	13.8	33.0	28.7	10.1	100.0
스웨덴	7.8	0.7	0.1	0.7	1.6	2.7	3.3	5.7	16.0	35.1	21.9	12.4	100.0
아이슬란드	7.7	0.5	0.0	1.3	2.6	3.2	4.9	5.7	16.6	31.0	20.8	13.4	100.0
노르웨이	7.7	0.2	0.1	0.8	2.0	2.6	5.8	7.1	16.1	29.4	22.8	13.1	100.0
스페인	7.5	0.8	0.5	1.3	1.9	2.3	7.0	7.9	21.0	29.2	13.9	14.1	100.0
독일	7.5	0.4	0.5	1.4	2.2	3.4	8.5	7.7	14.2	29.4	18.8	13.4	100.0
아일랜드	7.4	0.3	0.1	1.1	1.7	2.6	9.1	10.2	20.2	29.3	15.3	9.9	100.0
폴란드	7.4	0.4	0.5	1.1	2.2	2.7	11.5	8.0	17.5	26.8	12.1	17.3	100.0
벨기에	7.4	0.9	0.1	1.3	1.3	3.5	7.2	6.9	19.5	34.4	17.7	7.2	100.0
영국	7.1	0.9	0.9	1.3	3.3	5.2	10.1	10.3	19.0	24.9	13.9	10.4	100.0
이탈리아	6.7	1.3	0.7	1.8	2.9	5.5	9.7	16.4	25.3	24.8	6.4	5.0	100.0
프랑스	6.7	2.4	1.2	2.7	4.2	4.3	11.3	9.6	18.9	25.4	11.1	8.8	100.0
<b>한국 '25</b>	<b>6.6</b>	<b>0.1</b>	<b>0.3</b>	<b>1.0</b>	<b>2.1</b>	<b>4.1</b>	<b>18.1</b>	<b>16.4</b>	<b>27.1</b>	<b>21.0</b>	<b>7.2</b>	<b>2.6</b>	<b>100.0</b>
헝가리	6.6	1.0	1.2	3.2	4.9	5.0	13.1	12.2	19.7	20.7	9.2	9.6	100.0
포르투갈	6.5	1.7	0.7	2.3	4.4	5.5	16.5	12.2	19.7	21.2	9.3	6.6	100.0
<b>한국 '23</b>	<b>6.5</b>	<b>0.6</b>	<b>0.3</b>	<b>1.3</b>	<b>2.6</b>	<b>3.5</b>	<b>23.8</b>	<b>14.3</b>	<b>23.8</b>	<b>21.0</b>	<b>5.7</b>	<b>3.2</b>	<b>100.0</b>
그리스	6.4	0.3	1.2	2.4	6.2	6.5	11.5	13.6	24.2	24.1	9.5	0.5	100.0

출처: “ESS Round 11,” ESS, 2023, Social inequalities in health, Gender in contemporary Europe, 2025. 08.  
 04. 검색, <https://ess.sikt.no/en/datafile/242aaa39-3bbb-40f5-98bf-bfb1ce53d8ef?tab=1&elems=a2ea0537-870e-40c8-b592-c5a52d794ea7>

삶의 만족도 수준과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행복 수준은 주요 유럽국 중 행복도가 낮은 국가와 유사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2023년 6.8점, 2025년 7.0점으로 나타났다. 앞선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행복도는 2014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유럽국 중 행복 정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8.1점)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핀란드가 8.0점,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노르웨이가 7.9점으로 높다. 이들 국가는 7~10점 사이 분포가 85%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복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는 그리스(6.8점)이며, 그다음은 이탈리아(6.9점), 포르투갈·헝가리(7.2점)가 낮은 수준으로 이들 국가는 5~8점 사이 분포가 65% 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5~8점 사이 응답 분포는 2023년 76.6%, 2025년 77.5%로 나타났다.

〈표 3-10〉 한국과 유럽 주요국의 행복 수준

(단위: 점, %)

국가	평균	0	1	2	3	4	5	6	7	8	9	10	합계
스위스	8.1	0.1	0.1	0.4	1.1	0.9	3.7	3.2	13.9	33.6	27.5	15.5	100.0
핀란드	8.0	0.1	0.1	0.7	1.6	1.9	2.4	3.7	13	34.5	31.2	10.8	100.0
오스트리아	7.9	0.4	0.3	0.5	1.4	1.1	5.6	5.5	16.1	32.3	25.5	11.4	100.0
아이슬란드	7.9	0.1	0	0.6	2.4	2.5	3.7	4.9	15.3	33.9	25.3	11.5	100.0
스페인	7.9	0.3	0.1	0.5	1	1.4	5.2	7.5	19.2	29.6	18.6	16.7	100.0
네덜란드	7.9	0.5	0	0.1	0.3	1.1	2.7	5.1	17.4	42.4	24.1	6.1	100.0
노르웨이	7.9	0	0.1	0.7	1.5	1.5	4.4	6.4	16.7	31	24	13.6	100.0
스웨덴	7.7	0.4	0.4	0.5	1.1	1.9	4.7	8.5	18.4	33.4	21.4	9.4	100.0
벨기에	7.7	0.2	0.1	0.7	1.5	1.6	4.6	6.5	19.5	36.9	20.3	8.1	100.0
아일랜드	7.7	0.1	0.1	0.7	1	2.1	4.8	9.7	18.8	31.4	19.2	12	100.0
독일	7.6	0.1	0.5	1	2.3	1.8	7.2	8.1	15.5	32.6	19.3	11.5	100.0
폴란드	7.6	0.1	0.3	1.1	2	1.9	8	9.4	17.5	27.5	15	17	100.0
영국	7.5	0.8	0.4	1.2	1.6	3.3	6.3	8.7	19.7	28.4	16	13.6	100.0
프랑스	7.4	0.5	0.1	0.4	1.2	2	10.5	8.8	22.4	28.5	15.3	10.2	100.0
헝가리	7.2	0.4	0.4	1.9	2.7	3.3	10	11.8	19.6	23.8	12.6	13.3	100.0
포르투갈	7.2	0.4	0.6	1.2	1.8	2.8	11.8	10.6	20	26.8	13.3	10.7	100.0
<b>한국 '25</b>	<b>7.0</b>	<b>0.0</b>	<b>0.4</b>	<b>0.7</b>	<b>1.8</b>	<b>2.0</b>	<b>16.5</b>	<b>12.6</b>	<b>23.2</b>	<b>25.2</b>	<b>11.4</b>	<b>6.1</b>	<b>100.0</b>
이탈리아	6.9	0.6	0.6	1	2.5	3.6	8.9	17.5	27	25.3	8.4	4.6	100.0
그리스	6.8	0.1	0.6	0.7	2.8	3.7	11.9	14.9	27	28.8	8.7	0.8	100.0
<b>한국 '23</b>	<b>6.8</b>	<b>0.5</b>	<b>0.4</b>	<b>1.4</b>	<b>2.9</b>	<b>2.2</b>	<b>22.3</b>	<b>10.6</b>	<b>20.1</b>	<b>23.6</b>	<b>9.0</b>	<b>6.9</b>	<b>100.0</b>

주: 본 연구에서 수행한 '2025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는 '어제의 행복'을 질문하고, ESS 조사에서는 특정 시점을 언급하지 않고, 조사 시점의 행복을 질문함.

출처: "ESS Round 11," ESS, 2023, Social inequalities in health, Gender in contemporary Europe, 2025. 08. 04. 검색, <https://ess.sikt.no/en/datafile/242aaa39-3bbb-40f5-98bf-bfb1ce53d8ef?tab=1&elems=a2ea0537-870e-40c8-b592-c5a52d794ea7>

다음으로 지난 1년간의 자원봉사 경험을 유럽 주요국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는 2023년 전체 응답자의 14.0%, 2025년 14.1%가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탈리아(14.2%)와 유사한 수준으로 주요 유럽국의 자원봉사 경험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폴란드(11.0%), 포르투갈(9.0%), 그리스(6.8%), 헝가리(5.5%)보다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교 유럽국 중에서 자원봉사 경험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38.8%)이며, 스위스(33.2%), 아이슬란드(31.8%), 네덜란드(31.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앞선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경험은 코로나19 이후 급감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에도 약 20% 수준으로 유럽 주요국과 비교하면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표 3-11〉 한국과 유럽 주요국의 자원봉사 경험률

(단위: %)

국가	지난 1년간 경험 있음	지난 1년간 경험 없음	합계
노르웨이	38.8	61.2	100.0
스위스	33.2	66.8	100.0
아이슬란드	31.8	68.2	100.0
네덜란드	31.2	68.8	100.0
핀란드	29.6	70.4	100.0
벨기에	28.0	72.0	100.0
독일	27.7	72.3	100.0
영국	26.4	73.6	100.0
스웨덴	26.0	74.0	100.0
프랑스	26.0	73.9	100.0
오스트리아	21.3	78.7	100.0
아일랜드	20.8	79.1	100.0
스페인	20.0	80.0	100.0
이탈리아	14.2	85.8	100.0
<b>한국 '25</b>	<b>14.1</b>	<b>85.9</b>	<b>100.0</b>
<b>한국 '23</b>	<b>14.0</b>	<b>86.0</b>	<b>100.0</b>
폴란드	11.0	89.0	100.0
포르투갈	9.0	91.0	100.0
그리스	6.8	93.2	100.0
헝가리	5.5	94.5	100.0

출처: “ESS Round 11,” ESS, 2023, Social inequalities in health, Gender in contemporary Europe, 2025. 08. 05. 검색, <https://ess.sikt.no/en/datafile/242aaa39-3bbb-40f5-98bf-bfb1ce53d8ef?tab=1&elems=9a6bea14-d96e-4102-aa66-2c5d49af63b8>

삶의 만족도나 행복, 자원봉사 경험률, 소득 격차 축소에 대한 정부 역할 인식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정치 관심도는 유럽 주요국과 비교 시 높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5년 우리나라의 정치 관심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폴란드, 영국, 노르웨이의 정치 관심도와 같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2014년과 2016년 정치 관심도도 약 2.3점대로 낮지 않다(〈표 3-20〉 참조).

비교 유럽국 중 정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2.9점)으로 나타났고,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가 2.7점으로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오스트리아, 스위스, 아이슬란드가 2.6점으로 나타났다. 정치에 관심이 있다(약간 관심이 있다+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스웨덴 69.1%, 핀란드 65.7%, 네덜란드 63.1%, 아이슬란드 59.0%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도 50.9%가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12〉 한국과 유럽 주요국의 정치 관심도

(단위: 점, %)

국가	평균	1.전혀 관심이 없다	2.별로 관심이 없다	3.약간 관심이 있다	4.매우 관심이 있다	합계
스웨덴	2.9	5.5	25.4	47.3	21.8	100.0
네덜란드	2.7	10.4	26.5	49.6	13.5	100.0
독일	2.7	7.9	33.0	37.3	21.7	100.0
핀란드	2.7	6.3	28.0	51.2	14.5	100.0
오스트리아	2.6	11.4	34.2	38.5	15.8	100.0
스위스	2.6	12.9	31.6	37.1	18.4	100.0
아이슬란드	2.6	13.3	28.1	42.2	16.4	100.0
<b>한국 '25</b>	<b>2.5</b>	<b>5.1</b>	<b>44.0</b>	<b>44.5</b>	<b>6.4</b>	<b>100.0</b>
폴란드	2.5	13.5	38.1	38.0	10.5	100.0
영국	2.5	22.2	23.9	37.3	16.6	100.0
노르웨이	2.5	8.1	45.2	35.5	11.3	100.0
벨기에	2.4	19.3	37.5	29.9	13.2	100.0
프랑스	2.3	21.7	40.5	23.7	14.2	100.0
아일랜드	2.3	25.2	27.8	33.8	13.1	100.0
포르투갈	2.2	31.9	30.1	25.4	12.6	100.0
헝가리	2.2	26.7	36.4	28.3	8.6	100.0
스페인	2.2	25.6	38.1	22.1	14.1	100.0
이탈리아	2.0	30.8	40.2	26.0	3.0	100.0
그리스	2.0	35.1	32.6	25.5	6.9	100.0

주: 본 연구에서 수행한 '2025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는 '1.전혀 관심이 없다~4.매우 관심이 있다' 4점 척도로 물었으며, ESS에서는 역순으로 물음. 이에 ESS 조사 결과의 역코딩 값의 평균을 비교함.

출처: "ESS Round 11," ESS, 2023, Social inequalities in health, Gender in contemporary Europe. 2025. 08. 05. 검색, <https://ess.sikt.no/en/datafile/242aaa39-3bbb-40f5-98bf-bfb1ce53d8ef?tab=1&elems=b6e9618a-1c1a-4be5-9b1d-e13fea485d0c>

마지막으로 소득 격차 축소에 대한 정부의 역할 인식은 주요 유럽국과 비교 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동의 정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5점 만점에 3.6점(2025년 3.3점)으로 나타났다. 비교 유럽국 중 폴란드가 3.5점으로 동의 정도가 가장 낮고, 네덜란드가 3.6점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이다. 주요 유럽국 중 소득 격차 축소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그리스와 포르투갈(4.3점)이며, 이탈리아, 헝가리, 오스트리아가 4.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OECD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이탈리아(0.319)

와 우리나라(0.324)가 유사하지만, 소득 격차 축소에 대한 동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네덜란드(0.292)와 우리나라는 소득 격차 축소에 대한 동의 정도의 수준이 같지만, 소득불평등 수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OECD, 2022).

〈표 3-13〉 소득 격차 축소에 대한 정부의 역할 인식

(단위: 점, %)

국가	평균	1.매우 반대한다	2.약간 반대한다	3.반대도 동의도 아니다	4.약간 동의한다	5.매우 동의한다	합계
그리스	4.3	0.5	2.8	11.3	33.5	51.9	100.0
포르투갈	4.3	0.4	3.0	7.3	49.2	40.1	100.0
이탈리아	4.1	0.8	4.8	13.8	40.2	40.5	100.0
헝가리	4.1	0.5	4.5	17.0	36.6	41.5	100.0
오스트리아	4.1	1.7	4.7	8.0	50.2	35.4	100.0
아일랜드	3.9	2.4	7.9	13.4	44.9	31.3	100.0
프랑스	3.9	3.4	8.7	16.3	38.1	33.6	100.0
영국	3.8	1.9	9.6	18.3	45.3	25.0	100.0
아이슬란드	3.8	2.2	9.6	20.2	41.6	26.4	100.0
벨기에	3.8	2.8	11.4	17.4	40.6	27.8	100.0
노르웨이	3.8	2.8	8.0	21.5	46.3	21.3	100.0
스페인	3.8	3.3	9.9	18.8	44.8	23.3	100.0
스웨덴	3.7	1.2	8.3	24.6	48.0	18.0	100.0
독일	3.7	2.1	12.1	18.0	47.4	20.4	100.0
스위스	3.7	3.0	12.3	16.4	46.4	21.8	100.0
핀란드	3.7	2.1	12.1	23.9	39.4	22.5	100.0
네덜란드	3.6	2.1	14.9	20.1	43.7	19.3	100.0
<b>한국 '23</b>	<b>3.6</b>	<b>0.9</b>	<b>10.3</b>	<b>32.4</b>	<b>43.1</b>	<b>13.3</b>	<b>100.0</b>
폴란드	3.5	4.7	17.2	19.4	41.9	16.9	100.0
<b>한국 '25</b>	<b>3.3</b>	<b>3.3</b>	<b>16.0</b>	<b>34.0</b>	<b>40.1</b>	<b>6.5</b>	<b>100.0</b>

주: 본 연구에서 수행한 '2025 사회통합 실태조사'와 ESS 조사 모두 '1.매우 동의한다~5.매우 반대한다'로 응답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코딩하여 분석함.

출처: "ESS Round 11," ESS, 2023, Social inequalities in health, Gender in contemporary Europe, 2025. 08. 05. 검색, <https://ess.sikt.no/en/datafile/242aaa39-3bbb-40f5-98bf-bfb1ce53d8ef?tab=1&elems=41329d27-0f86-4b14-805c-5e41e62ca17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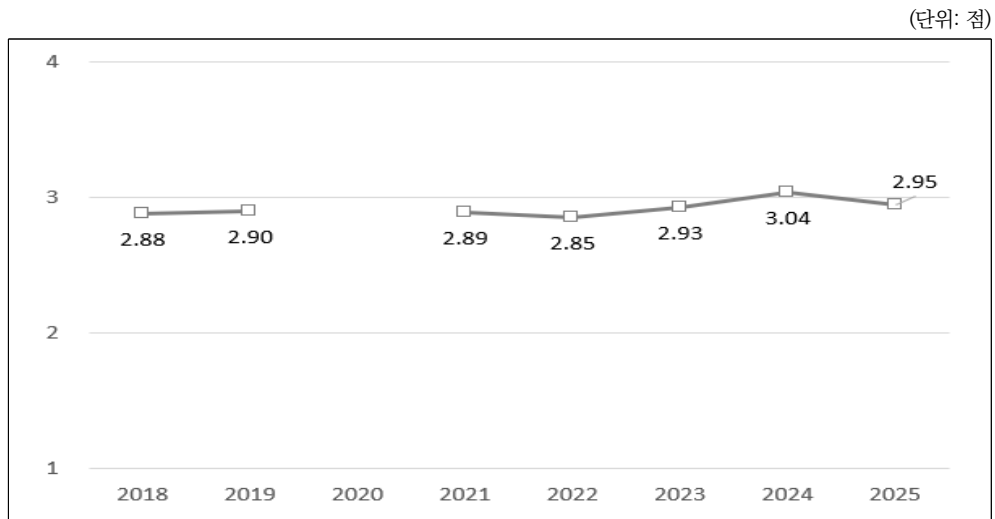
## 제2절 사회 인식

이 절에서는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갈등을 포함하여 주요 사회 인식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 절에서 살펴볼 사회 인식은 사회통합과 밀접한 실업, 구직에 대한 걱정 정도, 재정 상황에 대한 만족도, 정치에 대한 관심,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다양성 등이다.

### 1. 사회갈등

다음은 우리 사회의 갈등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그 결과 2022년부터 2024년은 상승 추세를 보여왔으나 2025년에는 2024년 3.04점 대비 소폭 감소한 2.95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연도별 사회갈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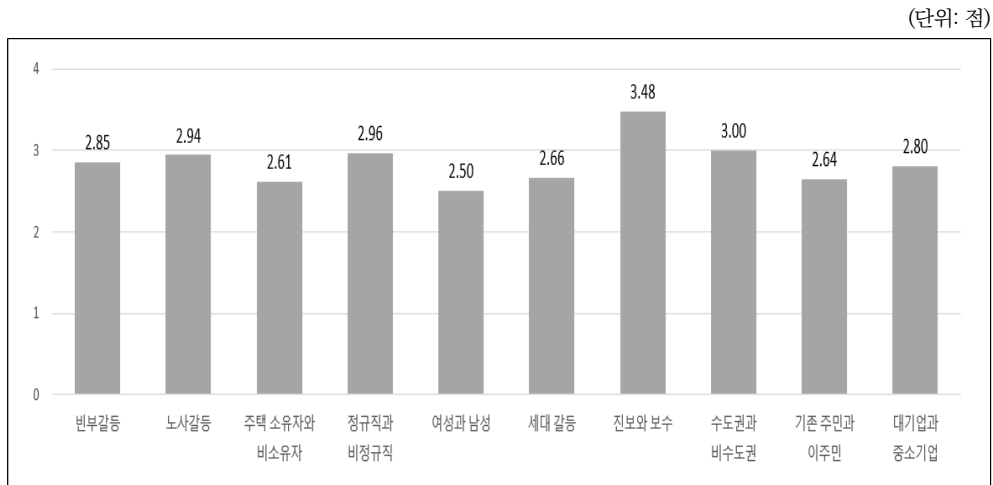
주: 사회갈등도는 매우 심하다(1)~전혀 심하지 않다(4) 4점 척도로 측정함. 역코딩하여 응답에 대한 평균으로 측정함.

2025년 자료로 살펴본 집단별 갈등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가장 심각한 갈등 1위는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3.48점), 2순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3.00점), 3순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2.96점)으로 꼽혔다. 가장 낮은 수준의 갈등은 여성과 남

성(2.50점),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2.61점)로 나타났다.

참고로 2024년에는 진보와 보수(3.52점), 수도권과 비수도권(3.02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3.01점)이 각각 1, 2, 3순위를 차지했으며, 기존 주민과 이주민 갈등(2.65점),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2.60점)이 가장 낮은 갈등으로 꼽혔다.

[그림 3-7] 집단별 갈등에 대한 인식



주: 사회갈등도는 매우 심하다(1)~전혀 심하지 않다(4) 4점 척도로 측정함. 역코딩하여 응답에 대한 평균으로 측정함.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힌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봤다. 전체 평균보다 높은 집단은 성별로는 여성(3.50점), 연령별로는 40~59세(3.51점), 60세 이상(3.50점)이었다.

성과 연령을 교차하여 집단을 구분했을 때는 남성 40~59세(3.50점), 여성 50~59세(3.53점)가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전체(3.48점)에 비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의 경우에는 보수적(3.54점)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전체(3.48점)보다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인식이 높다고 응답했다.

〈표 3-1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인식

(단위: 점, %)

구분		평균	전혀 심하지 않다	별로 심하지 않다	대체로 심하다	매우 심하다	합계
전체		3.48	0.33	8.86	33.02	57.78	100.00
성별	남성	3.47	0.36	9.81	32.46	57.37	100.00
	여성	<b>3.50</b>	0.30	7.89	33.60	58.21	100.00
연령	19~39세	3.43	0.16	9.20	38.11	52.54	100.00
	40~59세	<b>3.51</b>	0.47	8.22	30.64	60.66	100.00
	60세 이상	<b>3.50</b>	0.34	9.42	30.24	60.00	100.00
성×연령	남성 19~39세	3.39	0.00	11.16	38.19	50.65	100.00
	여성 19~39세	3.47	0.36	6.76	38.00	54.88	100.00
	남성 40~59세	<b>3.50</b>	0.58	9.99	28.43	61.00	100.00
	여성 50~59세	<b>3.53</b>	0.37	6.52	32.78	60.33	100.00
	남성 60세 이상	<b>3.53</b>	0.56	7.57	30.41	61.46	100.00
	여성 60세 이상	3.47	0.13	11.12	30.09	58.67	100.00
정치 성향	보수적	<b>3.54</b>	0.44	7.69	29.35	62.52	100.00
	중도적	3.46	0.19	9.48	34.72	55.61	100.00
	진보적	3.48	0.51	8.64	32.76	58.09	100.00

2025년 실태조사 자료 분석 결과, 갈등 유형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집단별 실업, 구직에 대한 걱정 정도와 재정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집단별로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실업, 구직에 대한 걱정 정도는 ‘귀하께서는 나의 일(직업)을 잃는 것 혹은 일자리를 찾는 것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십니까?’에 대해 ‘① 매우 걱정한다, ② 걱정한다, ③ 걱정하지 않는다, ④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로 응답하도록 했다.

실업, 구직에 대한 걱정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매우 걱정한다’와 ‘걱정한다’를 합쳤을 때, 전체(43.68%)와 비교하여, 성별로는 남성(47.06%), 19~39세(47.26%), 40~59세(46.41%)가 실업과 구직에 대한 걱정 정도가 컸다.

성과 연령을 교차했을 때는 전체(43.68%)와 비교하여 남성 40~59세(51.15%)의 실업과 구직에 대한 걱정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다음이 남성 19~39세(47.90%), 여성 19~39세(46.47%)의 순이었다. 경제활동상태에 따라서는 임시, 일용, 특고의 실업과 구직에 대한 걱정 정도(63.04%)가 상용직(36.48%)에 비해 약 두 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실업, 구직에 대한 걱정 정도

(단위: %)

구분		①매우걱정+ ②걱정	①매우 걱정한다	②걱정한다	③걱정하지 않는다	④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합계
전체		43.68	9.27	34.41	41.77	14.55	100.00
성별	남성	<b>47.06</b>	11.53	35.53	37.49	15.46	100.00
	여성	40.20	6.93	33.27	46.20	13.60	100.00
연령	19~39세	<b>47.26</b>	9.87	37.39	39.73	13.01	100.00
	40~59세	<b>46.41</b>	10.21	36.20	40.70	12.88	100.00
	60세 이상	35.05	7.09	27.96	45.96	18.99	100.00
성× 연령	남성 19~39세	<b>47.90</b>	11.31	36.59	36.57	15.53	100.00
	여성 19~39세	<b>46.47</b>	8.08	38.39	43.64	9.89	100.00
	남성 40~59세	<b>51.15</b>	12.12	39.03	36.03	12.82	100.00
	여성 50~59세	41.83	8.36	33.47	45.22	12.94	100.00
	남성 60세 이상	39.44	10.93	28.51	41.09	19.46	100.00
	여성 60세 이상	31.03	3.58	27.45	50.40	18.56	100.00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36.48	5.73	30.75	47.64	15.88	100.00
	임시, 일용, 특고	<b>63.04</b>	14.49	48.55	31.09	5.88	100.00
	고용주, 자영자	<b>45.94</b>	10.31	35.63	40.50	13.56	100.00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41.89	10.81	31.08	39.97	18.14	100.00

재정 상황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귀하는 현재의 재정 상황에 얼마나 만족하거나 불만족하십니까?’에 대해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중에서 21.05%였으며, 남성은 21.50%, 여성은 20.59%였다.

연령별로는 40~59세 22.91%가 재정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과 연령을 교차했을 때는 실업, 구직에 대한 정도와 마찬가지로 남성 40~59세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찰 상태 중에서는 임시, 일용, 특고는 30.63%가 재정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여 이 역시 상용직 14.90%에 비하면 약 두 배가량 높았다.

〈표 3-16〉 재정 상황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④ 불만족 + ⑤매우 불만족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합계
전체		21.05	1.42	27.03	50.50	18.66	2.39	100.00
성별	남성	<b>21.50</b>	1.82	27.43	49.26	18.55	2.95	100.00
	여성	20.59	1.00	26.63	51.79	18.78	1.81	100.00
연령	19~39세	18.75	1.58	26.57	53.10	17.53	1.22	100.00
	40~59세	<b>22.91</b>	1.61	26.49	48.99	19.72	3.19	100.00
	60세 이상	21.11	0.91	28.44	49.54	18.47	2.64	100.00
성× 연령	남성 19~39세	20.38	1.96	25.75	51.91	18.83	1.55	100.00
	여성 19~39세	16.74	1.10	27.59	54.56	15.93	0.81	100.00
	남성 40~59세	<b>24.38</b>	1.89	26.07	47.66	20.28	4.10	100.00
	여성 50~59세	21.50	1.35	26.89	50.27	19.18	2.32	100.00
	남성 60세 이상	18.61	1.51	31.99	47.89	15.44	3.17	100.00
	여성 60세 이상	23.39	0.36	25.19	51.05	21.24	2.15	100.00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14.90	2.02	32.62	50.46	14.08	0.82	100.00
	임시, 일용, 특고	<b>30.63</b>	0.95	22.31	46.10	26.94	3.69	100.00
	고용주, 자영자	22.54	0.72	26.92	49.82	19.50	3.04	100.00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23.69	1.32	21.45	53.53	20.20	3.49	100.00

실업과 구직에 대한 걱정, 재정 상황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결과에 주목하여, 나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해 주는 정당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다소 의외였다. 임시, 일용, 특고 집단에서 이익과 의견을 대변해 주는 정당이 있다는 응답(30.08%)이 전체 21.35%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남성 19~39세와 여성 19~39세는 해당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7.36%와 18.26%로 성과 연령을 교차하여 살펴본 집단 중에서 낮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전체 21.35%에 비해서도 그 차이가 컸다.

정치 성향별 분석 결과도 눈에 띈다. 분석에 따르면 ‘나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해 주는 정당이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정치 성향이 진보적(매우 진보적+진보적)이라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고(40.51%), 그다음은 보수적(매우 보수적+보수적)(20.50%), 중도적(11.61%) 순이었다.

〈표 3-17〉 ‘나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해 주는 정당이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구분		④ 그렇다 + ⑤매우 그렇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합계
전체		21.35	12.14	33.17	33.34	20.16	1.19	100.00
성별	남성	<b>23.72</b>	11.54	33.57	31.17	22.04	1.68	100.00
	여성	18.89	12.77	32.75	35.59	18.21	0.68	100.00
연령	19~39세	17.76	15.81	36.17	30.26	17.19	0.57	100.00
	40~59세	<b>22.11</b>	10.71	32.19	34.99	20.51	1.60	100.00
	60세 이상	<b>24.70</b>	9.72	30.87	34.72	23.36	1.34	100.00
성× 연령	남성 19~39세	17.36	17.14	36.99	28.51	16.93	0.43	100.00
	여성 19~39세	18.26	14.16	35.15	32.43	17.52	0.74	100.00
	남성 40~59세	<b>25.76</b>	9.76	31.79	32.69	23.25	2.51	100.00
	여성 50~59세	18.58	11.62	32.58	37.21	17.86	0.72	100.00
	남성 60세 이상	<b>29.79</b>	6.16	31.36	32.69	27.60	2.19	100.00
	여성 60세 이상	20.03	12.97	30.43	36.57	19.47	0.56	100.00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20.40	12.22	34.59	32.79	18.97	1.43	100.00
	임시, 일용, 특고	<b>30.08</b>	8.64	28.02	33.26	28.30	1.78	100.00
	고용주, 자영자	19.38	10.05	32.42	38.15	18.15	1.23	100.00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9.45	15.60	34.50	30.44	18.98	0.47	100.00
정치 성향	보수적	20.50	15.32	35.66	28.52	19.49	1.01	100.00
	중도적	11.61	13.67	36.57	38.15	11.11	0.50	100.00
	진보적	<b>40.51</b>	6.68	24.70	28.11	37.88	2.63	100.00

## 2. 정치에 대한 관심,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정치에 대한 관심은 4점 척도(1~4점), 정부의 역할 인식 3개 문항은 5점 척도(1~5 점)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역할은 소득 격차 완화, 실업자 및 빈곤층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역할 인식 2개 문항(소득격차 완화, 실업자 지원)은 이전 연도와 비교 및 해석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2014년, 2016년, 2025년 조사되었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3개 문항은 2014년부터 2025년(2020년 제외) 11년간 조사되었다.

〈표 3-18〉 정치에 대한 관심, 정부의 역할 인식 문항

구분		내용	보기
정치에 대한 관심		귀하는 평소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14년, 16년: 남께서는 개인적으로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①전혀 관심이 없다~④매우 관심이 있다 *14년, 16년 역코딩하여 분석
정부 역할	소득격차 완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①매우 동의한다~⑤매우 반대한다 *역코딩하여 분석
	실업자 지원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①매우 동의한다~⑤매우 반대한다 *역코딩하여 분석
	빈곤층 지원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①매우 동의한다~⑤매우 반대한다

주: 필자 작성

〈표 3-19〉 정치 관심도 및 정부의 역할 문항 조사 연도

구분		조사 연도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정치에 대한 관심		○		○								○
정부 역할	소득격차 완화	○	○	○	○	○	○	○	○	○	○	○
	실업자 지원	○	○	○	○	○	○	○	○	○	○	○
	빈곤층 지원	○	○	○	○	○	○	○	○	○	○	○

주: 필자 작성

평소 정치에 대한 관심은 2014년 2.27점, 2016년 2.28점, 2025년 2.52점으로 2020년 들어 약간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해당 문항의 보기는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별로 관심이 없다, ③ 약간 관심이 있다, ④ 매우 관심이 있다’로 주어져 2025년 2.52점 수준은 관심이 ‘없다’와 ‘있다’의 중간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5점 척도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 조사됐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부 역할이 커져야 함을 의미하도록 처리했다.

2025년 정부의 역할에 대한 동의 수준은 5점(매우 동의한다) 만점에 소득 격차 완화는 3.30점, 실업자 지원은 3.23점, 빈곤층 지원은 3.10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빈곤층 지원 2023년 3.09점). 3점은 동의도 반대도 아

년 중립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4점은 약간 동의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연도별 정부 역할에 대한 동의 정도는 감소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의 수준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소득 격차 완화에 대한 동의 정도는 2017년 3.74점으로 가장 높았고, 실업자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는 2014년 3.6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빈곤층 지원에 대한 동의 정도는 2015년 3.33점으로 가장 높았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으로 소득 격차 완화, 실업자 지원, 빈곤층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 것과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는 데 대한 동의는 2014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데 대한 동의는 2023년 3.58점에서 2024년 3.47점, 2025년 3.30점으로 점감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한다.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2025년 3.23점으로 이 또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점수이다.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2025년 3.10점이었으며, 이 또한 2014년 3.31점, 2024년 3.21점과 비교하여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역할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가 2014년 대비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 추세에서도 정부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정도는 5점 척도에서 여전히 3점 이상이라는 점도 언급해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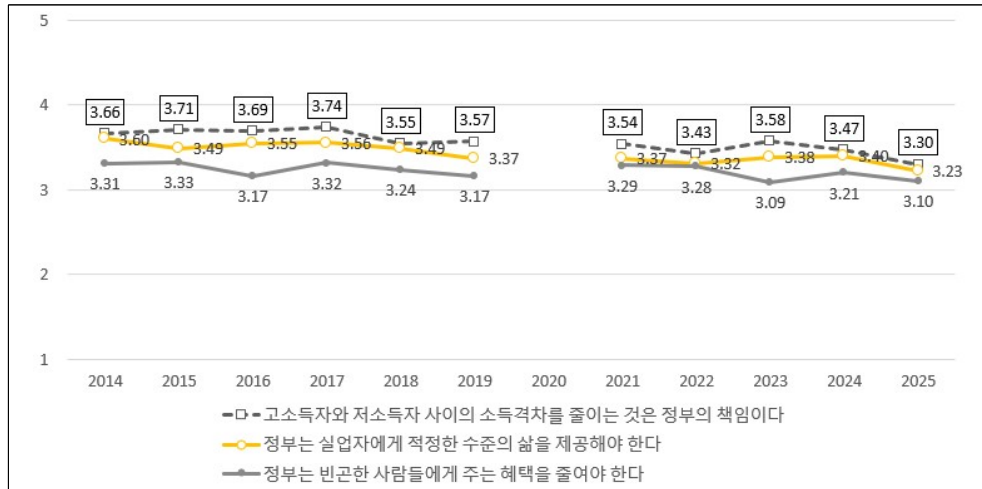
〈표 3-20〉 연도별 정치에 대한 관심,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구분			조사 연도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정치 관심도		4점	2.27	-	2.28	-	-	-	-	-	-	-	2.52
정부 역할	소득격차 완화	5점	3.66	3.71	3.69	3.74	3.55	3.57	3.54	3.43	3.58	3.47	3.30
	실업자 지원	5점	3.60	3.49	3.55	3.56	3.49	3.37	3.37	3.32	3.38	3.40	3.23
	빈곤층 지원	5점	3.31	3.33	3.17	3.32	3.24	3.17	3.29	3.28	3.09	3.21	3.10

[그림 3-8] 연도별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단위: 점)



주: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는 '① 매우 동의~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문항을 1~4점 척도로 역코딩해서 평균을 산출함.

다음 <표 3-21>와 [그림 3-9], [그림 3-10], [그림 3-11]은 2025년의 정부 역할 인식에 대한 응답을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세 가지 모두에 있어 정치 성향별 정부 책임 인식은 뚜렷하다.

보수적이라고 응답했을수록 세 항목 모두 정부 책임이라는 인식이 가장 낮았으며, 중도적, 진보적이라 응답한 경우에 정부 책임이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 외에 뚜렷하게 눈에 띄는 집단은 성과 연령을 교차했을 때 드러난다.

소득 격차 축소가 정부 책임이라는 인식은 남성 60세 이상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다음은 다른 집단과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지만, 남성 40~59세 집단에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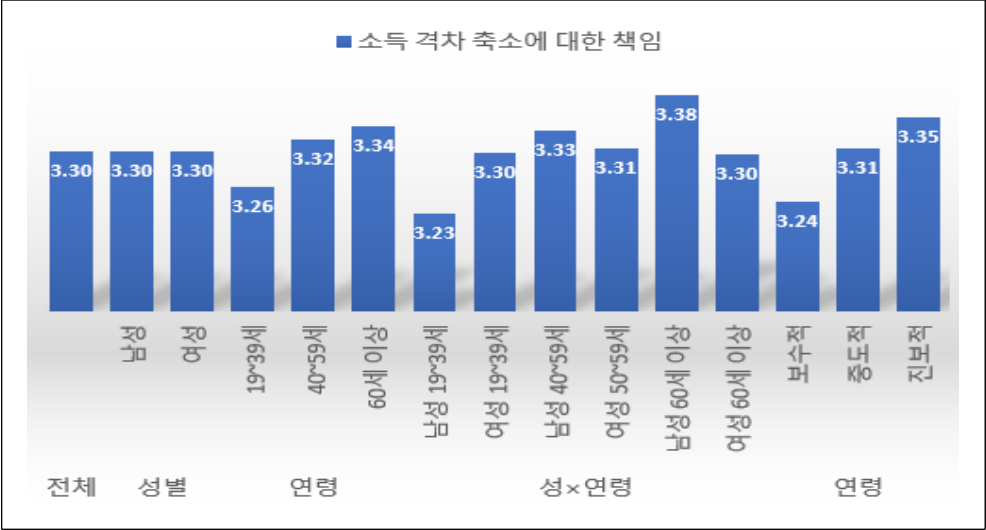
〈표 3-21〉 2025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구분		소득 격차 축소에 대한 책임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할 책임	빈곤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책임
전체		3.30	3.23	3.10
성별	남성	3.30	3.23	3.12
	여성	3.30	3.22	3.09
연령	19~39세	3.26	3.18	3.09
	40~59세	3.32	3.25	3.15
	60세 이상	3.34	3.26	3.05
성×연령	남성 19~39세	3.23	3.16	3.09
	여성 19~39세	3.30	3.20	3.09
	남성 40~59세	3.33	3.27	3.18
	여성 50~59세	3.31	3.22	3.12
	남성 60세 이상	3.38	3.27	3.06
	여성 60세 이상	3.30	3.24	3.04
정치 성향	보수적	3.24	3.16	3.06
	중도적	3.31	3.21	3.10
	진보적	3.35	3.31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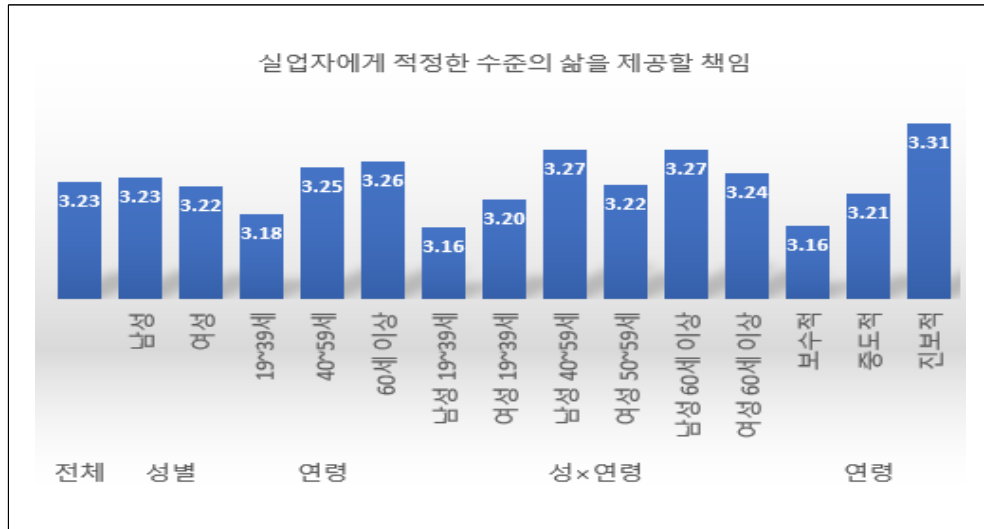
[그림 3-9] 2025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1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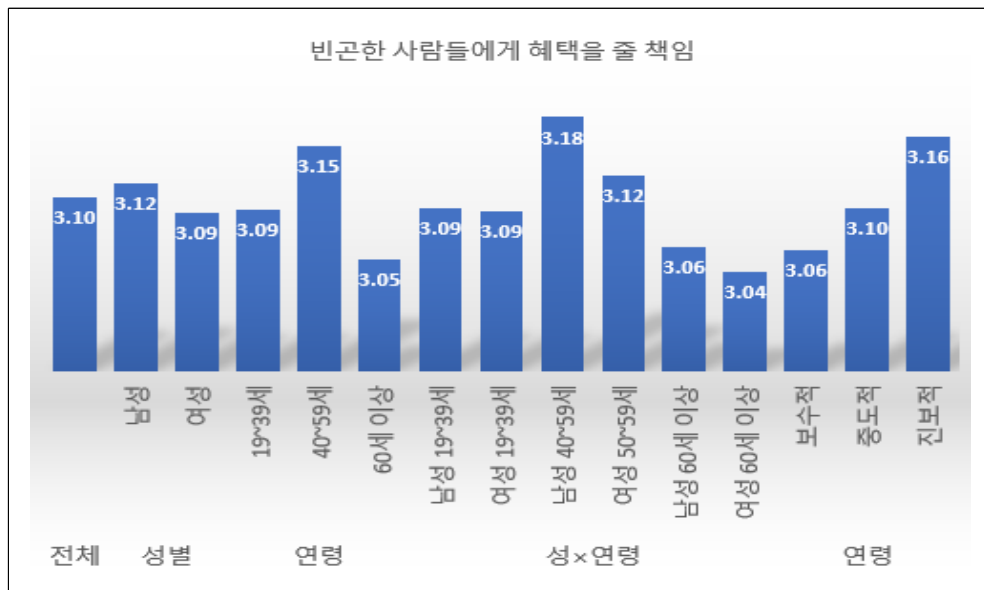
[그림 3-10] 2025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2

(단위: 점)



[그림 3-11] 2025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3

(단위: 점)



### 3. 다양성

현시점은 여러모로 다양성에 대한 수용이 중요한 시기이다. 다음은 다양성의 수용 실태를 여러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 2025년 실태조사 분석 결과이다. 2023년과 2024년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과 1) 식사 또는 술자리, 2) 연애 및 결혼, 3)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함께 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바 있다.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종교, 소득수준, 교육수준, 인종으로 확대하고 함께 하는 활동의 범주를 4) 취미·봉사활동까지 확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림 3-12]를 살펴보면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수준이 다르더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응답은 교제 유형과 관계없이 80%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교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응답은 연애 및 결혼(57.74%)을 제외하면, 나머지 세 가지 활동에서는 70% 이상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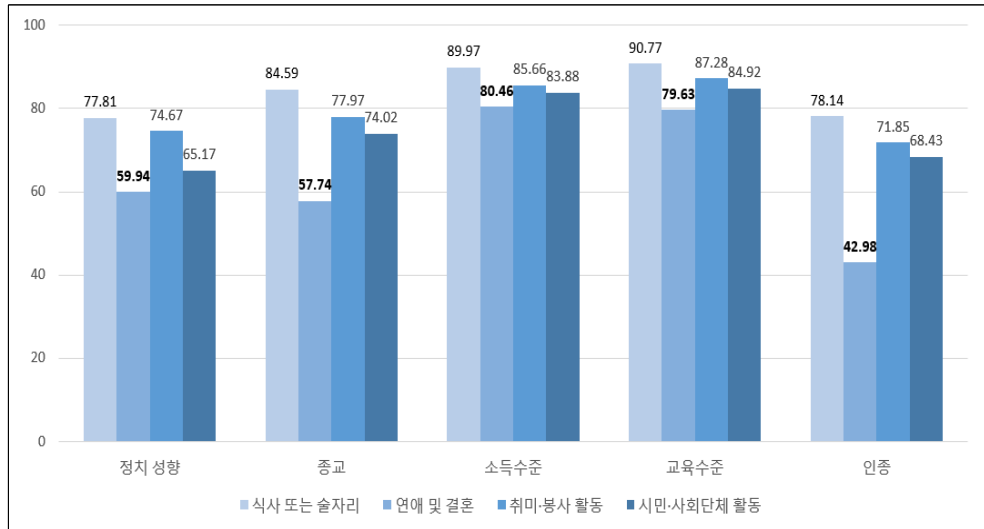
정치 성향과 인종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양상이 관찰된다.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 및 결혼할 수 있다는 응답은 59.94%였으며, 인종이 다른 사람과 연애 및 결혼할 수 있다는 사람은 42.98%로 다른 특성(소득, 교육, 종교)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은 식사 또는 술자리(77.81%)가 가장 높고 취미·봉사 활동(74.67%), 시민·사회 단체 활동(65.17%), 연애 및 결혼(59.94%)의 순이었다. 인종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은 식사 또는 술자리(78.14%)가 가장 높고 그다음이 취미·봉사 활동(71.85%), 시민·사회 단체활동(68.43%), 연애 및 결혼(42.98%)의 순이었다.

곽윤경 외(2023)에서 제시된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의 교제 의향은 식사 또는 술자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응답이 66.98%, 연애 및 결혼 41.80%,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28.59%로 보고된 바 있다. 이와 비교할 때, 2025년의 수치는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의 교류 수용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른 정치 성향과 인종에 대한 수용성은 경제적, 교육적 차이에 대한 수용성에 비해 낮은 편이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2023년과 비교할 때 2025년의 결과는 성향이나 특성이 다른 이에 대한 사회적 관용에 있어 의미 있는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림 3-12] 성향이나 특성이 다른 이와 의 교제 의향

(단위: %)



주: 수치는 각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을 의미함.

〈표 3-22〉는 가장 친밀한 관계인 연애 및 결혼에 있어 특성이나 성향이 다른 이와 함께 할 의향이 있는지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본 것이다.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정치 성향이 보수적일 때보다 중도나 진보적일 때 성향이나 특성이 다른 이와 연애 및 결혼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과 연령을 교차한 범주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 19~39세(68.82%), 여성 19~39세(60.41%)의 경우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 및 결혼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최근 세간에서 회자되는 청년층의 정치 양극화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지역의 경우에는 인종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정치 성향, 교육수준, 소득수준, 종교가 다른 이와 연애 및 결혼할 수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눈에 띈다. 주관적 소득계층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상층(상층)이 소득수준이 다른 이와 연애 및 결혼을 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6.83%로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동질혼을 선호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인종이 다른 사람과 연애 및 결혼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젊은 세대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 가능성과 교육이 인종이 다른 사람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구분		정치 성향에 따른 이와 연애 및 결혼을 할 의향		종교가 다른 이와 연애 및 결혼을 할 의향		소득수준이 다른 이와 연애 및 결혼을 할 의향		교육수준이 다른 이와 연애 및 결혼을 할 의향		인종이 다른 이와 연애 및 결혼을 할 의향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성별	전체	59.94	40.06	57.74	42.26	80.46	19.54	79.63	20.37	42.98	57.02
	남성	63.26	36.74	61.06	38.94	82.29	17.71	80.91	19.09	44.99	55.01
연령	여성	56.51	43.49	54.31	45.69	78.57	21.43	78.31	21.69	40.91	59.09
	19~39세	65.06	34.94	58.29	41.71	83.64	16.36	82.86	17.14	54.89	45.11
	40~59세	58.43	41.57	56.66	43.34	79.44	20.56	77.71	22.29	40.30	59.70
	60세 이상	55.81	44.19	58.69	41.31	78.04	21.96	78.49	21.51	32.10	67.90
성 x 연령	남성 19~39세	68.82	31.18	63.12	36.88	84.86	15.14	84.02	15.98	57.21	42.79
	여성 19~39세	60.41	39.59	52.31	47.69	82.13	17.87	81.43	18.57	52.00	48.00
	남성 40~59세	62.11	37.89	60.23	39.77	80.08	19.92	78.24	21.76	40.87	59.13
	여성 50~59세	54.87	45.13	53.20	46.80	78.82	21.18	77.19	22.81	39.75	60.25
	남성 60세 이상	56.95	43.05	59.35	40.65	82.02	17.98	80.54	19.46	33.62	66.38
	여성 60세 이상	54.77	45.23	58.09	41.91	74.40	25.60	76.60	23.40	30.70	69.30
정치 성향	보수적	59.80	40.20	57.58	42.42	81.88	18.12	80.12	19.88	37.11	62.89
	중도적	60.33	39.67	56.78	43.22	78.96	21.04	79.13	20.87	41.98	58.02
지역	진보적	59.33	40.67	59.69	40.31	82.19	17.81	80.18	19.82	49.62	50.38
	수도권	58.26	41.74	56.66	43.34	78.02	21.98	78.51	21.49	46.88	53.12
	비수도권	61.75	38.25	58.90	41.10	83.08	16.92	80.82	19.18	38.80	61.2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61.14	38.86	52.02	47.98	80.52	19.48	78.42	21.58	31.48	68.52
	중하층	56.91	43.09	57.08	42.92	78.25	21.75	79.59	20.41	38.74	61.26
	중간층	61.69	38.31	59.27	40.73	82.46	17.54	81.08	18.92	47.44	52.56
	중상층(상층)	60.97	39.03	56.85	43.15	76.83	23.17	70.58	29.42	45.83	54.1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52.96	47.04	51.77	48.23	72.37	27.63	73.93	26.07	27.24	72.76
	고졸	54.80	45.20	56.14	43.86	78.06	21.94	78.24	21.76	34.95	65.05
	대졸 이상	64.28	35.72	59.75	40.25	83.33	16.67	81.46	18.54	50.59	49.41

〈표 3-23〉 ~ 〈표 3-27〉은 정치 성향, 종교, 소득수준, 교육수준, 인종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의향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정리한 것으로 해석에 참고할 수 있다.

〈표 3-2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정치 성향이 다른 이와 의 교제 의향

(단위: %)

구분		정치 성향이 다른 이와 의							
		식사 또는 술자리		연애 및 결혼		취미·봉사 활동		시민·사회단체 활동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체		77.81	22.19	59.94	40.06	74.67	25.33	65.17	34.83
성별	남성	78.85	21.15	63.26	36.74	76.48	23.52	67.55	32.45
	여성	76.73	23.27	56.51	43.49	72.80	27.20	62.70	37.30
연령	19~39세	80.56	19.44	65.06	34.94	78.90	21.10	67.94	32.06
	40~59세	77.55	22.45	58.43	41.57	72.74	27.26	64.59	35.41
	60세 이상	74.74	25.26	55.81	44.19	72.30	27.70	62.55	37.45
성 × 연령	남성 19~39세	83.74	16.26	68.82	31.18	82.08	17.92	73.22	26.78
	여성 19~39세	76.61	23.39	60.41	39.59	74.96	25.04	61.39	38.61
	남성 40~59세	78.33	21.67	62.11	37.89	73.67	26.33	65.23	34.77
	여성 50~59세	76.80	23.20	54.87	45.13	71.83	28.17	63.98	36.02
	남성 60세 이상	72.55	27.45	56.95	43.05	72.72	27.28	62.91	37.09
	여성 60세 이상	76.75	23.25	54.77	45.23	71.93	28.07	62.22	37.78
정치 성향	보수적	78.00	22.00	59.80	40.20	76.20	23.80	65.97	34.03
	중도적	75.19	24.81	60.33	39.67	74.17	25.83	65.00	35.00
	진보적	82.63	17.37	59.33	40.67	74.40	25.60	64.82	35.18
지역	수도권	77.58	22.42	58.26	41.74	73.31	26.69	61.71	38.29
	비수도권	78.05	21.95	61.75	38.25	76.13	23.87	68.87	31.13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76.26	23.74	61.14	38.86	72.06	27.94	67.71	32.29
	중하층	78.09	21.91	56.91	43.09	73.12	26.88	62.51	37.49
	중간층	77.25	22.75	61.69	38.31	76.18	23.82	66.11	33.89
	중상층(상층)	82.43	17.57	60.97	39.03	74.65	25.35	68.52	31.48
교육 수준	중졸 이하	71.84	28.16	52.96	47.04	64.85	35.15	60.22	39.78
	고졸	76.12	23.88	54.80	45.20	72.02	27.98	62.15	37.85
	대졸 이상	79.87	20.13	64.28	35.72	77.99	22.01	67.86	32.14

〈표 3-24〉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종교가 다른 이와 의 교제 의향

(단위: %)

구분		종교가 다른 이와 의							
		식사 또는 술자리		연애 및 결혼		취미·봉사 활동		시민·사회단체 활동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체		84.59	15.41	57.74	42.26	77.97	22.03	74.02	25.98
성별	남성	85.67	14.33	61.06	38.94	79.92	20.08	75.74	24.26
	여성	83.47	16.53	54.31	45.69	75.95	24.05	72.23	27.77
연령	19~39세	88.53	11.47	58.29	41.71	80.47	19.53	76.60	23.40
	40~59세	82.56	17.44	56.66	43.34	77.16	22.84	71.89	28.11
	60세 이상	82.70	17.30	58.69	41.31	76.05	23.95	74.01	25.99
성 × 연령	남성 19~39세	90.33	9.67	63.12	36.88	83.80	16.20	79.78	20.22
	여성 19~39세	86.31	13.69	52.31	47.69	76.34	23.66	72.65	27.35
	남성 40~59세	83.60	16.40	60.23	39.77	78.44	21.56	72.17	27.83
	여성 50~59세	81.55	18.45	53.20	46.80	75.92	24.08	71.62	28.38
	남성 60세 이상	82.11	17.89	59.35	40.65	76.60	23.40	75.44	24.56
	여성 60세 이상	83.25	16.75	58.09	41.91	75.55	24.45	72.69	27.31
정치 성향	보수적	84.87	15.13	57.58	42.42	78.72	21.28	75.30	24.70
	중도적	83.51	16.49	56.78	43.22	78.25	21.75	74.14	25.86
	진보적	86.39	13.61	59.69	40.31	76.83	23.17	72.76	27.24
지역	수도권	85.32	14.68	56.66	43.34	79.23	20.77	75.04	24.96
	비수도권	83.80	16.20	58.90	41.10	76.61	23.39	72.92	27.08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82.24	17.76	52.02	47.98	75.51	24.49	74.26	25.74
	중하층	85.64	14.36	57.08	42.92	78.80	21.20	73.16	26.84
	중간층	84.44	15.56	59.27	40.73	77.99	22.01	74.18	25.82
	중상층(상층)	83.20	16.80	56.85	43.15	76.59	23.41	76.90	23.10
교육 수준	중졸 이하	78.82	21.18	51.77	48.23	71.20	28.80	65.65	34.35
	고졸	82.64	17.36	56.14	43.86	76.20	23.80	72.20	27.80
	대졸 이상	86.77	13.23	59.75	40.25	80.21	19.79	76.58	23.42

〈표 3-25〉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소득수준이 다른 이와와의 교제 의향

(단위: %)

구분		소득수준이 다른 이와와의							
		식사 또는 술자리		연애 및 결혼		취미·봉사 활동		시민·사회단체 활동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체		89.97	10.03	80.46	19.54	85.66	14.34	83.88	16.12
성별	남성	91.40	8.60	82.29	17.71	87.35	12.65	84.46	15.54
	여성	88.48	11.52	78.57	21.43	83.92	16.08	83.28	16.72
연령	19~39세	91.49	8.51	83.64	16.36	88.21	11.79	85.07	14.93
	40~59세	89.56	10.44	79.44	20.56	84.42	15.58	82.88	17.12
	60세 이상	88.66	11.34	78.04	21.96	84.33	15.67	83.91	16.09
성 × 연령	남성 19~39세	93.34	6.66	84.86	15.14	89.72	10.28	87.33	12.67
	여성 19~39세	89.20	10.80	82.13	17.87	86.35	13.65	82.28	17.72
	남성 40~59세	90.04	9.96	80.08	19.92	85.49	14.51	81.63	18.37
	여성 50~59세	89.11	10.89	78.82	21.18	83.39	16.61	84.08	15.92
	남성 60세 이상	90.72	9.28	82.02	17.98	86.80	13.20	84.72	15.28
	여성 60세 이상	86.78	13.22	74.40	25.60	82.08	17.92	83.18	16.82
정치 성향	보수적	91.16	8.84	81.88	18.12	88.12	11.88	86.52	13.48
	중도적	88.74	11.26	78.96	21.04	83.82	16.18	82.71	17.29
	진보적	91.34	8.66	82.19	17.81	87.17	12.83	83.98	16.02
지역	수도권	88.63	11.37	78.02	21.98	86.23	13.77	84.10	15.90
	비수도권	91.40	8.60	83.08	16.92	85.05	14.95	83.65	16.35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91.11	8.89	80.52	19.48	85.14	14.86	86.40	13.60
	중하층	88.61	11.39	78.25	21.75	84.52	15.48	83.16	16.84
	중간층	90.79	9.21	82.46	17.54	86.86	13.14	83.83	16.17
	중상층(상층)	89.37	10.63	76.83	23.17	83.26	16.74	84.81	15.19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3.48	16.52	72.37	27.63	74.48	25.52	78.10	21.90
	고졸	88.29	11.71	78.06	21.94	84.53	15.47	83.12	16.88
	대졸 이상	92.11	7.89	83.33	16.67	88.28	11.72	85.34	14.66

8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XII): 사회 인식 변화의 다차원성

〈표 3-26〉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교육수준이 다른 이와와의 교제 의향

(단위: %)

구분		교육수준이 다른 이와와의							
		식사 또는 술자리		연애 및 결혼		취미·봉사 활동		시민·사회단체 활동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체		90.77	9.23	79.63	20.37	87.28	12.72	84.92	15.08
성별	남성	91.09	8.91	80.91	19.09	87.43	12.57	85.21	14.79
	여성	90.43	9.57	78.31	21.69	87.13	12.87	84.63	15.37
연령	19~39세	92.26	7.74	82.86	17.14	89.07	10.93	87.55	12.45
	40~59세	90.29	9.71	77.71	22.29	86.96	13.04	82.96	17.04
	60세 이상	89.61	10.39	78.49	21.51	85.52	14.48	84.60	15.40
성 × 연령	남성 19~39세	93.47	6.53	84.02	15.98	88.82	11.18	87.73	12.27
	여성 19~39세	90.77	9.23	81.43	18.57	89.38	10.62	87.34	12.66
	남성 40~59세	89.05	10.95	78.24	21.76	85.65	14.35	81.94	18.06
	여성 50~59세	91.49	8.51	77.19	22.81	88.23	11.77	83.96	16.04
	남성 60세 이상	90.81	9.19	80.54	19.46	88.18	11.82	86.66	13.34
	여성 60세 이상	88.51	11.49	76.60	23.40	83.09	16.91	82.71	17.29
정치 성향	보수적	90.54	9.46	80.12	19.88	87.02	12.98	85.64	14.36
	중도적	89.79	10.21	79.13	20.87	86.84	13.16	84.29	15.71
	진보적	92.81	7.19	80.18	19.82	88.33	11.67	85.55	14.45
지역	수도권	90.03	9.97	78.51	21.49	88.90	11.10	86.65	13.35
	비수도권	91.56	8.44	80.82	19.18	85.54	14.46	83.07	16.93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92.04	7.96	78.42	21.58	85.43	14.57	85.98	14.02
	중하층	90.95	9.05	79.59	20.41	87.77	12.23	85.47	14.53
	중간층	90.96	9.04	81.08	18.92	87.75	12.25	84.81	15.19
	중상층(상층)	86.84	13.16	70.58	29.42	83.57	16.43	81.69	18.31
교육 수준	중졸 이하	85.59	14.41	73.93	26.07	78.39	21.61	77.49	22.51
	고졸	89.62	10.38	78.24	21.76	86.94	13.06	83.43	16.57
	대졸 이상	92.36	7.64	81.46	18.54	89.03	10.97	87.12	12.88

〈표 3-27〉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인종이 다른 이와 의 교제 의향

(단위: %)

구분		인종이 다른 이와 의							
		식사 또는 술자리		연애 및 결혼		취미·봉사 활동		시민·사회단체 활동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전체		78.14	21.86	42.98	57.02	71.85	28.15	68.43	31.57
성별	남성	80.51	19.49	44.99	55.01	73.05	26.95	69.23	30.77
	여성	75.69	24.31	40.91	59.09	70.61	29.39	67.60	32.40
연령	19~39세	83.30	16.70	54.89	45.11	77.97	22.03	73.67	26.33
	40~59세	78.71	21.29	40.30	59.70	72.28	27.72	68.81	31.19
	60세 이상	70.80	29.20	32.10	67.90	63.50	36.50	61.27	38.73
성 × 연령	남성 19~39세	85.57	14.43	57.21	42.79	79.88	20.12	75.51	24.49
	여성 19~39세	80.48	19.52	52.00	48.00	75.59	24.41	71.38	28.62
	남성 40~59세	80.11	19.89	40.87	59.13	72.50	27.50	68.37	31.63
	여성 50~59세	77.36	22.64	39.75	60.25	72.07	27.93	69.24	30.76
	남성 60세 이상	73.77	26.23	33.62	66.38	63.94	36.06	61.43	38.57
	여성 60세 이상	68.08	31.92	30.70	69.30	63.09	36.91	61.13	38.87
정치 성향	보수적	78.24	21.76	37.11	62.89	70.67	29.33	68.45	31.55
	중도적	74.69	25.31	41.98	58.02	70.73	29.27	66.56	33.44
	진보적	84.63	15.37	49.62	50.38	74.92	25.08	71.96	28.04
지역	수도권	80.12	19.88	46.88	53.12	76.71	23.29	71.77	28.23
	비수도권	76.02	23.98	38.80	61.20	66.63	33.37	64.85	35.15
주관적 소득 계층	하층	72.10	27.90	31.48	68.52	65.30	34.70	63.57	36.43
	중하층	77.23	22.77	38.74	61.26	71.60	28.40	67.45	32.55
	중간층	79.17	20.83	47.44	52.56	72.10	27.90	69.39	30.61
	중상층(상층)	82.62	17.38	45.83	54.17	79.36	20.64	72.36	27.6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67.25	32.75	27.24	72.76	54.45	45.55	51.91	48.09
	고졸	75.30	24.70	34.95	65.05	68.92	31.08	65.31	34.69
	대졸 이상	81.76	18.24	50.59	49.41	76.64	23.36	73.19	26.81

다음 표와 그림은 포용성(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친 수치를 살펴보면 전체로도 절반이 미치지 못하는 44.65%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전체(44.65%)와 비교하여 포용성 수준이 높은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남성(47.93%), 40~59세(47.32%)와 남성 40~59세(50.06%), 여성 40~59세(44.68%)와 정치 성향이 진보적(53.23%)이라 응답한 경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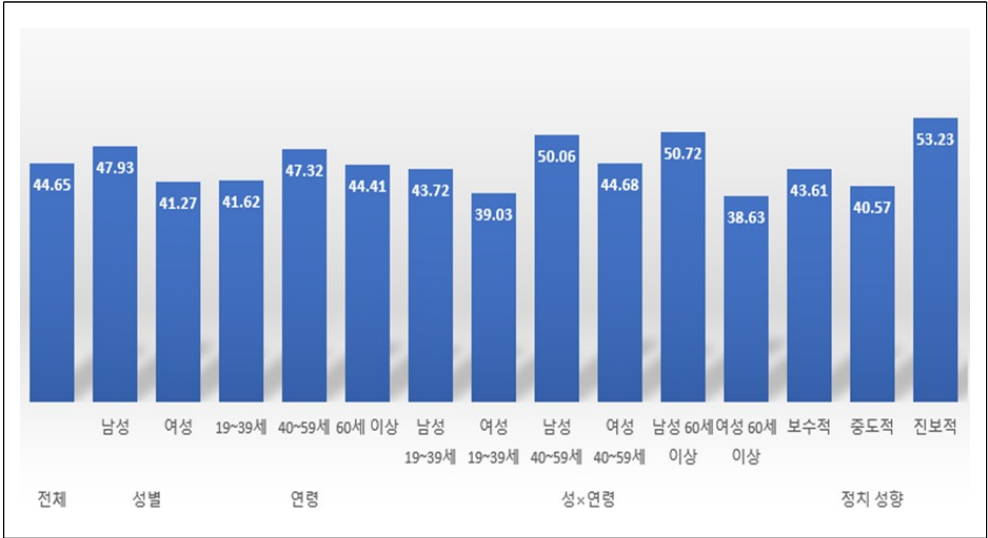
〈표 3-28〉 2025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포용성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2.23	14.02	39.10	40.76	3.89
성별	남성	1.46	13.72	36.90	43.23	4.70
	여성	3.04	14.32	41.37	38.21	3.06
연령	19~39세	2.35	14.29	41.73	38.87	2.75
	40~59세	2.57	13.59	36.52	43.80	3.52
	60세 이상	1.58	14.32	39.70	38.53	5.88
성 × 연령	남성 19~39세	1.14	16.67	38.47	40.73	2.99
	여성 19~39세	3.84	11.35	45.78	36.57	2.46
	남성 40~59세	1.76	12.37	35.82	45.17	4.89
	여성 50~59세	3.36	14.77	37.20	42.48	2.20
	남성 60세 이상	1.44	11.54	36.29	43.84	6.88
	여성 60세 이상	1.70	16.86	42.81	33.67	4.96
정치 성향	보수적	2.56	12.60	41.23	39.19	4.42
	중도적	2.71	15.27	41.45	37.33	3.24
	진보적	1.07	12.79	32.91	48.54	4.69

[그림 3-13]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포용성

(단위: %)





## 제4장

### 주관적 웰빙과 사회 참여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문헌 고찰

제3절 분석 방법 및 결과



## 제4장 주관적 웰빙과 사회 참여

### 제1절 들어가며

삶의 만족, 긍정정서, 부정정서, 삶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되는 주관적 웰빙은 국제적 차원에서 주목하는 주제이며, 주관적 웰빙의 증진이 개인과 사회에 가져다줄 수 있는 효용을 다룬 연구는 정치·경제·사회·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를테면, De Neve et al. (2013)은 ‘주관적 웰빙의 객관적 혜택(objective benefits of subjective well-being)’에 대해 개인, 사회 단위의 효용을 고찰했으며, Goff et al. (2018)은 주관적 웰빙의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과 비교하여 사회 신뢰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주관적 웰빙과 사회 참여와의 관계에 관심을 둔 연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예: Ward, 2019; Ward et al., 2021). 개별 연구의 배경이나 문제의식의 층위는 다양하겠으나, 궁극적으로는 지구적 차원에서 관찰되는 저출산 고령화 및 이주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저성장 기조 고착에 따른 분배와 재분배 문제 개선의 어려움, 포퓰리즘, 극단주의(extremism) 부상에 따른 사회통합에 대한 우려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주관적 웰빙과 사회 참여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대이론(grand theory)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포스트 물질주의(post-materialism) 관점, 자기결정 이론(self determination theory)과 같이 두 변수 간의 관계에 주목한 중범위 이론이나 실증 연구들은 찾아볼 수 있다. 포스트 물질주의 관점에서는 경제적, 물리적인 존재적 안정(existential security)이 높아질수록 생존보다 해방적 가치(emancipative value)가 중요해지며 이는 투표 참여, 비폭력적 참여를 강화하게 된다고 본다. Wezel and Deutsch(2012)는 이를 사회의 발전은 가치를 현대화(modern)하고 참여와 추동력을 지닌 현대적 가치(modern value)는 참여를 끌어내 시위(protest)와 집합행동을 증진한다고 설명했다. Wezel(2012)은 세계가치관조사를 분석하여 해방적 가치는 비폭력적 시위를 장려할 뿐 아니라 생태적 효과를 지님으로써 효과를 증폭시키기도 함을 보이기도 했다. 자기결정이론(self determination theory, SDT)에서는 인간이 자율

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이 충족될 때 최적의 동기를 지닐 수 있으며, 웰빙을 경험하게 된다고 본다(Ryan & Deci, 2000). 즉, 이 관점에 따르면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정치·사회 참여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선행 연구들은 주관적 웰빙과 사회 참여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정치·사회 참여는 소득수준에 의존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근거로 여기서는 사회통합 제고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사회 참여를 증진할 방법을 찾고자 주관적 웰빙과 사회 참여와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제2절 문헌 고찰

1980년대에는 자기 삶에 만족하거나 편안한 상태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나 “민주주의의 형해화(an emptying of democracy)”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겨졌다(Veenhoven, 1988).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높은 수준의 주관적 웰빙이 친사회적 행동과 정치·사회 참여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면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주관적 웰빙에 주목하는 연구 또한 등장하게 되었다. 예컨대,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는 2012년부터 옥스퍼드 대학, 갤럽 등과 함께 매해 세계행복보고서를 발간하여 주관적 웰빙과 주목해야 할 사회 이슈(예: 포퓰리즘, 투표 참여, 친사회적 행동)를 다루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은 감정, 정서를 정보의 원천과 의사 결정의 지침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한다(Schwarz, 1990)<sup>11)</sup>. 부정적인 감정 또는 정서는 현상 유지에 대한 선호를 감소시키고(Scheibehenne, Von Helversen, & Shevchenko, 2014), 긍정적인 감정 또는 정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이끌어낸다고(Ward, 2019) 보는 것이다. 이를테면, Jebb et al. (2020)은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인 감정(positive feelings)이 자선단체에의 기부, 타인에 대한 도움 행동, 자원봉사를 예측함을, Oishi 등은 행복감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했다(Oishi et al., 2007; De Neve et al.,

11) 다른 절에서 살펴볼 정치 성향과 가치 지향의 논의 또한 이러한 주장에 주목한다.

2013, p. 14에서 재인용). 또한 미국과 영국, 중국, 독일의 투표 참여를 살펴본 연구들(예: Zhong & Chen, 2002; Flavin & Keane, 2012; Ojeda, 2015; Pirralha, 2018)은 개인 단위와 사회 단위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거나 우울감이 낮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긍정적인 기분 상태(positive mood)는 타인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낳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Nelson은 긍정적인 기분(positive mood)을 가진 사람들은 중립적 또는 부정적인 기분 상태에 있는 사람들보다 고통을 겪는 사람에 대해 공감 정도가 높음을 보고한 바 있다(Nelson, 2009; De Neve et al., 2013, p. 14에서 재인용).

최근에는 사회 참여 여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관적 웰빙이 극단주의 또는 포퓰리스트에 대한 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들도 등장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극단주의, 포퓰리즘을 지지하게끔 이끄는 동력을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관해 프랑스 시민 1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Algan et al. (2018)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마린 르펜(Marine Le Pen)에게 투표했을 확률이 낮고, 마린 르펜 지지자들의 삶의 만족도는 다른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비해 낮고 미래에 대한 비관적 인식 수준이 높음을 보고한 바 있다. 지역 수준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 연구도 있다. Herrin et al. (2018)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서 삶의 만족도가 낮은 사람들(0~10점 중 0~4점에 분포한 사람들의 비율)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을 발견하였다. Alabrese and Fetzer(2018)는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여,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브렉시트에 대한 지지가 높았음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시민들이 거시 경제에 대한 보상과 처벌로 경제적 투표(economic voting)를 선택한다고 설명하는 기존의 논의를 넘어 지위에 대한 위협(예: Knowles & Tropp, 2018; Major, Blodorn, & Major Blascovich, 2018; Mutz, 2018; MacWilliams, 2016)이 정치·사회 참여, 즉, 투표 참여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문헌들은 삶에 대한 평가, 희망에 대한 결여가 민주주의와 사회통합, 사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여기서는 주관적 웰빙과 사회 참여와의 관계를, 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어 온 연도별 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이러한 시도는 국제적 차원에서 이러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례는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점, 한국 사회에서 삶의 질 제고와 타인에 대한 이해, 사회자본의 확대 및 공동체, 민주주의의 회복<sup>12)</sup>이 주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닐 수 있다. 사회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 전반에서 나타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결여와 초기 청년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는 해결이 요원하다. 자살률 또한 많은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젠더, 세대, 정치적 갈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의 한국에서 사회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제3절 분석 방법 및 결과

#### 1. 변수 활용

##### 가. 사회 참여

사회 참여는 친사회적 행동과 투표 참여로 살펴본다. 친사회적 행동은 지난 1년간 1) 자원봉사, 2)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여부로 살펴보았다. 친사회적 행동은 2014~2022년에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여, 분석을 위해 더미 변수로 재코딩하였고, 2023~2024년은 경험의 여부를 응답하도록 하여 분석에 그대로 활용하였다. 2025년은 [그림 4-3]과 같이 조사하여 재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즉, 자원봉사와 기부는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경험이 있음을 1, 없음을 0으로 코딩하였다.

12)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전년 대비 10위 하락한 2024년 32위로 평가(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5)했다.

〈표 4-1〉 친사회적 행동 조사 연도

구분	조사 연도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자원봉사	○	○	○	○	○	○	○	○	○	○	○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	○	○	○	○	○	○	○	○	○	○

주: 필자 작성

〔그림 4-1〕 2014~2022년 자원봉사,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여부 문항

문)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일주일 한 번이상	한달에 한 두번	일년에 6-7번	일년에 한 두번	전혀 안했다
1) 자원봉사	①	②	③	④	⑤
2)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①	②	③	④	⑤

〔그림 4-2〕 2023~2024년 자원봉사,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여부 문항

문)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셨습니까?

	했다	안했다
1) 자원봉사	①	②
2)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①	②

〔그림 4-3〕 2025년 자원봉사,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문항

문)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 각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셨습니까?

	했다		안했다	
	지난 1년 동안 3번 이상	지난 1년 동안 1~2번	지난 1년은 아니지만 해본 적 있음	한번도 해본적 없다
1) 자원봉사	①	②	③	④
2)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①	②	③	④
3) 정치집회, 모임 및 시위	①	②	③	④

투표 참여는 19대(2017년), 21대(2025년)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여부로 살펴본다.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여부를 19대와 21대 대통령 선거로 제한하는 이유는 조사와 대

선이 같은 해에 있었던 연도가 2017년과 2025년이기 때문이다. 즉, 주어진 여건에서 역인과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투표 참여에 대한 응답은 ‘①투표했다’, ‘②투표하지 않았다’, ‘⑨모르겠다’, ‘㉠투표권이 없었음’으로 구성돼 있으며, ‘⑨모르겠다’와 ‘㉠투표권이 없었음’은 제외하였다.

〈표 4-2〉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문항 구성과 분석 활용 여부

연도	문항	보기 구성
2014년 (비활용)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①투표했다 ②투표하지 않았다 ⑨모르겠다 ㉠투표권이 없었음
2015년 (비활용)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2016년 (비활용)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2017년 (활용)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2018년 (비활용)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2019년 (비활용)	2016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2021년 (문항 없음)	-	
2022년 (문항 없음)	-	
2023년 (비활용)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2년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	
2024년 (비활용)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2년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2025년 (활용)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2년 6월 1일 제8회 지방 선거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주: 필자 작성

## 나.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은 일반적으로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유다이모니아(일 또는 삶에 대한 가치 인식), 삶에 대한 평가로 측정된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여기서도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주관적 웰빙 변수로서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유다이모니아, 삶에 대한 평가를 활용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0점~10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며, 2020년을 제외하고 2014~2019년, 2021~2025년 11개 연도 자료에서 활용할 수 있다. 긍정정서는 어제의 행복 정도를 0점~10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며, 2014년~2019년, 2021년~2025년 11개 연도 자료에서 활용할 수 있다.

부정정서는 어제의 우울 정도(부정정서1)와 걱정 정도(부정정서2)를 조사하며, 어제의 우울 정도는 2015년과 2020년을 제외한 10개 연도에서, 걱정 정도는 2025년에 측정되었다. 일(삶)에 대한 가치 인식 지표인 유다이모니아는 2014년, 2016년 2015년에 조사되었고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와 마찬가지로 0점에서 10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했다.

2025년에 신규 포함한 삶에 대한 평가(life evaluation)는 캔트릴 사다리를 활용하여 현재와 5년 뒤의 상황에 대해 0점에서 10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삶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평가는 현재의 주관적 웰빙뿐 아니라 시간적 차원, 즉 미래에 대한 긍정 혹은 희망의 결여 정도를 살펴볼 수 있게끔 한다는 이점이 있다(Ward et al., 2021).

여기서는 현재에 대한 평가가 7점 이상, 미래에 대한 평가가 8점 이상인 경우를 번영(thriving)으로, 현재와 미래에 대한 평가 모두가 4점 이하인 경우를 고통(suffering)으로, 나머지는 분투(struggling)로 구분했으며, 이와 같은 범주화는 OECD(2013)를 참고한 것이다.

〈표 4-3〉 주관적 웰빙 문항 조사 연도

구분		조사 연도										
		'14	'15	'16	'17	'18	'19	'21	'22	'23	'24	'25
삶의 만족도		○	○	○	○	○	○	○	○	○	○	○
긍정정서 (어제 행복 정도)		○	○	○	○	○	○	○	○	○	○	○
부정정서1 (어제 우울 정도)		○		○	○	○	○	○	○	○	○	○
부정정서2 (어제 걱정 정도)												○
유다이모니아		○		○								○
삶에 대한 평가	현재의 삶											○
	5년 뒤의 삶											○

주: 필자 작성

〔그림 4-4〕 삶의 만족도 문항

문) 귀하는 요즘 전반적으로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그림 4-5〕 긍정정서(어제 행복 정도) 문항

문)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셨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그림 4-6〕 부정정서1(어제 우울 정도) 문항

문)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다?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그림 4-7] 부정정서2(어제 걱정 정도) 문항

문)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걱정을 하셨습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걱정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그림 4-8] 유다이모니아(일(삶)에 대한 가치 인식) 문항

문)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또는 삶)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가치가 없다				보통						매우 가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그림 4-9] 삶에 대한 평가 문항

문) 맨 아래 0점부터 꼭대기 10점까지 매겨진 사다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사다리의 꼭대기는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삶을 뜻하고, 맨 아래는 최악의 삶을 나타냅니다.

귀하는 현재 자신이 사다리의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숫자에 표시해 주십시오.	10	5년 뒤, 귀하는 자신이 사다리의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숫자에 표시해 주십시오.	10
	9		9
	8		8
	7		7
	6		6
	5		5
	4		4
	3		3
	2		2
	1		1
	0		0

## 2. 분석 결과

주관적 웰빙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로짓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에서는 17개 시도와 연도를 고정했다. 주관적 웰빙 변수는 모형 간 계수 크기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z-score로 변환하였다.

## 가. 주관적 웰빙과 자원봉사 참여

모형(1)은 2014~2019년, 2021~2025년 자료를 활용하여 삶의 만족도와 자원봉사 참여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며, 모형(2)는 2014~2019년, 2021~2025년 자료로 긍정정서와 자원봉사 참여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3)은 2015~2025년 조사자료로 부정정서1과 자원봉사 참여의 관계를 분석했으며, 모형(4)는 2014년과 2016년, 2025년 자료로 유다이모니아와 자원봉사 참여와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형(1)을 보면 삶의 만족도가 1표준편차(0~10점 척도에서 약 1.85점) 증가할 때 자원봉사 참여 오즈가 약 2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를 살펴보면 긍정정서가 1표준편차(0점~10점 척도에서 약 1.94점) 증가할 때 자원봉사 참여의 오즈가 약 24.1% 증가했다.

모형(3)은 부정정서와 자원봉사 참여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부정정서1이 1표준편차(0점~10점 척도에서 약 2.84점) 증가할 때 자원봉사 참여의 오즈가 약 5.2% 감소했다. 모형(4)는 유다이모니아와 자원봉사 참여와의 관계를 살펴본 것으로, 유다이모니아가 1표준편차(0점~10점 척도에서 약 1.80점) 증가할 때 자원봉사 참여 오즈는 약 3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1)~(3)에서 통제 변수 중에서는 19~39세와 비교하여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고졸이거나 대졸 이상인 경우 중졸 이하에 비해 자원봉사 참여의 오즈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또한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의 오즈가 높았으며, 경제활동상태 중에서는 비경활인 경우 상용직에 비해 자원봉사 참여의 오즈가 높았는데, 이는 연령, 시간 활용의 가능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표 4-4〉 주관적 웰빙과 친사회적 행동: 자원봉사 1

		pooled logit, 자원봉사 참여 = 1															
		(1) 2014~2019, 2021~2025				(2) 2014~2019, 2021~2025				(3) 2015~2025				(4) 2014, 2016, 2025			
		Odds ratio	Robust s.e.	z		Odds ratio	Robust s.e.	z		Odds ratio	Robust s.e.	z		Odds ratio	Robust s.e.	z	
주관적 웰빙 (z-score)	삶의 만족도 공정성 (여제 행복)  부정성1 (여제 우울)  부정성2 (여제 걱정)  유다이모니아	1.213***	0.027	8.8													
						1.241***	0.035	7.7									
										0.948*	0.020	-2.5					
															1.302***	0.037	9.2
성별(ref.남성)		1.027	0.035	0.8		1.023	0.036	0.7		1.039	0.036	1.1		1.004	0.053	0.1	
연령 (ref.19~39세)	40~59세	1.161***	0.047	3.7		1.174***	0.045	4.2		1.104*	0.050	2.2		1.231***	0.080	3.2	
	60세 이상	1.389***	0.086	5.3		1.423***	0.081	6.2		1.387***	0.086	5.3		1.487***	0.133	4.4	
교육수준 (ref.중졸 이하)	고졸	1.543***	0.131	5.1		1.550***	0.135	5.0		1.545	0.146	4.6		1.698***	0.225	4.0	
	대졸 이상	1.940***	0.181	7.1		1.941***	0.191	6.8		1.945	0.199	6.5		2.115***	0.239	6.6	
혼인상태 (ref.유배우)	무배우	1.130***	0.043	3.2		1.143***	0.049	3.1		1.082	0.044	1.9		1.044	0.043	1.1	
ln_가구소득		1.398***	0.050	9.4		1.404***	0.050	9.4		1.424***	0.053	9.4		1.242	0.143	1.9	
경제활동 상태 (ref.상용)	임시, 일용, 특고	1.006	0.040	0.2		1.008	0.041	0.2		0.949	0.038	-1.3		0.934	0.105	-0.6	
	고용주, 자영자	1.005	0.048	0.1		1.006	0.049	0.1		0.988	0.040	-0.3		0.989	0.090	-0.1	
	무급가족종사자	1.108	0.107	1.1		1.123	0.110	1.2		1.073	0.084	0.9		0.869	0.178	-0.7	
	실업자	0.961	0.110	-0.4		0.961	0.112	-0.3		0.903	0.128	-0.7		1.035	0.181	0.2	
	비경활	1.249***	0.050	5.6		1.248***	0.049	5.6		1.246***	0.048	5.7		1.177*	0.081	2.4	

		pooled logit, 자원봉사 참여 = 1															
		(1) 2014~2019, 2021~2025				(2) 2014~2019, 2021~2025				(3) 2015-2025				(4) 2014, 2016, 2025			
		Odds ratio	Robust s.e.	z		Odds ratio	Robust s.e.	z		Odds ratio	Robust s.e.	z		Odds ratio	Robust s.e.	z	
지역 터미 (ref.서울)	부산	0.952 <sup>***</sup>	0.008	-6.0		0.960 <sup>***</sup>	0.006	-6.1		1.041	0.008	5.3		0.712	0.008	-30.7	
	대구	1.098 <sup>***</sup>	0.007	15.3		1.098 <sup>***</sup>	0.006	16.6		1.232	0.008	33.1		1.273	0.016	19.1	
	인천	1.115 <sup>***</sup>	0.004	29.5		1.122 <sup>***</sup>	0.005	25.7		1.162	0.004	46.1		0.870	0.008	-14.3	
	광주	1.736 <sup>***</sup>	0.006	163.2		1.754 <sup>***</sup>	0.008	131.0		1.881	0.009	131.8		2.376	0.024	84.5	
	대전	1.451 <sup>***</sup>	0.010	55.1		1.451 <sup>***</sup>	0.010	54.5		1.546	0.009	71.0		1.004	0.007	0.6	
	울산	1.125 <sup>***</sup>	0.007	18.5		1.133 <sup>***</sup>	0.006	22.1		1.250	0.009	30.5		1.141	0.013	11.5	
	세종	1.415 <sup>***</sup>	0.047	10.42		1.398 <sup>***</sup>	0.040	11.7		1.570	0.038	18.6		0.984	0.051	-0.3	
	경기	1.169 <sup>***</sup>	0.007	25.9		1.173 <sup>***</sup>	0.007	28.5		1.249	0.009	31.7		1.196	0.014	15.8	
	강원	1.424 <sup>***</sup>	0.019	27.0		1.416 <sup>***</sup>	0.018	27.8		1.547	0.018	37.6		1.138	0.015	9.8	
	충북	1.291 <sup>***</sup>	0.018	18.4		1.267 <sup>***</sup>	0.017	17.4		1.440	0.016	32.6		1.097	0.019	5.2	
	충남	1.708 <sup>***</sup>	0.028	32.9		1.697 <sup>***</sup>	0.025	35.4		1.923	0.029	42.7		1.489	0.032	18.3	
	전북	1.413 <sup>***</sup>	0.020	24.6		1.425 <sup>***</sup>	0.018	27.5		1.547	0.020	34.0		1.217	0.025	9.5	
	전남	1.552 <sup>***</sup>	0.027	25.3		1.557 <sup>***</sup>	0.025	27.7		1.681	0.027	32.8		1.572	0.026	27.4	
	경북	1.705 <sup>***</sup>	0.027	33.6		1.722 <sup>***</sup>	0.026	35.5		1.888	0.027	44.4		1.264	0.044	6.7	
	경남	1.022 <sup>***</sup>	0.009	2.5		1.030 <sup>***</sup>	0.008	3.7		1.161	0.012	14.9		0.833	0.014	-10.6	
	제주	2.410 <sup>***</sup>	0.043	49.2		2.475 <sup>***</sup>	0.050	44.9		2.516	0.043	54.1		2.269	0.071	26.3	
연도 터미	2015	0.771 <sup>*</sup>	0.079	-2.6		0.756 <sup>***</sup>	0.079	-2.7		-	-	-		-	-	-	
	2016	0.605 <sup>***</sup>	0.040	-7.5		0.593 <sup>***</sup>	0.040	-7.7		0.607 <sup>***</sup>	0.041	-7.3		0.610 <sup>***</sup>	0.049	-6.1	
	2017	0.598 <sup>***</sup>	0.056	-5.5		0.581 <sup>***</sup>	0.054	-5.8		0.606 <sup>***</sup>	0.055	-5.5		-	-	-	
	2018	0.582 <sup>***</sup>	0.051	-6.2		0.569 <sup>***</sup>	0.050	-6.4		0.588 <sup>***</sup>	0.050	-6.3		-	-	-	
	2019	0.552 <sup>***</sup>	0.079	-4.1		0.540 <sup>***</sup>	0.079	-4.2		0.547 <sup>***</sup>	0.079	-4.2		-	-	-	
	2021	0.373 <sup>***</sup>	0.060	-6.1		0.361 <sup>***</sup>	0.056	-6.5		0.363 <sup>***</sup>	0.056	-6.6		-	-	-	
	2022	0.328 <sup>***</sup>	0.059	-6.2		0.319 <sup>***</sup>	0.058	-6.3		0.330 <sup>***</sup>	0.058	-6.3		-	-	-	
	2023	0.340 <sup>***</sup>	0.052	-7.0		0.332 <sup>***</sup>	0.052	-7.1		0.346 <sup>***</sup>	0.051	-7.1		-	-	-	
	2024	0.326 <sup>***</sup>	0.062	-5.9		0.319 <sup>***</sup>	0.060	-6.1		0.332 <sup>***</sup>	0.062	-5.9		-	-	-	
	2025	0.315 <sup>***</sup>	0.072	-5.1		0.305 <sup>***</sup>	0.069	-5.2		0.326 <sup>***</sup>	0.072	-5.1		0.332 <sup>***</sup>	0.083	-4.4	
n		40,542				40,542				36,517				10,279			
Pseudo R <sup>2</sup>		0.0399				0.0411				0.0344				0.0525			

주: \*\*\* p<0.001, \*\* p<0.01, \* p<0.05

모형(5)와 (6)은 2025년 자료로 부정정서2와 삶에 대한 평가와 자원봉사와 참여와의 관계를 각각 분석한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부정정서 2가 1표준편차 증가할 때 자원봉사 참여의 오즈는 17.3% 감소했고, 삶에 대한 평가가 고난에 해당하는 집단에 비해 번영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원봉사 참여의 오즈가 7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모형(1)~모형(4)와 마찬가지로 19~39세에 비해 40~59세와 60세 이상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 오즈가 높았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와 비교하여 대졸 이상인 경우에만 자원봉사 참여 오즈가 높았다. 경제활동 상태는 실업자인 경우에 상용직에 비해 자원봉사 참여 오즈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표 4-5〉 주관적 웰빙과 친사회적 행동: 자원봉사 2

			pooled logit, 자원봉사 참여 = 1					
			(5) 2025			(6) 2025		
			Odds ratio	Robust s.e.	z	Odds ratio	Robust s.e.	z
주관적 웰빙	부정정서2 (어제 걱정) (z-score)		0.827*	0.066	-2.4			
	삶에 대한 평가 (ref.고난)	분투 번영				1.040	0.214	0.2
						1.713*	0.460	2.0
성별(ref.남성)	여성		1.102	0.111	1.0	1.102	0.112	1.0
연령 (ref.19~39세)	40~59세		1.383**	0.158	2.8	1.379**	0.159	2.8
	60세 이상		2.627***	0.445	5.7	2.668***	0.453	5.8
교육수준 (ref.중졸 이하)	고졸		1.407	0.328	1.5	1.416	0.315	1.6
	대졸 이상		2.351***	0.466	4.3	2.300***	0.429	4.5
혼인상태 (ref.유배우)	무배우		0.825	0.103	-1.6	0.832	0.114	-1.4
ln_가구소득			1.329*	0.152	2.5	1.291*	0.148	2.2
경제활동 상태 (ref.상용)	임시, 일용, 특고		1.148	0.250	0.6	1.158	0.276	0.6
	고용주, 자영자		0.752	0.166	-1.3	0.753	0.166	-1.3
	무급가족종사자		1.460	0.441	1.3	1.505	0.420	1.5
	실업자		0.332*	0.167	-2.2	0.344*	0.174	-2.1
	비경활		1.007	0.161	0.0	1.012	0.162	0.1
지역 더미 (ref.서울)	부산		0.908	0.054	-1.6	1.147*	0.070	2.3
	대구		2.751***	0.117	23.8	3.000***	0.103	31.9
	인천		2.860***	0.092	32.6	3.000***	0.127	25.9
	광주		6.155***	0.517	21.6	5.569***	0.424	22.6
	대전		2.051***	0.093	15.9	2.305***	0.083	23.2

		pooled logit, 자원봉사 참여 = 1					
		(5) 2025			(6) 2025		
		Odds ratio	Robust s.e.	z	Odds ratio	Robust s.e.	z
	울산	2.087***	0.103	15.0	2.270***	0.116	16.0
	세종	2.003***	0.086	16.2	1.835***	0.106	10.5
	경기	1.270***	0.035	8.8	1.361***	0.051	8.3
	강원	2.916***	0.122	25.7	2.885***	0.129	23.7
	충북	3.268***	0.143	27.1	3.619***	0.151	30.8
	충남	3.566***	0.146	31.0	3.755***	0.141	35.3
	전북	1.761***	0.074	13.4	1.845***	0.084	13.5
	전남	2.865***	0.218	13.9	3.049***	0.245	13.9
	경북	2.237***	0.182	9.9	2.380***	0.208	9.9
	경남	2.915***	0.166	18.8	3.237***	0.215	17.7
	제주	3.106***	0.103	34.1	3.344***	0.179	22.5
n		3,003			3,003		
Pseudo R <sup>2</sup>		0.0692			0.0706		

주: \*\*\* p<0.001, \*\* p<0.01, \* p<0.05

모형(1)~모형(6)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주관적 웰빙과 자원봉사 참여의 관계는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삶의 만족도, 행복감, 유다이모니아(일/삶에 대한 가치 인식) 지표가 긍정적일수록, 현재와 5년 뒤를 비교하여 삶을 고통이라 평가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번영할 것이라, 즉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자원봉사 참여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울, 걱정과 같은 부정정서는 자원봉사 참여의 가능성을 낮춘다고 볼 수 있다.

## 나. 주관적 웰빙과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모형(1)은 2014~2019년, 2021~2025년 자료를 활용하여 삶의 만족도와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며, 모형(2)는 2014~2019년, 2021~2025년 자료로 긍정정서와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3)은 2015~2025년 조사 자료로 부정정서1과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관계를 분석했으며, 모형(4)는 2014년과 2016년, 2025년 자료로 유다이모니아와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 유다이모니아는 사회단체나 기관 기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정서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1 표준편차 증가할 때 사회단체나 기관 기부 참여의 오즈가 약 18.9% 증가했으며, 긍정정서가 1표준편차 증가할 때 사회단체나 기관 기부 참여의 오즈가 약 14.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다이모니아의 경우, 1표준편차 증가할 때 사회단체나 기관 기부 참여의 오즈가 약 25.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삶의 만족, 긍정정서, 일(삶)에 대한 가치 인식이 긍정적인일 수록 사회단체나 기관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통제 변수는 모형(1)~모형(4)를 전체적으로 검토했다. 자원봉사와 마찬가지로 연령과 교육수준은 기준집단에 비해 높을수록 기부 참여 오즈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상태의 경우 상용직에 비해 상용직이 아닌 집단에서 기부 참여의 오즈가 낮게 나타났다.

〈표 4-6〉 주관적 웰빙과 친사회적 행동: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1

		pooled logit,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참여 = 1											
		(1) 2014~2019, 2021~2025			(2) 2014~2019, 2021~2025			(3) 2015~2025			(4) 2014, 2016, 2025		
		Odds ratio	Robust s.e.	z	Odds ratio	Robust s.e.	z	Odds ratio	Robust s.e.	z	Odds ratio	Robust s.e.	z
주관적 웰빙 (z-score)	삶의 만족도 긍정적 (어제 행복) 부정적1 (어제 우울) 유다이모니아	1.189***	0.014	14.6		1.144***	0.018	8.7					
	성별(ref.남성)	1.196***	0.035	6.2	1.198***	0.034	6.4	1.202***	0.038	5.8	1.253***	0.045	6.2
	연령 (ref.19~39세)	1.425***	0.083	6.1	1.423***	0.083	6.1	1.368***	0.082	5.2	1.163**	0.070	2.5
	교육수준 (ref.중졸 이하)	1.674***	0.125	6.9	1.697***	0.123	7.3	1.670***	0.135	6.4	1.421***	0.105	4.8
	혼인상태 (ref.유배우)	1.499***	0.098	6.2	1.511***	0.100	6.2	1.532***	0.096	6.8	2.010***	0.177	7.9
경제활동 상태 (ref.상용)	무배우	2.637***	0.278	9.2	2.656***	0.285	9.1	2.712***	0.330	8.2	1.776***	0.202	5.1
	ln_가구소득	0.842***	0.026	-5.6	0.842***	0.027	-5.4	0.820***	0.027	-6.1	3.134***	0.472	7.6
	임시, 일용, 특고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1.556***	0.063	10.9	1.581***	0.067	10.8	1.585***	0.068	10.7	0.771***	0.030	-6.8
	실업자 비경활	0.732***	0.024	-9.7	0.725***	0.022	-10.4	0.688***	0.030	-8.5	1.489***	0.172	3.5
	지역	0.882**	0.051	-2.2	0.878**	0.052	-2.2	0.842***	0.050	-2.9	0.722***	0.084	-2.8
	부산	0.741***	0.059	-3.7	0.749***	0.060	-3.6	0.690***	0.048	-5.3	0.815***	0.058	-2.9
	대구	0.740***	0.048	-4.6	0.727***	0.047	-5.0	0.684***	0.058	-4.5	0.579***	0.071	-4.5
	인천	0.750***	0.019	-11.2	0.751***	0.019	-11.4	0.735***	0.021	-10.8	0.869	0.173	-0.7
	광주	1.033**	0.012	2.7	1.050***	0.012	4.2	1.123***	0.021	-10.8	0.760***	0.046	-4.6
	대전	0.834***	0.007	-21.9	0.840***	0.008	-19.1	0.905***	0.016	8.1	0.046	0.018	-6.2
		1.336***	0.014	27.7	1.337***	0.014	28.2	1.369***	0.016	26.9	0.811***	0.015	-11.7
		1.609***	0.011	71.9	1.617***	0.010	77.4	1.772***	0.016	61.6	1.139***	0.018	8.3
		1.597***	0.018	42.0	1.616***	0.018	42.8	1.680***	0.023	38.7	2.244***	0.041	44.7
											0.930***	0.012	-5.6

		pooled logit,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참여 = 1															
		(1) 2014~2019, 2021~2025				(2) 2014~2019, 2021~2025				(3) 2015~2025				(4) 2014, 2016, 2025			
		Odds ratio	Robust s.e.	z		Odds ratio	Robust s.e.	z		Odds ratio	Robust s.e.	z		Odds ratio	Robust s.e.	z	
연도더미	울산	1.196 <sup>***</sup>	0.014	15.0		1.211 <sup>***</sup>	0.014	16.7		1.312 <sup>***</sup>	0.019	19.0		1.272 <sup>***</sup>	0.027	11.1	
	세종	1.483 <sup>***</sup>	0.037	15.9		1.497 <sup>***</sup>	0.039	15.6		1.618 <sup>***</sup>	0.030	25.8		0.489 <sup>***</sup>	0.016	-21.9	
	경기	1.080 <sup>***</sup>	0.007	11.3		1.084 <sup>***</sup>	0.007	12.4		1.117 <sup>***</sup>	0.007	16.9		1.107 <sup>***</sup>	0.015	7.7	
	강원	1.139 <sup>***</sup>	0.021	7.0		1.137 <sup>***</sup>	0.021	6.8		1.225 <sup>***</sup>	0.023	10.8		1.097 <sup>***</sup>	0.029	3.5	
	충북	0.960 <sup>*</sup>	0.015	-2.6		0.968	0.016	-1.9		1.103 <sup>***</sup>	0.019	5.6		1.036	0.027	1.4	
	충남	1.573 <sup>***</sup>	0.034	20.7		1.584 <sup>***</sup>	0.035	20.8		1.724 <sup>***</sup>	0.046	20.4		1.940 <sup>***</sup>	0.077	16.6	
	전북	1.241 <sup>***</sup>	0.026	10.2		1.257 <sup>***</sup>	0.026	11.1		1.399 <sup>***</sup>	0.034	13.7		1.145 <sup>***</sup>	0.040	3.9	
	전남	1.257 <sup>***</sup>	0.031	9.2		1.278 <sup>***</sup>	0.032	9.8		1.374 <sup>***</sup>	0.041	10.6		1.265 <sup>***</sup>	0.045	6.6	
	경북	1.321 <sup>***</sup>	0.029	12.7		1.339 <sup>***</sup>	0.029	13.4		1.476 <sup>***</sup>	0.038	15.2		1.058	0.043	1.4	
	경남	1.131 <sup>***</sup>	0.020	7.0		1.146 <sup>***</sup>	0.020	7.9		1.293 <sup>***</sup>	0.029	11.3		0.869 <sup>***</sup>	0.026	-4.6	
	제주	1.443 <sup>***</sup>	0.027	19.8		1.466 <sup>***</sup>	0.026	21.5		1.491 <sup>***</sup>	0.024	24.5		1.638 <sup>***</sup>	0.046	17.5	
	2015	0.877	0.078	-1.5		0.856	0.079	-1.7		-	-	-		-	-	-	
	2016	0.641 <sup>***</sup>	0.059	-4.8		0.634 <sup>***</sup>	0.058	-5.0		0.644 <sup>***</sup>	0.060	-4.7		0.649 <sup>***</sup>	0.067	-4.2	
	2017	0.588 <sup>***</sup>	0.037	-8.4		0.581 <sup>***</sup>	0.036	-8.7		0.598 <sup>***</sup>	0.036	-8.5		-	-	-	
	2018	0.540 <sup>***</sup>	0.050	-6.7		0.534 <sup>***</sup>	0.049	-6.8		0.545 <sup>***</sup>	0.049	-6.7		-	-	-	
	2019	0.500 <sup>***</sup>	0.048	-7.2		0.493 <sup>***</sup>	0.048	-7.3		0.499 <sup>***</sup>	0.048	-7.3		-	-	-	
	2021	0.403 <sup>***</sup>	0.062	-5.9		0.392 <sup>***</sup>	0.059	-6.2		0.394 <sup>***</sup>	0.058	-6.3		-	-	-	
	2022	0.341 <sup>***</sup>	0.039	-9.3		0.337 <sup>***</sup>	0.037	-9.8		0.344 <sup>***</sup>	0.036	-10.1		-	-	-	
	2023	0.269 <sup>***</sup>	0.032	-10.9		0.267 <sup>***</sup>	0.032	-11.1		0.275 <sup>***</sup>	0.031	-11.5		-	-	-	
	2024	0.276 <sup>***</sup>	0.045	-8.0		0.274 <sup>***</sup>	0.043	-8.2		0.282 <sup>***</sup>	0.044	-8.2		-	-	-	
	2025	0.256 <sup>***</sup>	0.032	-11.0		0.253 <sup>***</sup>	0.030	-11.5		0.265 <sup>***</sup>	0.031	-11.2		0.258 <sup>***</sup>	0.044	-7.9	
n		40,542				40,542				36,517				10,279			
Pseudo R <sup>2</sup>		0.0728				0.0712				0.0657				0.0880			

모형(5)과 모형(6)은 2025년 자료로 부정정서2와 삶에 대한 평가와 기부 참여와의 관계를 각각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정정서 2가 1표준편차 증가할 때 자원봉사 참여의 오즈는 16.3% 감소했고, 삶에 대한 평가가 고난에 해당하는 집단에 비해 번영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 참여의 오즈가 95.4%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5)과 모형(6)의 모형에서는 지역을 제외하고 두 모형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 통제 변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표 4-7〉 주관적 웰빙과 친사회적 행동: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2

			pooled logit,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참여 = 1					
			(5) 2025			(6) 2025		
			Odds ratio	Robust s.e.	z	Odds ratio	Robust s.e.	z
주관적 웰빙	부정정서2 (어제 걱정) (z-score)		0.837**	0.055	-2.7			
	삶에 대한 평가 (ref.고난)	분투 변영				1.026	0.251	0.1
						1.954**	0.414	3.2
성별(ref.남성)	여성		1.177	0.169	1.1	1.189	0.178	1.2
연령 (ref.19~39세)	40~59세		1.917***	0.274	4.6	1.929***	0.282	4.5
	60세 이상		2.992***	0.780	4.2	3.039***	0.803	4.2
교육수준 (ref.중졸 이하)	고졸		1.128	0.223	0.6	1.130	0.217	0.6
	대졸 이상		2.381***	0.590	3.5	2.293**	0.547	3.5
혼인상태 (ref.유배우)	무배우		0.762	0.137	-1.5	0.773	0.148	-1.4
ln_가구소득			1.710***	0.230	4.0	1.646***	0.230	3.6
경제활동 상태 (ref. 상용)	임시, 일용, 특고		0.970	0.219	-0.1	0.999	0.250	0.0
	고용주, 자영자		0.770	0.108	-1.9	0.774*	0.098	-2.0
	무급가족종사자		0.638	0.297	-1.0	0.676	0.291	-0.9
	실업자		1.114	0.578	0.2	1.192	0.704	0.3
	비경활		0.721*	0.108	-2.2	0.731	0.124	-1.9
지역 더미 (ref. 서울)	부산		0.622***	0.025	-11.9	0.798***	0.037	-4.9
	대구		1.116**	0.041	3.0	1.230***	0.024	10.8
	인천		2.205***	0.082	21.3	2.357***	0.105	19.3
	광주		1.856***	0.187	6.1	1.628***	0.150	5.3
	대전		1.270***	0.052	5.9	1.458***	0.036	15.2
	울산		0.998	0.056	-0.0	1.087	0.074	1.2
	세종		1.551***	0.132	5.1	1.401**	0.137	3.4

		pooled logit,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참여 = 1					
		(5) 2025			(6) 2025		
		Odds ratio	Robust s.e.	z	Odds ratio	Robust s.e.	z
	경기	1.013	0.039	0.3	1.114*	0.056	2.2
	강원	1.477***	0.070	8.2	1.448***	0.081	6.6
	충북	1.910***	0.069	17.8	2.130***	0.092	17.5
	충남	2.145***	0.082	19.9	2.270***	0.088	21.2
	전북	1.283***	0.043	7.4	1.356***	0.062	6.7
	전남	0.878*	0.050	-2.3	0.924	0.063	-1.2
	경북	1.153	0.085	1.9	1.239**	0.093	2.9
	경남	1.098*	0.047	2.2	1.238**	0.082	3.2
	제주	1.087	0.050	1.8	1.186*	0.090	2.3
n		3,003			3,003		
Pseudo R <sup>2</sup>		0.0728			0.0787		

주: \*\*\* p<0.001, \*\* p<0.01, \* p<0.05

모형(1)~모형(6)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주관적 웰빙과 기부 참여의 관계는 유관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삶의 만족, 긍정정서, 부정정서의 상태가 양호하고 삶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인 경우(변영에 속할 경우) 기부 참여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 모두에서 삶에 대한 평가가 변영에 해당할 때 참여의 오즈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은 삶에 대한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여건들이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사회자본을 확충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다. 주관적 웰빙과 투표 참여

주관적 웰빙과 19대, 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여부와와의 관계를 살펴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그림과 같다. 앞서 설명한 대로 거의 매년 선거 투표 참여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뤄졌지만 여기서는 역인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선과 조사가 같은 해에 실시된 2017년과 2025년 자료만을 각각 활용하여 횡단면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 성향을 통제 변수로 함께 투입하였다. 선행 연구(예: Helliwell, Layard, & Sachs, 2021)는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은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 높고, 선거가 치러진 당시의 집권당이나 현재의 상태(예: 영국의 EU 잔류)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경향성이 한국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관찰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와 2025년 21대 대통령선거는 모두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조기대선이다. 21대의 경우 조기대선과 대통령 탄핵 사이에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도 있었다.

2017년 자료로 주관적 웰빙과 19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여부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삶의 만족도가 1표준편차 증가할때 투표 참여 오즈가 16.0% 증가했으며, 긍정정서가 1표준편차 증가할 때는 투표 참여 오즈가 20.7% 증가했다. 부정정서1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Ward(2019)의 연구에서는 행복, 즐거움, 미소, 웃음과 같은 감정(feeling)은 투표 참여와 유관하고 스트레스, 분노, 걱정과 같은 부정정서(negative emotions)는 투표 참여 여부와 유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는 가구소득을 통제한 뒤에도 유의했으며, 가구소득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모형(1)~모형(3)에서 공통적으로 유의성을 갖는 통제 변수는 다음과 같다. 19~39세에 비해 40~59세, 60세 이상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고, 중졸 이하에 비해서는 대졸 이상이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혼인상태의 경우 유배우에 비해 무배우인 경우 투표 참여 확률이 낮았는데 이는 연령과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 상용직에 비해 실업자인 경우 투표 참여 확률이 통계적으로 낮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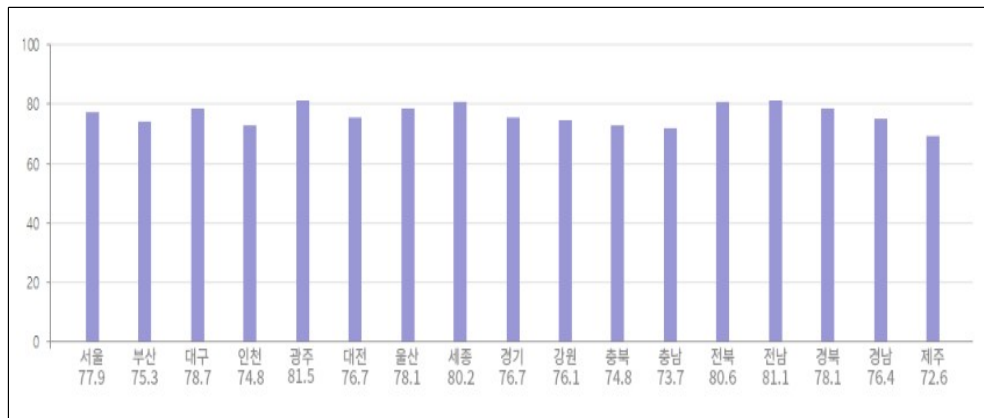
서울에 비해 투표 참여 확률이 높은 지역은 광주, 대전, 경기, 전남, 경남이었으며,

전남과 광주에 참여 확률이 특히 두드러지게 큰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지역별 투표율은 서울 78.6%, 광주 82.0%, 대전 77.5%, 경기 77.1%, 전남 78.8%, 경남 77.8%이다.

정치 성향의 경우에는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 매우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투표 참여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10] 19대 대통령 선거(2017. 5. 9) 지역별 투표율

(단위: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 [http://info.nec.go.kr/main/main\\_previous\\_load.xhtml](http://info.nec.go.kr/main/main_previous_load.xhtml) 2025.7.15. 인출.

〈표 4-8〉 주관적 웰빙과 19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logit, 투표 참여 = 1, 19대(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1) 2017		(2) 2017		(3) 2017	
		Odds ratio	Robust s.e.	z	Odds ratio	Robust s.e.	z
주관적 웰빙 (z-score)	삶의 만족도	1.160*	0.087	2.0			
	긍정적서 (어제 행복)				1.207***	0.055	4.1
	부정적서1 (어제 우울)						-1.4
성별 (ref. 남성)	여성	0.889	0.168	-0.6	0.888	0.162	-0.7
연령 (ref. 19~39세)	40~59세	2.117**	0.485	3.3	2.143**	0.507	3.2
	60세 이상	4.352***	1.451	4.4	4.556***	1.535	4.5
교육수준 (ref. 중졸 이하)	고졸	1.218	0.357	0.7	1.221	0.361	0.7
	대졸 이상	2.006***	0.389	3.6	2.015***	0.401	3.5
혼인상태 (ref. 유배우)	무배우	0.580***	0.091	-3.5	0.589***	0.090	-3.5
ln_가구소득		0.961	0.144	-0.3	0.963	0.147	-0.3
경제활동 상태 (ref. 상용)	임시, 일용, 특고	0.703	0.168	-1.5	0.737	0.175	-1.3
	고용주, 자영업자	0.842	0.158	-0.9	0.844	0.162	-0.9
	무급가족종사자	1.614	0.986	0.8	1.627	0.987	0.8
	실업자	0.578*	0.150	-2.1	0.583*	0.140	-2.3
	비경활	0.885	0.234	-0.5	0.883	0.235	-0.5
정치성향 (ref. 중도적)	매우 보수적	0.778	0.257	-0.8	0.781	0.251	-0.8
	대체로 보수적	1.097	0.223	0.5	1.110	0.225	0.5

		logit, 투표 참여 = 1, 19대(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1) 2017			(2) 2017		
		Odds ratio	Robust s.e.	z	Odds ratio	Robust s.e.	z
지역 터미 (ref.서울)	대체로 진보적 매우 진보적	1.437	0.372	1.4	1.445	0.378	1.4
		3.706*	2.132	2.3	3.812*	2.179	2.3
	부산	0.911*	0.039	-2.2	0.914*	0.033	-2.5
	대구	0.840***	0.049	-3.0	0.837***	0.051	-3.0
	인천	0.717***	0.030	-7.9	0.722***	0.032	-7.3
	광주	3.523***	0.085	52.3	3.540***	0.090	49.7
	대전	1.415***	0.069	7.2	1.399***	0.058	8.2
	울산	0.923*	0.036	-2.0	0.954	0.039	-1.2
	세종	0.683***	0.039	-6.7	0.685***	0.042	-6.2
	경기	1.275***	0.039	7.9	1.275***	0.040	7.7
	강원	0.875	0.061	-1.9	0.886	0.065	-1.7
	충북	0.625***	0.042	-6.9	0.597***	0.050	-6.2
	충남	0.933	0.048	-1.4	0.916	0.050	-1.6
	전북	1.134*	0.070	2.0	1.136	0.074	2.0
	전남	3.587***	0.269	17.1	3.644***	0.307	15.3
	경북	0.830***	0.046	-3.4	0.855***	0.051	-2.7
	경남	1.116*	0.050	2.4	1.113*	0.052	2.3
	제주	1.021	0.076	0.3	1.032	0.085	0.4
n		3,817			3,817		
Pseudo R <sup>2</sup>		0.0751			0.0765		

21대 대통령선거는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1, 부정정서2, 유다이모니아, 삶에 대한 평가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와의 관계를 살펴봤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9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삶의 만족도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긍정정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부정정서1이 통계적 유의성을 띠지 않은 점은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유다이모니아 지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1표준편차 증가할 때 투표 참여 오즈가 39.5%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치 성향의 영향은 19대와 다르게 나타나 주목할 만하다. 19대는 중도적이라는 응답에 비해 매우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경우 투표 참여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21대에는 중도적이라는 응답에 비해 대체로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경우의 투표 참여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매우 진보적인 경우에는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두 대선은 모두 18대 대통령과 20대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21대 대통령선거는 12.3 비상계엄 후 치러졌다는 점에서 이 같은 차이점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2025년에 신규 투입된 부정정서2(어제 걱정), 유다이모니아, 삶에 대한 평가 중에서는 유다이모니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제 변수의 영향력은 여섯 개 모형 모두에서 19~39세에 비해 60세 이상의 투표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졸 이하에 비해 대졸 이상의 투표 참여 오즈가 높았다. 또한 유배우에 비해 무배우인 경우 투표 참여가 유의하게 낮았다. 여섯 개 모형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실업자와 비경활은 상용직에 비해 네 개의 모형에서 투표 참여 오즈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전남 지역의 응답자는 21대 대통령선거에서 100% 투표에 참여하여 해당 범주계수는 식별되지 않아 Stata가 자동 제외하였으며, 이를 염두에 두어 지역별 투표 참여 오즈비는 별도로 해석을 제시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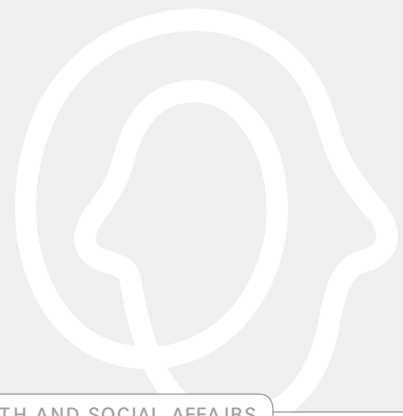
〈표 4-9〉 주관적 웰빙과 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1

		logit, 투표 참여 = 1, 21대(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1) 2025				(2) 2025			
		Odds ratio	Robust s.e.	z		Odds ratio	Robust s.e.	z	
주관적 웰빙 (z-score)	삶의 만족도 긍정적(아제 행복) 부정적(아제 우울)	1.192	0.178	1.2		1.265*	0.126	2.4	
						0.850	0.101	-1.4	
성별 (ref. 남성)	여성	1.437	0.651	0.8		1.416	0.641	0.8	
연령 (ref. 19~39세)	40~59세	1.360	0.500	0.8		1.381	0.516	0.9	
	60세 이상	4.661***	2.301	3.1		4.830**	2.265	3.4	
교육수준 (ref. 중졸 이하)	고졸	1.088	0.321	0.3		1.085	0.338	0.3	
	대졸 이상	2.403*	0.996	2.1		2.335*	0.987	2.0	
혼인상태 (ref. 유배우)	무배우	0.411***	0.137	-2.7		0.424***	0.129	-2.8	
						0.401**	0.123	-3.0	
ln_가구소득		0.585	0.229	-1.4		0.597	0.236	-1.3	
경제활동 상태 (ref. 상용)	임시, 일용, 특고	0.906	0.359	-0.3		0.908	0.349	-0.3	
	고용주, 자영자	1.007	0.429	0.0		1.031	0.427	0.1	
	무급가족종사자	0.955	0.944	-0.1		0.921	0.871	-0.1	
	실업자	0.503*	0.162	-2.1		0.501*	0.157	-2.2	
	비경활	0.445*	0.180	-2.0		0.442*	0.174	-2.1	
정치성향 (ref. 매우 보수적)	매우 보수적	0.552	0.471	-0.7		0.579	0.502	-0.6	
	대체로 보수적	1.013	0.314	0.0		1.011	0.314	0.0	
	대체로 진보적	3.504***	1.281	3.4		3.505***	1.284	3.4	
	매우 진보적	2.204	1.323	1.3		2.193	1.327	1.3	
						2.256	1.370	1.3	

logit, 투표 참여 = 1, 21대(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1) 2025				(2) 2025			
	Odds ratio	Robust s.e.	z		Odds ratio	Robust s.e.	z
지역 더미 (ref.서울)	부산	1.411***	0.095	5.1	1.418***	0.070	7.0
	대구	0.416***	0.027	-13.3	0.425***	0.029	-12.7
	인천	0.711***	0.043	-5.6	0.739***	0.053	-4.3
	광주	0.729	0.164	-1.4	0.771	0.128	-1.6
	대전	2.697***	0.263	10.2	2.692***	0.269	9.9
	울산	0.589***	0.061	-5.1	0.572***	0.055	-5.8
	세종	1.464	0.326	1.7	1.480	0.359	1.6
	경기	0.425***	0.022	-16.4	0.432***	0.020	-18.5
	강원	0.635***	0.026	-11.1	0.645***	0.029	-9.8
	충북	0.603***	0.063	-4.8	0.618***	0.076	-3.9
	충남	0.442***	0.038	-9.6	0.450***	0.043	-8.4
	전북	0.755***	0.081	-2.6	0.769*	0.096	-2.1
	전남	1.000	(empty)		1.000	(empty)	
	경북	0.691***	0.051	-5.0	0.680***	0.044	-5.9
	경남	0.751***	0.023	-9.3	0.736***	0.024	-9.3
	제주	0.898	0.053	-1.8	0.967	0.060	-0.5
n				2,824			
Pseudo R <sup>2</sup>				0.1160			
				0.1181			



		logit, 투표 참여 = 1, 21대(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4) 2025			(5) 2025					
		Odds ratio	Robust s.e.	z	Odds ratio	Robust s.e.	z			
정치성향 (ref. 중도적)	매우 보수적	0.522	0.421	-0.8	0.558	0.471	-0.7	0.584	0.453	-0.7
	대체로 보수적	1.002	0.308	0.0	1.003	0.310	0.0	1.023	0.309	0.1
	대체로 진보적	3.348***	1.261	3.2	3.567***	1.362	3.3	3.543***	1.264	3.6
	매우 진보적	1.960	1.152	1.2	2.227	1.341	1.3	2.428	1.488	1.5
지역 더미 (ref. 서울)	부산	1.361***	0.086	4.9	1.314*	0.182	2.0	1.606***	0.201	3.8
	대구	0.390***	0.027	-13.8	0.391***	0.029	-12.8	0.403***	0.035	-10.5
	인천	0.721***	0.043	-5.5	0.673***	0.047	-5.7	0.711***	0.062	-3.9
	광주	0.852	0.181	-0.8	0.665*	0.122	-2.2	0.574**	0.115	-2.8
	대전	2.769***	0.257	11.0	2.612***	0.298	8.4	2.732***	0.199	13.8
	울산	0.605***	0.052	-5.9	0.544***	0.039	-8.4	0.603***	0.056	-5.4
	세종	1.474	0.356	1.6	1.434	0.339	1.5	1.304	0.245	1.4
	경기	0.438***	0.021	-17.6	0.412***	0.018	-20.3	0.435***	0.024	-14.8
	강원	0.619***	0.031	-9.5	0.639***	0.027	-10.5	0.639***	0.043	-6.6
	충북	0.570***	0.058	-5.5	0.598***	0.077	-4.0	0.624***	0.076	-3.9
	충남	0.447***	0.040	-9.0	0.422***	0.046	-8.0	0.421***	0.040	-9.1
	전북	0.770*	0.087	-2.3	0.759*	0.091	-2.3	0.756*	0.103	-2.1
	전남	1.000	(empty)		1.000	(empty)		1.000	(empty)	
	경북	0.727***	0.054	-4.3	0.644***	0.056	-5.0	0.669***	0.055	-4.9
	경남	0.726***	0.022	-10.7	0.708***	0.049	-5.0	0.753***	0.021	-10.0
	제주	0.809***	0.027	-6.4	0.856**	0.040	-3.3	0.913	0.060	-1.4
n		2,824			2,824			2,824		
Pseudo R <sup>2</sup>		0.1212			0.1161			0.1175		



## 제5장

### 정치 성향, 가치 지향, 미래 인식과 복지에 대한 태도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문헌 고찰

제3절 분석 방법 및 결과



## 제5장

# 정치 성향, 가치 지향, 미래 인식과 복지에 대한 태도

### 제1절 들어가며

여기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 성향과 복지에 대한 태도, 사회·미래 인식과 복지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현시점의 한국 사회 지형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다양화하고 사회통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정치적 갈등의 심화, 공동체 의식의 약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개인의 정치 성향,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 현재와 미래 삶에 대한 평가가 복지에 대한 태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요인들이 복지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를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개인의 정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정치 성향과 복지에 대한 태도, 사회·미래 인식과 복지에 대한 태도를 분석할 것이다.

### 제2절 문헌 고찰

Cakanlar and White(2023)는 개인, 사회, 시스템(거시적) 차원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을 시도했다. 이들은 다양한 집단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가치(personal value)가 정치 성향(political orientation)을 결정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iurko et al., 2011), 정서 상태(emotional state) 또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적 차원에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집단을 설득할 때 해당 집단의 규범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회 문제를 다룰 때, 각 집단에서 수용되는 상징 또는 언어를 고려하고 여러 집단에 수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이를테면 기후 문제에 대해 보수주의자들에게는 기후 변화의 악영향을 강조하기보다 기후 변화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이, 진보주의자들에게는 기후 변화의 악영향이나 기후 변화 상황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기후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용이하다는 것이다(Cakanlar & White, 2023). 끝으로 시스템적(거시적) 차원에서는 문제 해결에 있어 각 집단이 지닌 권위, 사회 정의, 공정성과 같은 도덕적 가치에 대한 민감성과 경제 구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Cakanlar & White, 2023).

정치 성향(political orientation), 정치적 이데올로기(political ideology), 정치적 정체성(political identity)에 대한 연구들은 ‘보수-진보’ 혹은 ‘좌파-우파’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보수-진보’, ‘좌파-우파’ 구분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고 최근 들어서는 급진주의와 극단주의를 식별하는 연구(예: Jungkunuz et al., 2024)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중 정치 성향의 의미, 활용을 다루는 연구들은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단일하지 않으며, 각 집단 내에서 지향하는 가치, 성격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태도와 행동 변화를 보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Cakanlar & White, 2023). 그 외에도 정치 성향을 다룬 연구들은 자기 보고식의 ‘보수-진보’, ‘좌파-우파’ 스펙트럼 척도의 한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정치 성향과 정책 선호 간의 불일치를 살펴보기도 했다.

자기 보고식의 ‘보수-진보’, ‘좌파-우파’ 스펙트럼 척도와 관련된 논의는 각 국가의 다양성에 근거하여 살펴봐야 할 주제이기도 하고 추상적 개념에 대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공통된 합의를 가질 수 있는지(용어의 해석)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이를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은 Huber and Inglehart(1995)의 연구에서 인용해 볼 수 있다. 해당 연구는 42개 사회에 대한 조사 결과, ‘좌파-우파’의 차원은 정당이 있는 거의 모든 곳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정치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 의미가 체계적으로 달라지는 무정형의 그릇’이라고 서술했다. 또한 사람들이 사회적 시선 혹은 사회적 기준에 따라 자신의 극단 정치 성향을 숨길 수도 있다(Ajzen, 1991)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자기 보고식의 정치 성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들은 정치 성향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대한 응답자들의 대답은 구체적인 이슈의 제기로 이어지지 못함을 보고하기도 한다(Bauer et al., 2017). 그뿐 아니라 선행연구들은 개인마다 자신이 어느 쪽과 가까운지를 판단하는 데 대한 이해가 다르고(Bauer et al., 2017), 이는 시간에 따

라 달라지기도 하며(Neundorf, 2009), 사람들은 극단적인 의견을 숨기는 경향(Tourangeau & Yan, 2007)이 있어 정치 성향을 스펙트럼 척도로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Jungkunz & Osenbrügge, 2024).

현실적으로는 자기 보고에 따른 정치 성향이 지닌 유용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좌파-우파’ 또는 ‘진보-보수’의 단일 척도는 정치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척도이며, 정치적 정보(political information)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척도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Downs, 1957; Jost, Nosek, & Gosling, 2008; Lipset, 1960; Fuchs & Klingemann, 1990; Jungkunz & Osenbrügge, 2024에서 재인용)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여기서는 한국에서 관찰되는 정치적 균열의 양상을 정치 성향 척도만으로는 드러낼 수 없다는 제한점을 수용하면서 정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적 이데올로기, 정치 성향, 정치적 정체성의 다차원성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예: Klar, 2014). 이러한 연구들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측정이 최소한 사회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예: Asher 1980; Weisberg 1980; Shafer & Claggett 1995; Carmines, Ensley, & Wagner 2012; Klar, 2014에서 재인용). Klar(2014)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11%가 사회적, 경제적 차원과 단일 진보-보수 스펙트럼 척도에서 상이한 인식을 보였으며, 실제 투표 선택은 전통적 단일 차원에서 측정된 정치 성향보다 사회적, 경제적 이슈 차원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Piurko et al. (2011)은 유럽 사회조사(2000~2003) 자료를 활용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국가-(자유주의(liberal), 전통주의(traditional), 탈공산주의(postcommunist)-에서 개인의 가치관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정치 성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분석한 바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유주의와 전통주의 국가에서는 보편주의와 박애주의의 가치가 좌파(left orientation) 성향을 결정짓지만 탈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이 영향력이 없음을 설명했으며, 개인 가치관이 정치 성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보다 더 강하게, 전통주의 국가에서는 비슷하게, 탈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더 약하게 나타난다. 더 나아가 가치관이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비해 정치 성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가치관이 투표

에 있어 사회구조적 지위와 집단 충성도를 대체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Caprara & Zimbardo, 2004; Caprara et al., 2006; Schwartz et al., 2012). 역사적으로는 우파는 귀족주의와 보수주의, 좌파는 사회개혁과 평등주의와 관계가 있으나, 공산주의의 붕괴와 새로운 정치의 등장은 이러한 의미에 도전장을 던졌다고 본다(예: Kitschelt & Hellemans, 1990; Knutsen, 1995).

다른 선행연구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정책과 정당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Barnea & Schwartz, 1998; Schwartz et al., 2012). 변화에 대한 개방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시민권을 보호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선호하고 자기 향상(self-enhancement)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은 정부의 개입 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자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선호한다고 본다(Piurko, Schwartz, & Davidov, 2011). 보수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기존 체제를 방어하고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진보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평등과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경향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Piurko, Schwartz, & Davidov, 2011).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여기서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중 우선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이 복지에 대한 태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진보-보수 성향과 정책 선호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는 연구들도 있다. 해당 연구들은 이러한 괴리가 진보-보수의 성향은 상징적 이념(symbolic ideology)에 해당하고 정책 선호는 구체화된 조작적 이념(operational ideology)이기 때문이라 설명한다(Ellis & Stimson, 2012). 즉, Ellis and Stimson은 정책 선호는 진보-보수 정치 성향은 생활 습관, 종교와 같은 사회적·개인적 정체성과 더욱 밀접하기 때문이라 본다(Ellis & Stimson, 2012; 장승진, 2020에서 재인용). 여기서는 그러한 경향성이 한국에서도 관찰되는지를 일부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 제3절 분석 방법 및 결과

### 1. 변수 활용

정치 성향은 2014~2019년, 2021~2025년 ‘귀하의 이념적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에 대해 보수-진보 성향을 5점 척도(①매우 보수적, ②대체로 보수적, ③중도적, ④대체로 진보적, ⑤매우 진보적)로 응답하도록 조사되었다.

개인주의-공동체주의 가치지향은 ‘귀하는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5점 척도(①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 ⑤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로 응답하도록 조사되었다. 회귀모형에서는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응답한 ③을 기준집단으로 투입하였다.

미래 인식은 앞서 주관적 웰빙 분석에서 활용했던 바와 같이 현재에 대한 평가가 7점 이상, 미래에 대한 평가가 8점 이상인 경우를 번영(thriving)으로, 현재와 미래에 대한 평가 모두가 4점 이하인 경우를 고통(suffering)으로, 나머지는 분투(struggling)로 구분하였다.

복지에 대한 태도는 증세에 대한 의견으로 측정했다. ‘귀하는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⑩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①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하도록 했다.

### 2. 분석 결과

#### 가. 기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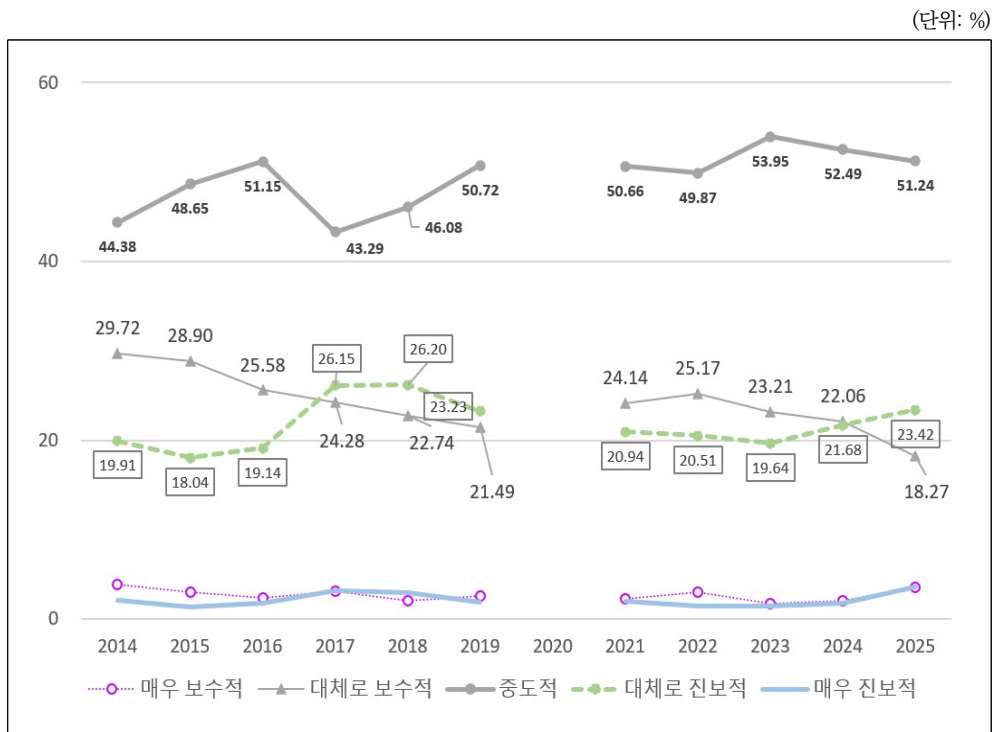
##### ① 정치 성향

먼저, 자기 보고에 따른 정치 성향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4년에서 2024년의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보수적’이라는 응답은 29.72%에서 22.06%로 감소, 중도는 44.38%에서 52.49%로 증가, ‘대체로 진보적’이라는 응답은 19.91%에서 21.68%로 소폭 증가했다. ‘매우 보수적’이라는 응답은 2014년 3.86%에서 2024년

2.00%로 약 절반가량 줄어들었으며, ‘매우 진보적’이라는 응답은 2.13%에서 1.78%로 감소했다.

2025년에는 ‘매우 보수적’이라는 응답과 ‘대체로 진보적’, ‘매우 진보적’이라는 응답이 2024년과 비교하여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이 또한 시계열로 볼 때는 2014년 ‘매우 보수적’이라는 응답이 3.86%로 2025년 3.50%에 비해 더 높다는 점에서 2025년의 수치를 이례적이라 보기는 어렵다. ‘매우 진보적’이라는 응답은 2014년~2025년 중 2025년이 3.57%로 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5-1] 연도별 정치 성향 분포



〈표 5-1〉 정치 성향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2023	2024	2025
매우 보수적	3.86	3.04	2.36	3.16	2.08	2.62	2.27	2.97	1.76	2.00	3.50
대체로 보수적	29.72	28.90	25.58	24.28	22.74	21.49	24.14	25.17	23.21	22.06	18.27
진보적	44.38	48.65	51.15	43.29	46.08	50.72	50.66	49.87	53.95	52.49	51.24
대체로 진보적	19.91	18.04	19.14	26.15	26.20	23.23	20.94	20.51	19.64	21.68	23.42
매우 진보적	2.13	1.38	1.77	3.13	2.91	1.93	1.99	1.48	1.44	1.78	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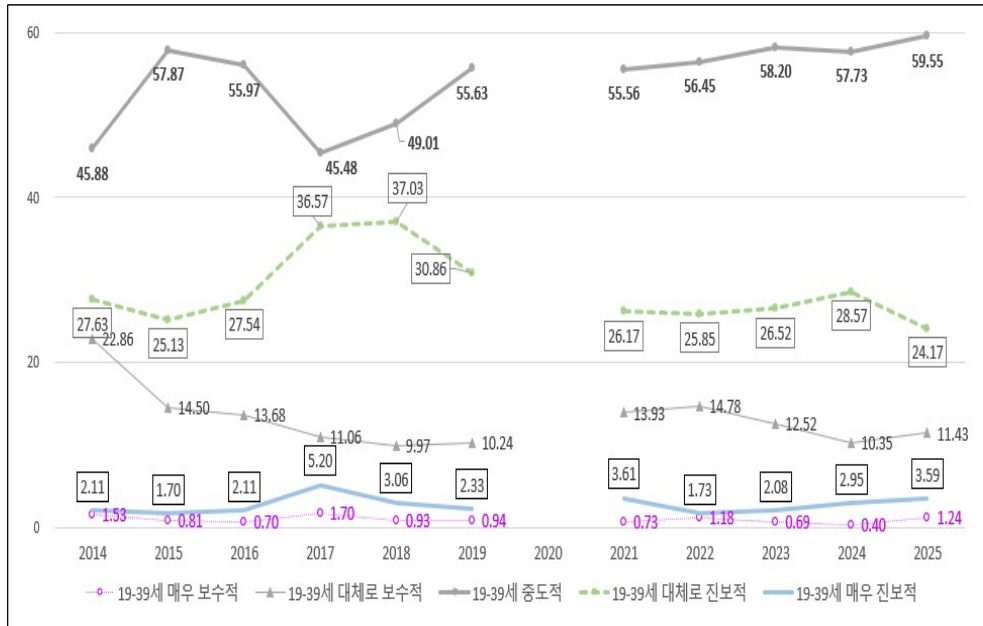
다음은 정치 성향을 연령 범주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분석 결과를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19~39세의 경우 매우 보수적, 중도적, 매우 진보적이라는 응답이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연령의 정치 성향을 분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시계열로 살펴보면 앞서 청년층의 매우 보수적이라는 응답은 2014년이 1.53%로 가장 높았고, 매우 진보적이라는 응답은 2017년 5.20%로 가장 높아 2025년의 분석 결과가 이례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40~59세는 매우 보수적, 매우 진보적이라는 응답과 대체로 진보적이라는 응답이 증가했고, 대체로 보수적이라는 응답은 20.96%에서 14.30%로 급감했다. 60세 이상에서도 매우 보수적, 매우 진보적이라는 응답과 대체로 진보적이라는 응답이 증가했다. 60세 이상에서 대체로 보수적이라는 응답은 39.21%에서 32.89%로 감소했다.

정리하면, 정치 성향을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 2024년과 비교하여 2025년에는 전 연령대에서 매우 보수적, 매우 진보적이라는 응답이 증가했다. 그러나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시계열상으로도 매우 눈에 띄는 수치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년층은 양극단의 정치 성향과 더불어 중도적이라는 응답 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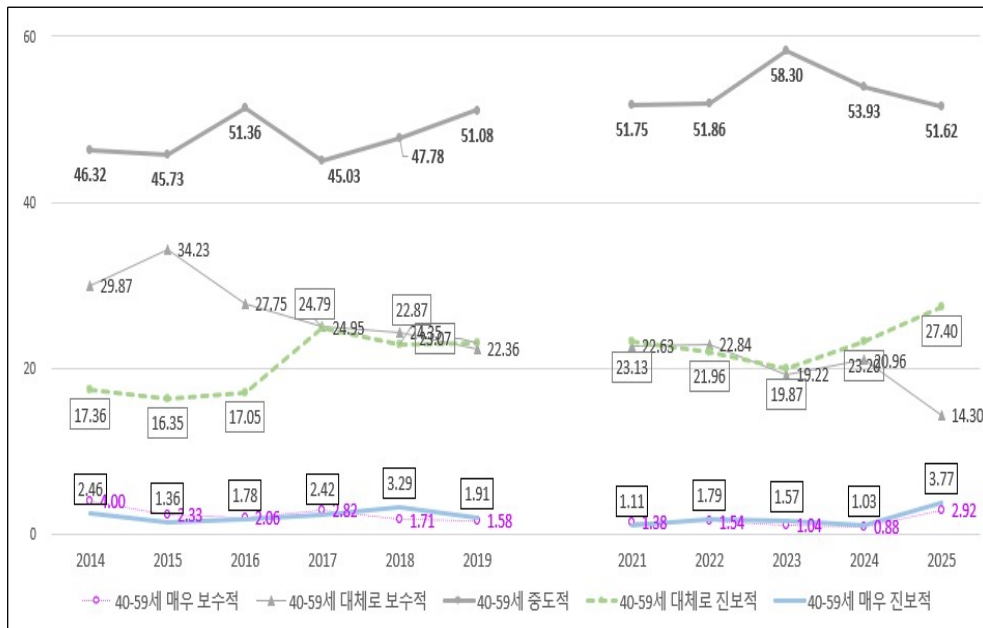
[그림 5-2] 연도별 정치 성향 분포: 19~39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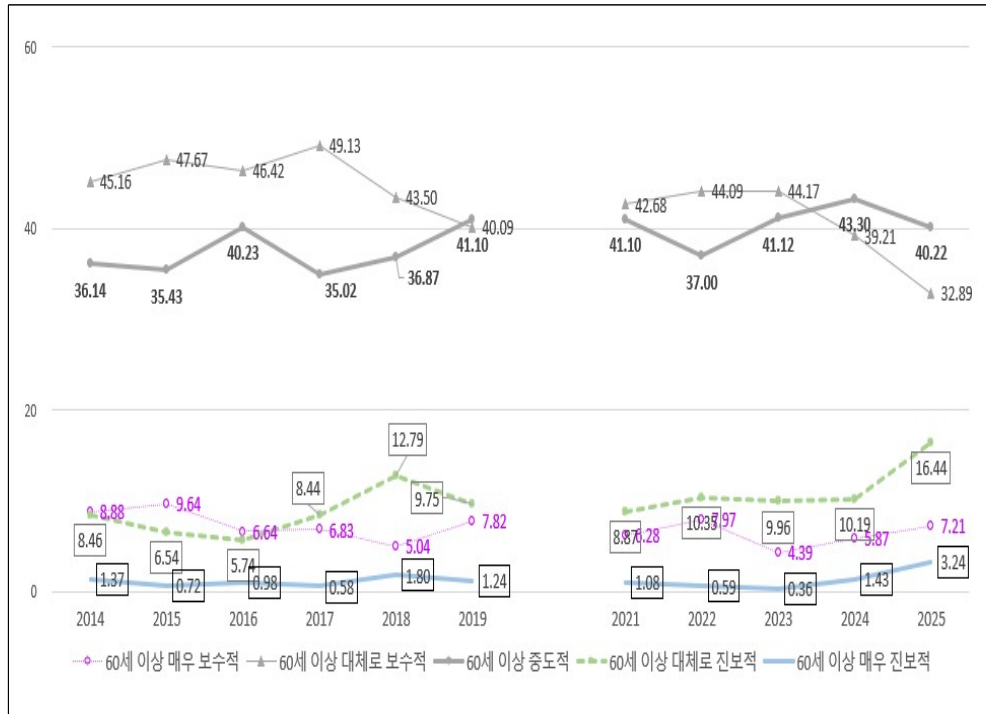
[그림 5-3] 연도별 정치 성향 분포: 40~59세

(단위: %)



[그림 5-4] 연도별 정치 성향 분포: 60세 이상

(단위: %)



## ② 개인주의-공동체주의 가치지향

전체와 비교하여, 19~39세는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공동체와 개인의 이익이 동일한 비중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은 41%대로 거의 비슷했다.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전체(4.04%)에 비해 19~39세의 응답 비율(5.96%)이 살짝 더 높았다.

60세 이상은 전체와 비교하여,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과 공동체와 개인의 이익이 동일한 비중으로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40~59세는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과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비율 모두 전체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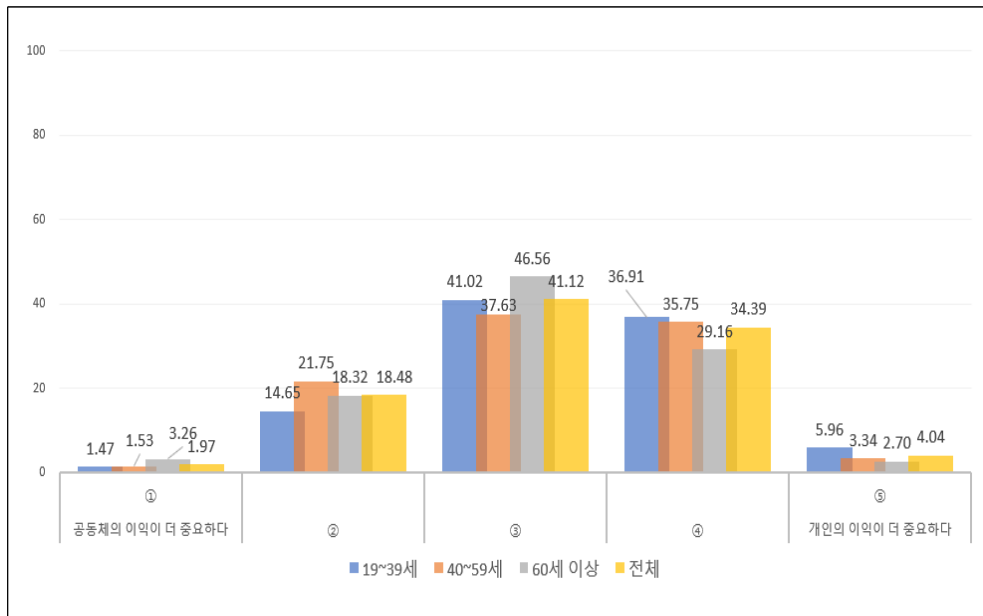
〈표 5-2〉 가치 지향

(단위: %)

구분	①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②	③	④	⑤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전체	1.97	18.48	41.12	34.39	4.04
19~39세	1.47	14.65	41.02	36.91	5.96
40~59세	1.53	21.75	37.63	35.75	3.34
60세 이상	3.26	18.32	46.56	29.16	2.70

[그림 5-5] 가치 지향 분포

(단위: %)



### ③ 증세에 대한 태도

증세에 대해서는 전체(4.41점)와 비교하여 40~59세의 동의 정도가 4.56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60세 이상(4.42점), 19~39세(4.24점)로 나타났다.

〈표 5-3〉 증세에 대한 태도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체	4.41	2.38
19~39세	4.24	2.30
40~59세	4.56	2.42
60세 이상	4.42	2.41

#### 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정치 성향

2014~2019년, 2021~2025년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응답자와 청년층(19~39세) 각각의 정치 성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를 분석했을 때는, 여성일 경우, 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이거나 대졸 이상인 경우, 유배우에 비해 미혼인 경우, 하층에 비해 중간층이라 응답했을수록 진보적이라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연도별로는 2014년에 비해 2017년 이후로는 쪽 진보적이라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지역은 서울에 비해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가 진보적이라 응답했을 가능성이 컸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상용에 비해 비경활인 경우, 서울에 비해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 경북, 경남은 보수적이라 응답했을 가능성이 컸다.

청년층의 경우, 여성, 2014년에 비해 2017년, 2018년, 2019년, 2021년, 2023년, 2024년이 진보적이라 응답했을 가능성이 컸다. 2025년 또한  $z$ 값이 2.0이며  $P>|z|=0.051$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비해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가 청년은 연령이 낮을수록, 상용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가, 주관적 소득계층이 하층인 경우에 비해 상층이라고 응답한 경우, 지역은 서울에 비해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가 진보적이라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컸다.

〈표 5-4〉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정치 성향

		pooled ordered logit.			pooled ordered logit.		
		(1) 정치 성향 2014~2019, 2021~2025			(2) 청년층(19~39세) 정치 성향 2014~2019, 2021~2025		
		Odds ratio	Robust s.e.	z	Odds ratio	Robust s.e.	z
성별 (ref. 남성)	여성	1.051*	0.022	2.4	1.198***	0.043	5.0
연령 (ref. 19~39세)	40~59세	0.657***	0.029	-9.5			
	60세 이상	0.273***	0.022	-16.2			
교육수준 (ref. 중졸 이하)	고졸	1.208***	0.032	7.2	1.331	0.280	1.4
	대졸 이상	1.454***	0.045	12.0	1.343	0.298	1.3
연령(1세 단위)		-	-	-	0.987**	0.004	-3.2
혼인상태 (ref. 유배우)	무배우	1.140***	0.042	3.6	1.051	0.057	0.9
ln_가구소득		1.054*	0.023	2.4	1.087	0.058	1.6
경제활동 상태 (ref. 상용)	임시, 일용, 특고	0.939**	0.019	-3.1	0.926	0.088	-0.8
	고용주, 자영자	0.924*	0.030	-2.4	1.040	0.080	0.5
	무급가족종사자	0.828***	0.044	-3.6	0.658**	0.079	-3.5
	실업자	0.965	0.063	-0.5	0.859	0.093	-1.4
	비경활	0.927**	0.022	-3.3	0.952*	0.021	-2.2
주관적 소득계층 (ref. 하층)	중하층	1.111*	0.050	2.3	1.082	0.100	0.9
	중간층	1.159***	0.044	3.9	1.051	0.089	0.6
	중상층	1.056	0.111	0.5	0.981	0.122	-0.2
	상층	0.982	0.194	-0.1	0.301*	0.147	-2.5
연도 더미 (ref. 2014)	2015	0.953	0.146	-0.3	1.136	0.167	0.9
	2016	1.106	0.090	1.2	1.269*	0.130	2.3
	2017	1.453***	0.075	7.2	1.997***	0.172	8.0
	2018	1.529***	0.114	5.7	1.908***	0.251	4.9
	2019	1.393***	0.102	4.5	1.532**	0.215	3.0
	2021	1.269***	0.066	4.6	1.285*	0.130	2.5
	2022	1.157	0.105	1.6	1.111	0.123	1.0
	2023	1.266**	0.103	2.9	1.262*	0.138	2.1
	2024	1.357***	0.082	5.0	1.436***	0.145	3.6
	2025	1.549***	0.093	7.3	1.227	0.129	2.0
지역 더미 (ref. 서울)	부산	0.822***	0.006	-27.7	1.191***	0.007	28.4
	대구	0.489***	0.005	-71.3	0.530***	0.007	-48.2
	인천	0.968***	0.004	-7.1	0.934***	0.008	-7.8
	광주	1.806***	0.013	84.7	1.584***	0.016	44.3
	대전	1.110***	0.004	29.1	0.877***	0.007	-17.6
	울산	0.943***	0.002	-25.0	1.151***	0.009	17.6
	세종	1.186***	0.012	16.5	1.056***	0.013	4.3
	경기	1.036***	0.002	18.5	1.098***	0.008	12.9
	강원	0.915***	0.010	-8.3	0.904***	0.008	-11.7
	충북	1.175***	0.009	21.3	1.027***	0.007	3.9

		pooled ordered logit.			pooled ordered logit.		
		(1) 정치 성향 2014~2019, 2021~2025			(2) 청년층(19~39세) 정치 성향 2014~2019, 2021~2025		
		Odds ratio	Robust s.e.	z	Odds ratio	Robust s.e.	z
	충남	1.104***	0.010	10.7	1.061***	0.008	7.8
	전북	1.992***	0.025	55.4	1.254***	0.012	24.1
	전남	2.157***	0.037	44.5	1.938***	0.023	55.2
	경북	0.589***	0.008	-36.8	0.693***	0.010	-26.1
	경남	0.910***	0.007	-12.9	1.194***	0.013	16.8
	제주	1.243***	0.010	27.9	1.188***	0.016	12.6
n		40,537			13,813		
Pseudo R <sup>2</sup>		0.0535			0.0143		

주: \*\*\* p<0.001, \*\* p<0.01, \* p<0.05

#### 다. 정치 성향, 사회·미래 인식과 복지에 대한 태도

정치 성향과 복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모형1과 모형2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도 집단과 비교하여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증세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특히 청년층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중도와 비교하여 대체로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증세에 찬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 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를 분석했을 때 중장년층과 고령층에 해당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증세에 찬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청년층만을 분석했을 때도 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과 대졸 이상인 경우 증세에 찬성하는 경향이 더 강했으며, 전체와 비교할 경우 계수의 영향력이 더욱 두드러졌다.

눈에 띄는 점은 모형1과 모형2 모두에서 가구소득의 영향은 증세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구소득 대신 주관적 계층은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하층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 상층이라고 응답한 경우 증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청년층의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청년층만을 분석했을 때는 상용직과 비교하여 고용주, 자영자는 증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지역 효과는 서울에 비해 세종과 제주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2를 살펴보면 인천, 광주와 같은 일부 광역시에서 증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눈에 띈다.

〈표 5-5〉 정치 성향과 복지에 대한 태도

		reg			reg		
		(1) 증세에 대한 태도 2025			(2) 증세에 대한 태도 청년층(19~39세), 2025		
		Coefficient	Robust s.e.	t	Coefficient	Robust s.e.	t
정치 성향 (ref. 중도적)	매우 보수적	-1.092*	0.371	-2.9	-2.567**	0.676	-3.8
	대체로 보수적	-0.385*	0.159	-2.4	-0.198	0.319	-0.6
	대체로 진보적	0.475**	0.133	3.6	0.486*	0.190	2.6
	매우 진보적	-0.673	0.848	-0.8	-0.948	0.717	-1.3
성별 (ref. 남성)	여성	0.027	0.065	0.4	0.315	0.188	1.7
연령 (ref. 19~39세)	40~59세	0.295*	0.135	2.2			
	60세 이상	0.543**	0.163	3.3			
교육수준 (ref. 중졸 이하)	고졸	0.310*	0.116	2.7	1.698*	0.740	2.3
	대졸 이상	0.446*	0.188	2.4	1.883**	0.577	3.3
연령(1세 단위)					0.024*	0.010	2.3
혼인상태 (ref. 유배우)	무배우	-0.241**	0.075	-3.2	-0.285	0.270	-1.1
ln_가구소득		-0.034	0.132	-0.3	-0.122	0.160	-0.8
경제활동 상태 (ref. 상용)	임시, 일용, 특고	0.090	0.161	0.6	0.077	0.387	0.2
	고용주, 자영자	-0.139	0.141	-1.0	-0.459*	0.207	-2.2
	무급가족종사자	-0.028	0.458	-0.1	1.089	0.992	1.1
	실업자	-0.108	0.330	-0.3	-0.081	0.493	-0.2
	비경활	-0.009	0.136	-0.1	0.206	0.317	0.7
주관적 소득계층 (ref. 하층)	중하층	0.180	0.191	0.9	0.164	0.315	0.5
	중간층	0.511	0.268	1.9	0.601	0.467	1.3
	중상층	0.734	0.368	2.0	0.823	0.977	0.8
	상층	3.426***	0.517	6.6	-1.143	1.062	-1.1
지역 더미 (ref. 서울)	부산	-0.533***	0.035	-15.4	0.116	0.068	1.7
	대구	-1.056***	0.068	-15.6	-0.614***	0.131	-4.7
	인천	-0.459***	0.069	-6.7	0.206*	0.089	2.3
	광주	-0.398**	0.122	-3.3	0.205*	0.096	2.2
	대전	-0.622***	0.048	-12.9	0.021	0.070	0.3
	울산	-0.673***	0.049	-13.9	-0.601***	0.073	-8.2
	세종	-0.157	0.082	-1.9	-0.313	0.094	-3.3
	경기	-0.646***	0.056	-11.5	-0.917**	0.073	-12.6
	강원	-0.759***	0.042	-18.1	-0.027***	0.106	-0.3
	충북	-0.573***	0.044	-12.9	0.400	0.061	6.6
	충남	-0.137***	0.024	-5.8	-0.486***	0.082	-5.9
	전북	-0.731***	0.070	-10.4	-1.009***	0.069	-14.7
	전남	-0.799***	0.041	-19.3	-0.301***	0.088	-3.4
	경북	-0.748***	0.065	-11.6	-0.302**	0.091	-3.3
	경남	-0.995***	0.037	-27.3	0.448**	0.075	6.0
	제주	0.074	0.057	1.3	-0.050***	0.087	-0.6
n		3,003			935		
Adj. R <sup>2</sup>		0.0711			0.0939		

주: \*\*\* p&lt;0.001, \*\* p&lt;0.01, \* p&lt;0.05

개인주의-공동체주의 가치 지향과 증세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준집단과 비교하여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증세를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준집단에 비해 공동체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증세에 대한 태도의 효과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대체로 정치 성향과 복지에 대한 태도를 분석했을 때와 비슷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증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청년층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컸다. 가구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주관적 계층은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하층인 경우에 비해 상층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서만 증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영향력은 서울과 비교하여 다수의 지역에서 증세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사회 인식과 복지에 대한 태도

		reg			reg		
		(1) 증세에 대한 태도 2025			(2) 증세에 대한 태도 청년층(19~39세), 2025		
		Coef.	Robust s.e.	t	Coef.	Robust s.e.	t
사회인식 (ref. ③공동체와 개인이 동일하게 중요)	①공동체 이익이 더 중요	-0.033	0.560	-0.1	0.795	1.0	0.8
	②	0.030	0.147	0.2	-0.060	0.3	-0.2
	④	-0.074	0.144	-0.5	-0.170	0.2	-0.7
	⑤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	-1.547**	0.402	-3.9	-1.755**	0.4	-4.3
성별(ref. 남성)	여성	0.015	0.071	0.2	0.208	0.2	1.0
연령 (ref. 19~39세)	40~59세	0.246	0.124	2.0			
	60세 이상	0.325	0.213	1.5			
교육수준 (ref. 중졸 이하)	고졸	0.331*	0.140	2.4	1.896*	0.7	2.7
	대졸 이상	0.512*	0.225	2.3	2.003**	0.6	3.3
연령(1세 단위)					0.022*	0.0	2.2
혼인상태 (ref. 유배우)	무배우	-0.239**	0.080	-3.0	-0.295	0.3	-1.0
ln_가구소득		-0.049	0.119	-0.4	-0.205	0.2	-1.2
경제활동 상태 (ref. 상용)	임시, 일용, 특고	0.143	0.135	1.1	0.227	0.3	0.7
	고용주, 자영자	-0.115	0.151	-0.8	-0.429	0.3	-1.7
	무급가족종사자	0.005	0.453	0.0	0.954	0.9	1.1
	실업자	-0.065	0.307	-0.2	-0.009	0.5	-0.0
	비경활	-0.002	0.108	-0.0	0.205	0.3	0.7

134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XII): 사회 인식 변화의 다차원성

		reg			reg		
		(1) 증세에 대한 태도 2025			(2) 증세에 대한 태도 청년층(19~39세), 2025		
		Coef.	Robust s.e.	t	Coef.	Robust s.e.	t
주관적 소득계층 (ref.하층)	중하층	0.139	0.221	0.6	0.146	0.5	0.3
	중간층	0.474	0.291	1.6	0.650	0.7	1.0
	중상층	0.715	0.427	1.7	0.957	1.2	0.8
	상층	3.597***	0.470	7.7	-0.627	1.3	-0.5
지역 더미 (ref.서울)	부산	-0.639***	0.029	-21.8	-0.046	0.1	-0.9
	대구	-1.214***	0.032	-38.2	-0.883***	0.1	-15.5
	인천	-0.501***	0.045	-11.0	0.051	0.1	0.8
	광주	-0.448***	0.063	-7.1	0.163	0.1	1.3
	대전	-0.537***	0.045	-11.9	0.096	0.1	1.7
	울산	-0.503***	0.064	-7.8	-0.392*	0.1	-2.7
	세종	-0.114	0.064	-1.8	0.069	0.1	0.9
	경기	-0.596***	0.049	-12.2	-0.243*	0.1	-2.7
	강원	-0.715***	0.048	-14.8	-0.781***	0.1	-7.4
	충북	-0.493***	0.053	-9.3	-0.193	0.2	-1.2
	충남	-0.145**	0.037	-3.9	0.425***	0.1	4.6
	전북	-0.614***	0.028	-22.1	-0.438***	0.1	-4.8
	전남	-0.683***	0.049	-14.1	-0.907***	0.1	-8.9
	경북	-0.827***	0.050	-16.3	-0.550***	0.1	-9.9
	경남	-0.976***	0.033	-29.3	-0.244	0.1	-2.1
	제주	0.066	0.061	1.1	0.284**	0.1	4.0
n		3,003			935		
Adj. R <sup>2</sup>		0.0643			0.0934		

주: \*\*\* p<0.001, \*\* p<0.01, \* p<0.05

다음은 정치 성향과 가치 지향을 함께 투입한 결과이다. 모형에서 가치 지향을 함께 통제하더라도 정치 성향과 가치 지향이 증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과 통계적 유의성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7〉 정치 성향, 사회 인식과 복지에 대한 태도

		reg			reg		
		(1) 증세에 대한 태도 2025			(2) 증세에 대한 태도 청년층(19~39세), 2025		
		Coef.	Robust s.e.	t	Coef.	Robust s.e.	t
정치 성향 (ref.중도적)	매우 보수적	-0.975**	0.318	-3.1	-2.183**	0.632	-3.5
	대체로 보수적	-0.387*	0.155	-2.5	-0.283	0.305	-0.9
	대체로 진보적	0.450**	0.137	3.3	0.462*	0.181	2.6
	매우 진보적	-0.570	0.776	-0.7	-0.581	0.598	-1.0

		reg			reg		
		(1) 증세에 대한 태도 2025			(2) 증세에 대한 태도 청년층(19~39세), 2025		
		Coef.	Robust s.e.	t	Coef.	Robust s.e.	t
사회 인식 (ref. ③공동체와 개인이 동일하게 중요)	①공동체 이익이 더 중요	0.045	0.488	0.1	0.864	0.904	1.0
	②	0.013	0.143	0.1	-0.111	0.234	-0.5
	④	-0.089	0.140	-0.6	-0.137	0.233	-0.6
	⑤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	-1.391***	0.320	-4.4	-1.511**	0.423	-3.6
성별(ref. 남성)	여성	0.002	0.079	0.0	0.226	0.192	1.2
연령(ref. 19~39세)	40~59세	0.260	0.128	2.0	-	-	-
	60세 이상	0.477*	0.179	2.7	-	-	-
교육수준(ref. 중졸 이하)	고졸	0.331*	0.118	2.8	1.878*	0.713	2.6
	대졸 이상	0.472*	0.193	2.5	2.003**	0.593	3.4
연령(1세 단위)		-	-	-	0.023*	0.010	2.3
혼인상태(ref. 유배우)	무배우	-0.224**	0.073	-3.1	-0.276	0.282	-1.0
ln_가구소득		-0.045	0.132	-0.3	-0.153	0.185	-0.8
경제활동 상태 (ref. 상용)	임시, 일용, 특고	0.156	0.125	1.3	0.209	0.287	0.7
	고용주, 자영자	-0.119	0.143	-0.8	-0.412	0.223	-1.9
	무급가족종사자	0.011	0.450	0.0	0.965	0.949	1.0
	실업자	-0.112	0.320	-0.4	-0.017	0.479	-0.0
	비경활	0.024	0.118	0.2	0.196	0.316	0.6
주관적 소득계층 (ref. 하층)	중하층	0.157	0.202	0.8	0.111	0.370	0.3
	중간층	0.466	0.275	1.7	0.590	0.539	1.1
	중상층	0.695	0.364	1.9	0.805	1.055	0.8
	상층	3.480***	0.431	8.1	-1.085	1.131	-1.0
지역 더미 (ref. 서울)	부산	-0.570***	0.037	-15.6	0.049	0.065	0.8
	대구	-1.017***	0.058	-17.7	-0.614***	0.123	-5.0
	인천	-0.479***	0.061	-7.8	0.094	0.079	1.2
	광주	-0.432***	0.096	-4.5	0.134	0.109	1.2
	대전	-0.599***	0.056	-10.7	0.032	0.073	0.4
	울산	-0.494***	0.064	-7.7	-0.370**	0.117	-3.2
	세종	-0.132	0.092	-1.4	0.024	0.066	0.4
	경기	-0.586***	0.060	-9.8	-0.228*	0.099	-2.3
	강원	-0.703***	0.051	-13.9	-0.806***	0.088	-9.2
	충북	-0.522***	0.065	-8.1	-0.164	0.138	-1.2
	충남	-0.167***	0.036	-4.6	0.365**	0.098	3.7
	전북	-0.697***	0.063	-11.0	-0.439***	0.100	-4.4
	전남	-0.786***	0.047	-16.8	-1.054***	0.093	-11.3
	경북	-0.679***	0.060	-11.3	-0.295**	0.074	-4.0
	경남	-0.959***	0.034	-28.4	-0.223	0.108	-2.1
	제주	0.059	0.061	1.0	0.369***	0.073	5.1
n		3,003			935		
Adj. R <sup>2</sup>		0.0834			0.1158		

주: \*\*\* p<0.001, \*\* p<0.01, \* p<0.05

미래 인식과 복지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연령을 분석했을 때, 미래를 고통으로 인식한 경우에 비해 분투 혹은 번영을 기대하는 경우 증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의 경우에는 번영인 경우에만 고통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 증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주관적 소득계층의 영향을 살펴보면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하층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 상층이라고 응답한 경우 증세에 대해 지지적인 태도를 보였다. 청년층의 경우에는 하층에 비해 상층인 경우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졌다.

〈표 5-8〉 미래 인식과 복지에 대한 태도

		reg			reg		
		(1) 증세에 대한 태도 2025			(2) 증세에 대한 태도 청년층(19~39세), 2025		
		Coefficient	Robust s.e.	t	Coefficient	Robust s.e.	t
미래 인식 (ref. 고통)	분투	0.634*	0.227	2.8	0.731	0.567	1.3
	번영	1.240***	0.252	4.9	1.331*	0.524	2.5
성별 (ref. 남성)	여성	0.034	0.060	0.6	0.322	0.192	1.7
연령 (ref. 19~39세)	40~59세	0.316**	0.130	2.4	-	-	-
	60세 이상	0.401	0.194	2.1	-	-	-
교육수준 (ref. 중졸 이하)	고졸	0.261	0.127	2.1	1.468	0.732	2.0
	대졸 이상	0.360	0.201	1.8	1.589*	0.559	2.8
연령(1세 단위)					0.029**	0.010	3.0
혼인상태 (ref. 유배우)	무배우	-0.204**	0.067	-3.1	-0.226	0.289	-0.8
ln_가구소득		-0.083	0.112	-0.7	-0.208	0.122	-1.7
경제활동 상태 (ref. 상용)	임시, 일용, 특고	0.134	0.168	0.8	0.165	0.447	0.4
	고용주, 자영자	-0.076	0.149	-0.5	-0.360	0.223	-1.6
	무급가족종사자	0.040	0.483	0.1	1.212	0.954	1.3
	실업자	0.176	0.304	0.6	0.161	0.518	0.3
	비경활	0.024	0.114	0.2	0.313	0.317	1.0
주관적 소득계층 (ref. 하층)	중하층	0.133	0.178	0.8	0.153	0.398	0.4
	중간층	0.315	0.234	1.4	0.452	0.578	0.8
	중상층	0.407	0.432	0.9	0.614	1.214	0.5
	상층	3.046***	0.559	5.5	-1.208	1.065	-1.1

		reg			reg		
		(1) 증세에 대한 태도 2025			(2) 증세에 대한 태도 청년층(19~39세), 2025		
		Coefficient	Robust s.e.	t	Coefficient	Robust s.e.	t
지역 더미 (ref.서울)	부산	-0.379***	0.059	-6.4	0.315	0.150	2.1
	대구	-1.225***	0.037	-32.9	-0.884***	0.084	-10.6
	인천	-0.426***	0.044	-9.6	0.227**	0.072	3.2
	광주	-0.512***	0.051	-10.1	0.126	0.088	1.4
	대전	-0.552***	0.042	-13.0	0.101	0.053	1.9
	울산	-0.658***	0.038	-17.1	-0.550***	0.099	-5.6
	세종	-0.198***	0.041	-4.9	-0.113	0.136	-0.8
	경기	-0.581***	0.042	-13.9	-0.278**	0.072	-3.9
	강원	-0.833***	0.026	-31.6	-0.854***	0.108	-7.9
	충북	-0.570***	0.030	-19.3	-0.113	0.122	-0.9
	충남	-0.162***	0.028	-5.7	0.467***	0.051	9.2
	전북	-0.678***	0.031	-22.0	-0.614***	0.117	-5.3
	전남	-0.734***	0.053	-14.0	-0.873***	0.095	-9.2
	경북	-0.831***	0.069	-12.0	-0.574***	0.074	-7.8
	경남	-0.993***	0.029	-34.6	-0.322**	0.098	-3.3
	제주	0.199**	0.066	3.0	0.489***	0.095	5.2
n		3,003			935		
Adj. R <sup>2</sup>		0.0650			0.0799		

주: \*\*\* p<0.001, \*\* p<0.01, \* p<0.05





## 제6장

### 민주주의와 복지에 대한 태도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문헌 고찰

제3절 분석 방법 및 결과



## 제6장

## 민주주의와 복지에 대한 태도

### 제1절 들어가며

복지국가의 기반에는 민주주의가 있다(Esping-Andersen, 1990; Korpi, 1983).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 가운데 정치자원이론(Power resources theory)에 따르면, 노동조합 조직, 정치적 좌파의 영향력, 시민의 민주적 참여 수준 등이 복지국가의 형태와 복지 확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Esping-Andersen, 1990). 여기에서 민주주의는 계급 간 힘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공간으로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다(Esping-Andersen, 1990). 복지국가 형성과 발전의 기반에는 사회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끄는 민주주의의 토대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Korpi(1983) 역시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 계급이 민주주의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때, 복지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장기 집권과 노조의 집중된 조직력이 있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Meltzer and Richard(1981)는 중위투표자이론(Median Voter Theorem)에 기반하여 민주주의와 큰 정부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론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세금과 이전소득을 고려한 순소득(net income)을 극대화하도록 투표하며, 여기에서 중위소득자(median income earner)가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중위소득이 평균소득보다 낮을수록, 즉 소득불평등이 클수록, 중위유권자는 소득재분배를 선호하게 되고, 그 결과 소득재분배를 맡는 정부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현상적으로는 대부분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유권자의 소득 분포가 상위에 치우쳐서 비대칭이고, 따라서 중위소득자(median income earner)는 평균소득자(mean income earner)보다 가난하다. 결국 이들은 재분배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더 높은 세금, 더 큰 정부를 선호한다. 반대로, 소득격차가 작거나, 중위소득이 평균에 가까울수록 정부의 역할은 축소된다. 이들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큰 정부가 등장하는, 혹은 재분배정책이 적극적으로 적용되는 논리적인 과정을 제시하는 이론적 출발점이 된다.

복지국가 유형 연구에서 상당한 수준의 무상복지를 제공하는 산유국에 대해서 복지국가라 명명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건설한 복지국가, 즉 서구의 시민주의 전통 위에서 노-자 간의 민주적인 타협의 결과 등장한 국가 질서를 복지국가라 명명한다. 강명세(2014)의 표현을 빌리자면, “민주주의는 ‘인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정치이다”(p. 96). 이러한 합의의 토대가 무너진다면, 복지국가의 기반도 함께 약화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민주주의가 복지국가에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복지국가는 역으로 민주주의 질서를 정당화하면서, 동시에 안정성을 강화한다. Marshall(1950)은 시민권의 발전을 세 단계로 구분했다. 그는 법적 권리 → 정치적 권리 → 사회적 권리(사회권)의 순서로 시민권이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즉,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법적·정치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동시에 Marshall(1950)은 사회권이 보장되어야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즉, 시민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적 자유와 투표권만으로는 부족하며, 삶의 기본 조건을 보장하는 사회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는 국민의 사회권을 보호하는 복지국가가 역으로 민주주의의 기반이 된다.

Esping-Andersen(1990)은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개념을 통해서 개별 노동자들이 시장의 상품에서 민주주의 공간에서 연대의 주체인 시민으로 도약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부의 분배를 시장에 전적으로 위임한다면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서 상품으로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에게 “시장은 감옥이 된다”(p. 36). 상품으로서의 노동자는 개별적으로 상병과 산재, 노령, 실업 등의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끼리의 경쟁은 노동력의 가격도 낮춘다. 시장 안에서 노동자는 대체 가능하고, 쉽게 일자리를 잃고, 분자화한다. 복지국가는 노동자들은 시장을 벗어나서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기회를 제공한다. 복지국가의 공간에서 노동자들은 권리와 자격을 갖춘 시민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탈상품화를 통해서 노동자들은 시장이라는 ‘악마의 뱀돌’로부터 벗어나서 시민으로서 공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Esping-Andersen(1990)에게 “탈상품화는 단결과 연대를 위한 알파이고 오메가다”(p.38).

Dolgoft and Feldstein(2012)도 취약계층이 생계 문제에 시달리느라 정치적인 공론의 장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면 정치 과정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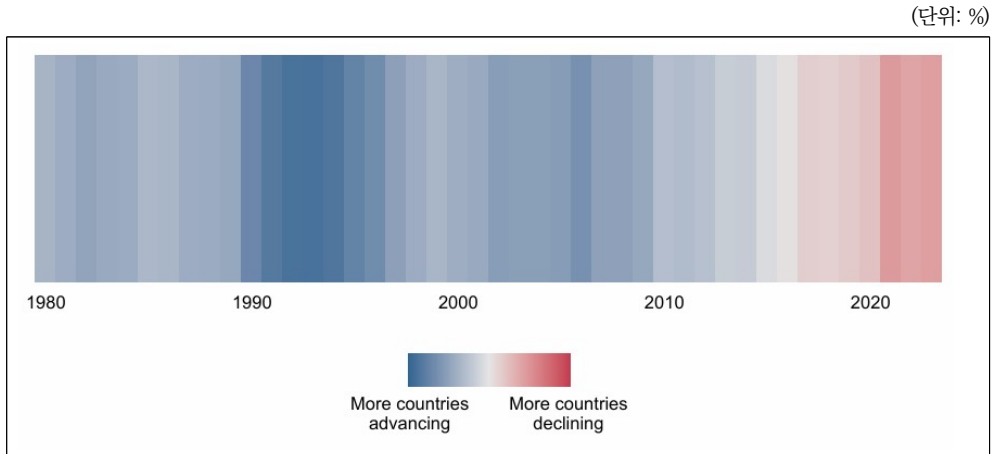
서 “모든 시민들이 민주적인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최저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최저선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기능하도록 한다”(p.157)라고 설명한다.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사이에서 기대되는 이러한 “상승효과(synergy)”(Szikra & Öktem(2023) 혹은 “불가분의 관계”(강명세, 2014, p. 95)는 2000년대 이후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경향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International IDEA, 2022, 2024; Freedom House, 2025).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강화를 지원하는 국제 정부 간 기구인 International IDEA가 매년 발간하는 ‘The Global State of Democracy’ 보고서는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를 음울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를테면, 2023년 기간 동안 전 세계 173개국에서 민주주의의 다양한 요소들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42개국만이 순(純) 긍정적인 변화(net positive change)를 보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성과 요인 중 유의미하게 개선된 요인의 수가 악화된 요인의 수를 초과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조사 대상 가운데 79개국은 악화된 요인이 개선된 요인보다 많아 순 부정적인 변화를 기록했다. 종합하면, 전체 국가 중에 24%만이 민주주의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었고, 46%는 이전보다 더 악화됐다. [그림 6-1]은 1980년 이후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진전의 추이를 보여준다. 지난 8년 내내 민주주의가 후퇴한 국가 수가 반대의 경우를 초과해서 지속적으로 붉은색으로 표시된다. International IDEA(2024)가 관련 데이터를 종합한 이래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된 민주주의 후퇴 추세”(p.10)를 나타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관련 지표도 악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투표 참여율은 2023년 전 세계 평균 55.7%로, 1975년 67.9%보다 10%포인트 넘게 떨어졌다(International IDEA, 2024). 반면, 선거 이후 폭동이나 시위로 이어진 사례는 2023년 27.6%로, 1975년 3.8%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International IDEA, 2024).

시민들의 민주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하고 있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분석을 보면, ‘의회나 선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조사에서 이러한 생각이 “꽤 좋다” 혹은 “매우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38%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이 수치가 52%로 증가했다(International IDEA, 2022).

[그림 6-1]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퇴조 현상 1



주: 전 세계 73개국 가운데 민주주의가 진전한 국가 수가 후퇴한 나라보다 많을수록 짙은 푸른색으로, 반대의 경향이 심할수록 붉은색으로 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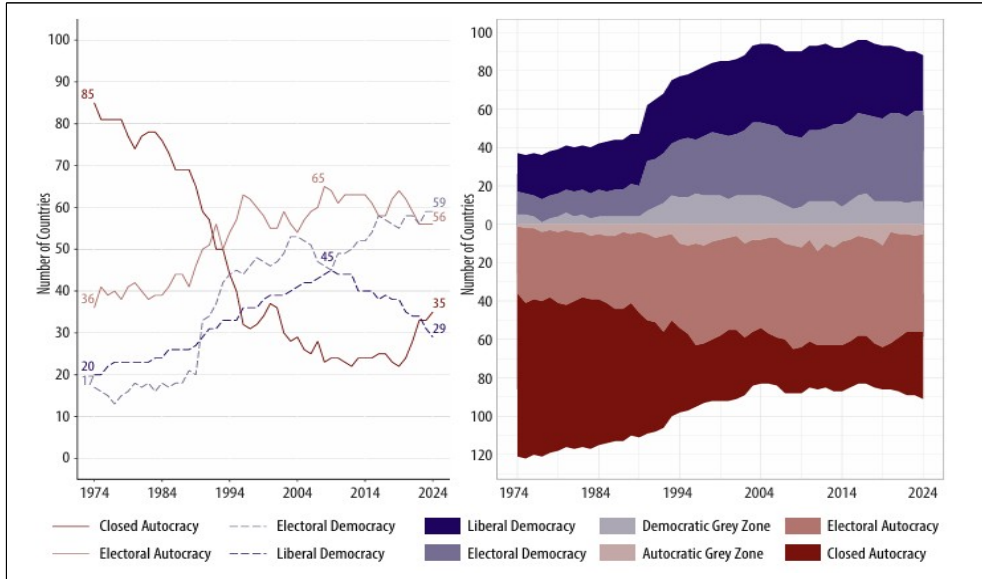
출처: “Figure 1.2. Balance of countries with net declines and net advances” International IDEA(2024) p. 10

세계 각국의 자유, 민주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비영리·초당적 국제기구인 Freedom House(2025)의 진단도 어둡다.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유가 19년 연속 감소했다. 총 60개국에서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가 악화된 반면, 개선된 나라는 단 34개국에 불과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연구소(V-DEM)도 세계적인 권위주의화 경향을 보고했다. 이들은 전 세계 179개국을 민주주의 성숙도에 따라 네 가지 유형, 즉 자유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선거 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 선거 독재(Electoral Autocracy), 그리고 폐쇄 독재(Closed Autocracy)로 분류했다(Nord et al., 2025).

2024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88개 국가로, 권위주의 국가(91개)보다 적어졌다([그림 6-2] 참고). 2024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약 72%가 권위주의 체제에서 거주했다(Nord et al. 2025). 이는 197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Nord et al. (2025)에 따르면, 세계 평균 민주주의 수준은 1985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특히 동유럽과 남·중앙아시아에서 급속한 후퇴가 진행 중이며, 북미·서유럽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림 6-2]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퇴조 현상 2



주: 왼쪽 그림에서 하늘색이 자유민주주의 유형으로 1970년대 17개국에서 한때 45개국까지 증가했다가, 2024년에는 29개국으로 감소했음. 오른쪽 그림은 여섯 개 민주주의 유형을 제시했다. 붉은 쪽 권위주의 유형의 지난 10년간 증가했음.

출처: “FIGURE 4. REGIME TYPES BY NUMBER OF COUNTRIES, 1974-2024”, p. 12. (Nord, Altman, Angiolillo, Fernandes, Good God, & Lindberg, 2025).

문제는 한국도 세계적인 경향에 동조한다는 점이다. Nord et al. (2025)도 2025년 3월 내놓은 ‘2025년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2년 연속 ‘권위주의화(Autocratizing)’ 국가로 분류했다. 한국은 2023년 자유 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로 분류됐지만, ‘권위주의화’ 과정을 거치면서 2년 만에 한 등급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으로 하락했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Economist Intelligence Unit<sup>13)</sup>(2025)에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퇴보를 보고했다. 한국은 지난 2023년 8.09점에서 2024년 7.75점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로 강등됐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25)은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치 참여, 정부 기능 등의 5개 영역에서 국가별로 지수 총

13)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이다.

점을 부여했다. 참고로, 세계 평균 민주주의 지수는 2023년 5.23점에서 2024년 5.17점으로 하락했다.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퇴보 흐름 속에서도 한국은 하락의 폭이 도드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순위는 23위(2020년) → 16위(2021년) → 24위(2022년) → 22위(2023년)에서 2024년 32위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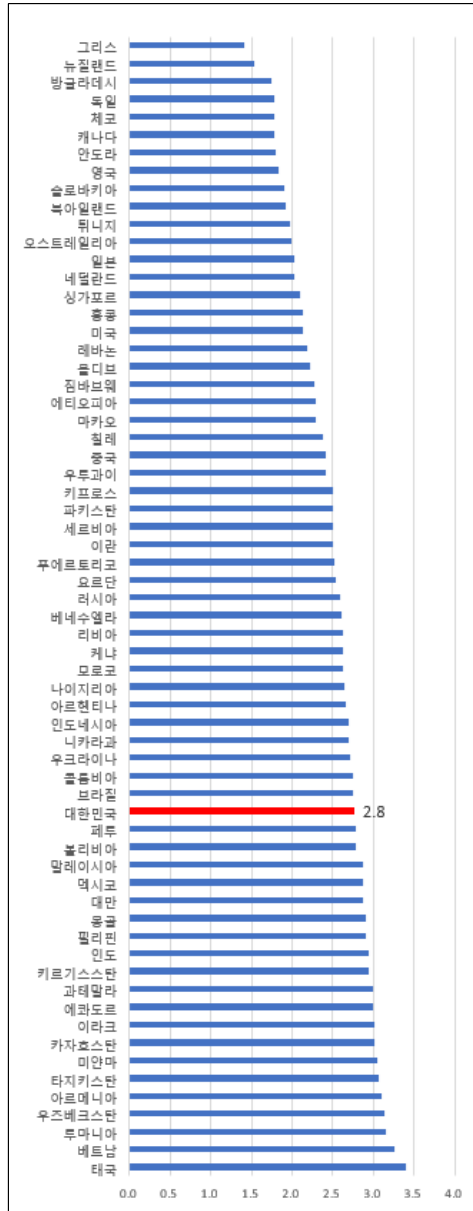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25)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시도는 한국 정치 체제의 제도적·행태적 취약성을 드러냈다.... 정당 간 깊이 뿌리 내린 타협에 대한 기피 및 반목은 한국 정치 체제를 걸보기보다 훨씬 불안정하게 만든다. 한국 정치의 특징인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는 정치적 폭력과 사회적 혼란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p. 71). 물론, 한국의 민주주의 퇴보는 2024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같은 돌발변수에 대한 일시적인 평가일 수도 있다. 즉, 돌발변수의 여파가 잠잠해지면 평가는 다시 복원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2024년 말과 2025년 초에 한국에서 목격된 서부지법 폭동이나 극우 인사들의 준동은,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25)가 지적한 대로,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이다. 더욱이,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의 흐름에서 한국이 자유롭다고 단언하기도 힘들다.

실증분석에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은 관찰된다. 7기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의 원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면, ‘의회나 선거를 개의치 않는 강한 지도자’<sup>14)</sup>를 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한국에서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의회나 선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설문 응답을 ‘①매우 좋음~④매우 나쁨’으로 받은 뒤, 역코딩해서 평균값을 구한 결과를 국제 비교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강력한 지도에 대해 우호적이다. 한국 평균은 2.8점으로, ‘ 좋음’과 ‘나쁨’ 사이에서 ‘ 좋음’에 평균값이 가까웠다. 세계가치관조사에 포함된 64개국 가운데서는 한국이 18번째로 권위적인 지도자에 우호적이었다([그림 6-3] 참고). 비교 대상 국가 가운데는 태국이 3.4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리스가 1.4점으로 가장 낮았다. OECD 회원

14) 참고로, 해당 문항에 대한 영문의 마스터 설문지에서는 “Having a strong leader who does not have to bother with parliament and elections”(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n.d.a, p. 16)로 제시됐다. 해당 문항을 엄격히 번역하면 “의회와 정당에 개의치 않아도 되는 강력한 지도자”가 되겠지만, 편의상 한국어판 설문지 문항의 번역(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n.d.b, p. 33)을 그대로 따른다. 이번 연구에서 수행한 2025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도 해당 문항을 사용했는데, 여기에서는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의회와 정당에 개의치 않아도 되는 강력한 지도자”라고 번역했다.

[그림 6-3] 권위적인 리더에 대한 선호

(단위: 점)



주: '의회나 선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설문 응답을 ① 매우 좋음~④ 매우 나쁨으로 받은 뒤, 역코딩해서 제시한 결과. 즉, 점수가 높을수록 강력한 지도에 대해 우호적임.

출처: World Values Survey Wave 7 자료를 필자가 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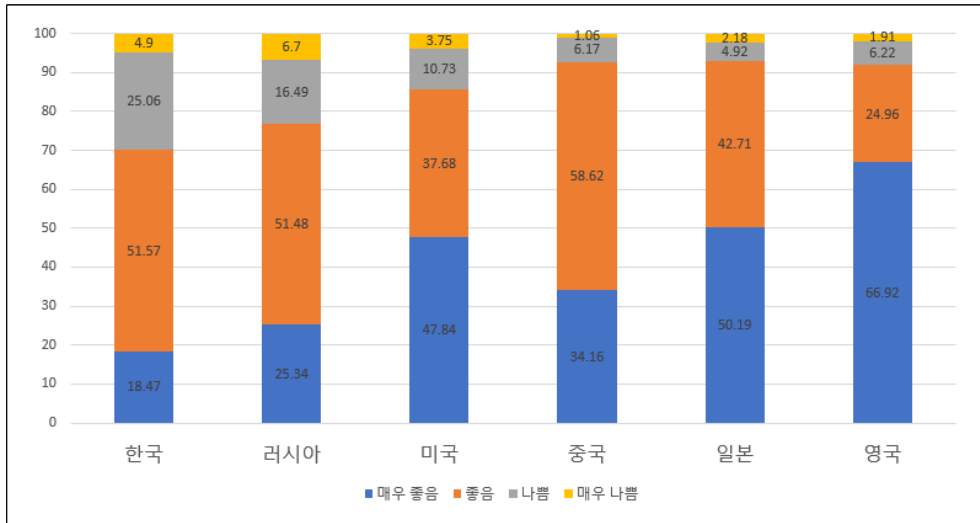
국 가운데는 멕시코가 2.9점으로 유일하게 한국보다 '강력한 지도자'를 선호했다.

4기 세계가치관조사에서 또 다른 문항인 '민주적인 정치 시스템'에 대한 선호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도 한국은 조사 대상이 된 66개국 가운데서 세 번째로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조사 자료를 '①매우 좋음~④매우 나쁨'으로 받은 뒤, 역코딩해서 평균값을 구한 결과를 국제 비교한 결과였다. 한국은 2.83점으로 좋음과 나쁨 사이에서 좋음에 가까운 수치였지만, 66개국 평균인 3.29점에는 크게 못 미쳤다. 세계가치관조사의 해당 문항에 대한 주요국의 응답 비율을 분석한 결과가 [그림 6-4]에 제시됐다.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매우 좋음'이라고 답한 비율은 20%보다 낮았다. 러시아(25.34%)나 중국(34.16%)보다 낮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확인되는 민주주의의 퇴보가 전체 복지국가 혹은 한국의 복지국가 혹은 사회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주요한 학술적·정책적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사이에서 관찰됐던 "상승효과(synergy)"(Szikra & Öktem, 2023)가 민주주의 후퇴기에는 어떻게 작용할지는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림 6-4] 국가별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선호 비율

(단위: %)



출처: World Values Survey Wave 7.0을 필자가 분석함.

이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대가 가능할 것이다. 첫째, 민주주의의 퇴보는 복지국가 혹은 재분배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권력자원이론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의 약화는 취약계층, 노동계급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 및 이해가 반영될 기제를 약화시킬 것이다. 이는 복지지출의 축소, 국가의 재분배 기능 약화 및 복지국가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민주주의의 퇴보와 함께 등장할 권위주의적 체제는 체제 정당화 혹은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복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복지는 최소한 유지 혹은 확장의 가능성도 있다. 복지가 우파 포퓰리즘의 수단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정당의 등장의 배경에는 복지의 혜택에서 이주민을 배제하려는 복지극우주의(welfare chauvinism)가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실제로, 1930~40년대 독일의 나치는 빈곤한 아리안 독일인에 대한 후한 식량, 육아 서비스, 모자 휴양지 등을 제공했다(Aly, 2005). 나치는 서민 계층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제공함으로써, 전체주의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국민 지지를 확보했다.

이 대목은 O'Connor(1973)가 제기한 복지의 정당화(legitimization)와 맞닿아 있다. 그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특히, 서구 복지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 축적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 개입을 확대할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사회적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복지지출을 증가시켜야 하는 이중적 압력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번 장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의 민주주의 정체 혹은 후퇴가 복지국가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제2절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사회통합 설문조사에 근거해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와 복지태도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다. 즉,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의 스펙트럼에 따라 복지태도가 보이는 경향성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제4절에서는 연구를 정리하면서 함의를 제시했다.

## 제2절 문헌 고찰

문헌고찰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먼저, 민주주의의 진전이 복지에 미친 영향을 살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겠다. 다음으로 지난 10년 동안 관찰되는 민주주의의 퇴보가 복지에 미친 최근 연구들을 점검하겠다. 셋째,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와 복지태도의 관계를 살핀 연구들의 분석 결과를 보겠다.

민주주의 진전은 다수의 국가에서 복지의 유지 혹은 확장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Hicks & Swank, 1992; Rudra & Haggard, 2005, Wesołowska et al., 2025). 물론, 민주주의와 복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도 일부 있다(Mulligan et al., 2004). 하나씩 살펴보겠다. Rudra, Haggard(2005)는 57개 개발도상국에 대한 패널분석에서, 세계화 압력이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사회지출을 쉽게 축소시키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교육·보건·사회보장 지출이 세계화에 덜 민감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관찰했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자동적으로 복지를 ‘팽창’시킨다고 말하기보다, 세계화 국면에서 복지지출의 급격한 축소를 막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Hicks and Swank(1992)는 1960년부터 1982년까지 18개 선진 산업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복지지출의 정치적·제도적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좌파 정당의 집권 기간이 길수록 복지지출 수준은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중앙 집권화된 정치구조는 복지지출을 더욱 촉진하는 경향이 있었다. 조합 조직률과 단체교섭의 집중도가 높을수록 복지지출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정치적 요인들이 경제

적 요인들보다 복지국가의 성장에 더 강력한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연구는 권력자원론(Power Resources Theory)을 실증적으로 지지하는 연구로 평가 받는다.

Afrimadona et al. (2019)은 Armingeon et al. (2018)의 비교정치데이터셋(Comparative Political Dataset)과 OECD 국민계정을 활용해서 1960~2016년 기간 32개 국가의 정치적인 제도 변수와 복지지출 변수를 분석했다. 특히 의원내각제와 비례대표제를 갖춘 민주주의일수록 복지정책 채택 가능성이 높다는 논지를 전개한다.

Wesołowska et al. (2025)의 초점은 중앙·동유럽·중앙아시아의 탈사회주의국가들에 맞춰졌다. 이들 국가에서의 민주화가 소득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분석 대상이었다. 1990년대에는 민주화와 소득 불평등 사이에 명확한 관계가 없거나, 있어도 착시적인 관계에 불과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16년까지는 민주화가 소득 불평등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은 실질적이고 평등지향적(pro-equality)이었다. 해당 기간 동안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은 소득 하위 80% 계층에 혜택을 주었고, 특히 상위 10% 소득계층의 총소득 점유율이 줄어든 결과로 이어졌다. 반면, Mulligan et al. (2004)은 1960년부터 1990년까지 142개국의 자료를 담은 POLITY IV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민주주의가 재분배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두 변수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민주주의의 진전기에 대한 분석이었다면, 민주주의의 퇴행기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다. Szikra and Öktem(2023)은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과정에서 복지정책의 추이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연구다. 이들의 분석 대상은 헝가리와 튀르키예였는데, 두 나라 모두 오르반 정권(헝가리)과 에르도안 정권(튀르키예)이 2010년 이후 권위적인 리더십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퇴보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순차적 혼합방법(sequential mixed-method)을 채택해서, 1단계에서는 두 나라의 복지 노력(welfare effort)을 측정하여 어떤 정책 분야에 자원이 집중되었는지를 파악했다. 2단계에서는 복지 개혁의 경로를 분석하는데, 세 가지 차원(정책 내용, 의사결정 절차, 담론)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분석 결과를 보면, 민주주의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복지정책의 변화가 빠르게 발생하지만, 반드시 복지 축소(retrenchment)를 의미하지 않았다.

두 국가는 상이한 출발점에서 각각 상반된 지출 궤적을 보였는데, 헝가리의 오르반

정권 하에서는 사회지출이 감소하였고(재정 중심 복지를 제외하고),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정권 하에서는 사회지출이 증가하였다. 정책 내용에서 헝가리는 가족정책과 공공근로사업을, 튀르키예는 건강보험과 사회보조를 핵심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양국 모두 전통적 가족, 친출산 담론을 강조했다. 정책 절차를 보면, 양국 모두 행정부 중심의 수직적 의사결정 체계의 강화 경향이 나타났다. 정치 담론에서는, 두 나라 모두 ‘근로 기반 사회’, ‘가족 중심 사회’를 전면에 내세웠다. 두 나라에서 민주주의 후퇴는 복지 모델을 재구성하며, 기존 복지 구조에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요소를 도입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두 나라는 “격렬하고 방향이 불분명한 복지 변동(convulsive welfare change)”(p. 212)을 겪었다.

헝가리의 피데스당은 중산층에, 튀르키예의 AKP당은 저소득층에 기반을 두었으나, 양국 모두 복지개혁을 통해 계층 간 연합(coalition)을 형성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두 나라에서는 복지를 공공의 권리가 아니라 지도자의 부친적(paternalistic) 시혜로 표현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권의 법적 집행력은 약화되고, 복지 수급은 노동·가족 형태·정치 태도와 같은 ‘바람직한 행동’과 교환되는 조건부로 변질됐다. 이러한 복지포폴리즘이 민주주의 왜곡과 장기 집권의 상황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을지는 여전히 지켜볼 일이다(Szikra & Öktem, 2023).

Lendvai-Bainton and Szelewa(2021)의 관심 대상 국가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겪고 있는 폴란드와 헝가리다. 먼저 헝가리를 보면, 오르반 정권은 2010년 이후 빠르게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면서 복지 정책에서도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보편주의 축소, 선별주의 강화다. 특히 소수자, 실업자, 로마인<sup>15)</sup> 등 소외계층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둘째, 공공근로 프로그램 확대다. 노동에 기반한 시민권 개념을 강조하며 복지를 ‘조건화’했다. 셋째, 친출산 가족정책 강화다. 중산층 이상을 주요 수혜 대상으로 삼아, 정치적 지지를 결집시켰다. 넷째, 정책 결정의 수직화다. 비토 세력 제거와 행정부 중심 정책 운용으로 민주적 거버넌스를 약화시켰다.

헝가리가 복지선별주의를 강화했다면, 폴란드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했다. 폴란드의 법과정의당(Prawo i Sprawiedliwość, PiS)은 아동수당을 통해 하위 계층의 지지를 확보하였고, 가족 중심 담론과 민족주의를 결합하여 복지의 정당성을 ‘전통적 가치’에

15) 한국에서 흔히 ‘집시’로 알려진 집단을 가리킨다. 유럽평의회는 집시라는 표현이 비하 소지가 있으므로 로마인(Romani)이라는 표현을 권장한다(Council of Europe, 2008).

서 찾았다. 복지를 선심성 정책으로 동원하며, 시민권이 아닌 ‘충성도’에 기반한 재분배를 시도하였다. PiS는 보편적 복지를 활용하여 정권 지지 기반을 강화하면서도, 시민의 권리로서의 복지 개념을 약화시켰다. Lendvai-Bainton and Szelewa(2021)은 헝가리와 폴란드에서 진행되는 복지국가의 재구성 과정에 대해서, 신자유주의, 포퓰리즘, 국민주의가 결합된 새로운 통치 패러다임이라며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authoritarian neoliberalism)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닌 복지국가의 해체 및 재구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Szikra and Öktem(2023)이나 Lendvai-Bainton and Szelewa(2021) 외에도 민주주의 퇴행기 복지정책의 추이에 대한 연구는 러시아(Logvinenko, 2020)나 브라질, 튀르키예(Yörük & Comin, 2020) 대상으로 이뤄졌다. 다만, 해당 국가들은 전통적인 민주주의 혹은 복지국가라기보다는, 신생 복지국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관련해서 전통적인 복지국가에서 민주주의 침체에 따른 복지정책의 추이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의 퇴행이 아직은 근래의 현상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통적인 복지국가 내부에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의 스펙트럼 혹은 태도 변화와 복지태도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일부 있다(Sirovátka et al., 2018).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복지태도와 연관해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 세계적으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불가분의 관계”(강명세, 2014, p. 95)를 맺어온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도 함께 하락할지를 확인하고자 함이다. 혹은 복지국가의 성과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두 가지 지지가 나란히 하락한다면, 민주주의와 함께 복지국가의 위축도 함께 예상될 수 있다. 혹은,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유지된다면, 튀르키예와 같이(Szikra & Öktem, 2023), 적어도 양적으로는 복지가 확장 혹은 유지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Sirovátka et al. (2018)은 복지국가의 성과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이들은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2012년 자료를 활용해서 다층분석을 수행했다. 이들은 분석을 위해서 두 가지 개념을 제시했다. 먼저, 정책 효율성(policy efficiency)은 사회복지가 실제로 빈곤 감소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낸 객관적 수치다. 둘째, 정책 적자(policy deficit)는 시민의 기대와 실제 제공된 복지

수준 간의 격차를 의미하는 주관적 인식이다. 분석 결과, 정책 적자가 클수록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 만족감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빈곤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회정책은 민주주의 만족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복지국가 성과가 단순한 정책 지표를 넘어서 민주주의의 실질적 작동 여부에 대한 인식에 핵심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시민이 복지정책 성과에 대한 주관적 차이를 느낄 때,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나 만족도가 감소한다.

Sirovátka et al. (2018)은 민주주의와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들 태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서 의미가 있지만, 2010년대 이후 민주주의 퇴행기의 맥락에서 두 가지 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해당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번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에 따른 복지태도를 확인함으로써, 민주주의 퇴행기에 복지정책의 향방을 가늠하고자 한다.

### 제3절 분석 방법 및 결과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복지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사회통합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는 ‘㉠ 의회와 선거를 개입하지 않는 강한 지도자’와 ‘㉡ 민주적 정치 시스템’ 사이에서 11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를 통해 분석했다. 이 질문은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묻는 대표적인 문항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가치관조사에서도 활용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민주주의와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강한 지도자’를 부각하기 위해서 ‘민주적 정치 시스템’과 사이에서 선호의 방향과 강도를 모두 확인하기 위해서 양극 척도(bipolar scale)를 활용했다. 여기에서 ‘강한 지도자’에 대한 선호가 강할수록 민주적 정치에 대한 선호는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복지 태도는 두 가지 문항을 활용했다. 첫 번째는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다. ‘귀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수준보다 축소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 응답자는 다음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응답했다. ① 현재 수준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 ②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 ③ 현재 수준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문항에서는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태도를 물었다. ‘귀하는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에 대해서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⑩ 매우 동의한다’ 11점 척도로 설문했다. 더불어, 증세의 시나리오 가운데 어떤 유형의 증세를 선호하는지도 추가적으로 설문했다. ① 소득세, ② 소비세, ③ 법인세, ④ 재산세 및 증부세, ⑤ 상속세 및 증여세, ⑥ 사회보험료 대체 사회보장세 신설, ⑦ 탄소세 신설에 대해서 ‘① 매우 동의한다~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로 나눠서 설문했다.

먼저,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보면, 설문 응답자의 평균값은 7.28로 ‘① 의회와 선거를 개의치 않는 강한 지도자’와 ‘⑩ 민주적 정치 시스템’ 사이에서 민주적 정치 시스템에 대한 선호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앞서 세계가치관조사에서 한국인들이 권위적인 리더에 대한 선호가 높았던 것과는 다른 결과다. 물론, 문항의 번역 내용과 설문의 시기가 달랐던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강한 지도자를 선호한 비율은, 척도 기준으로 전체 ①~⑩에서 0~4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비율은 4.8%로, 비율이 상당히 낮았다.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를 보면, 평균이 2.11점으로 중간값을 기준으로 ③ ‘복지 확대’에 상대적으로 가까웠다. 다음 문항인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를 보면, 평균값이 4.41점이었다. 중간값을 기준으로 비동의 쪽으로 약간 치우쳤다.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48.6%로, 긍정적인 응답 비율 25.5%보다 컸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간값을 가진 비율이 15.8%였다.

세목별 증세 의견을 보면, ③ 법인세(2.71점)가 유일하게 다수가 지지하는 증세 수단이었다. 다음으로 동의 수준에 따라 보면, ⑦ 탄소세 신설(2.47점) → ④ 재산세 및 증부세(2.35점) → ⑤ 상속세 및 증여세(2.33점) → ⑥ 사회보장세 신설(2.28점) → ② 소비세(2.13점) → ① 소득세(2.08점) 순이었다. 응답자 본인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목일수록 동의 수준은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표 6-1〉 주요 변수와 측정 방법, 기초 통계량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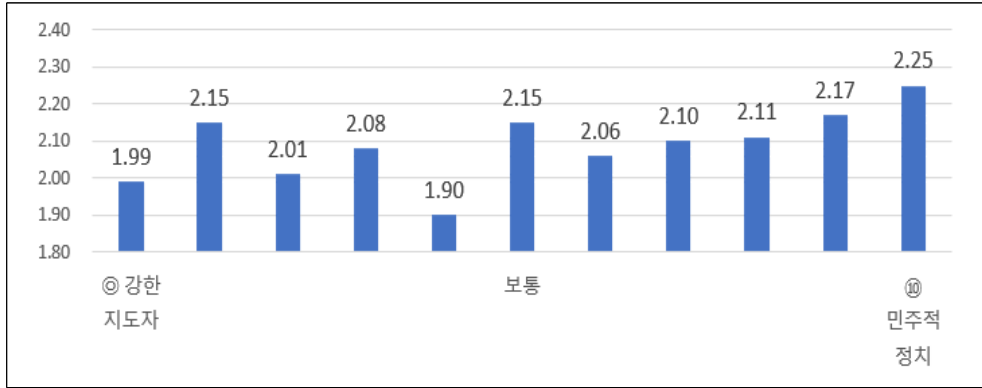
차원	변수	측정 방법		평균 (표준편차)	최대/최소
독립 변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D13)	① 의회와 선거를 개의치 않는 강한 지도자~ ⑩ 민주적 정치 시스템' 사이에서 선호에 따른 11점 척도. 수치가 클수록 민주주의 선호		7.28 (1.71)	10/0
종속 변수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E2)	① 현재 수준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 ②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 ③ 현재 수준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2.11 (0.55)	3/1
	복지를 위한 증세 태도(E3)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한 태도.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⑩ 매우 동의한다의 11점 척도. 수치가 클수록 증세 찬성.		4.41 (2.38)	10/0
	세목별 증세 의견 (E4-1~7)	① 소득세	① 매우 동의한다~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역코딩. 수치가 클수록 증세 혹은 세목 신설 찬성	2.08 (0.72)	4/1
		② 소비세		2.13 (0.76)	4/1
		③ 법인세		2.71 (0.90)	4/1
		④ 재산세 및 증부세		2.35 (0.84)	4/1
		⑤ 상속세 및 증여세		2.33 (0.84)	4/1
		⑥ 사회보장세 신설		2.28 (0.71)	4/1
		⑦ 탄소세 신설		2.47 (0.75)	4/1

주: 필자 작성

다음 그림들은 민주주의 선호에 따른 복지 증세 태도를 보여준다. 즉, ‘① 의회와 선거를 개의치 않는 강한 지도자~ ⑩ 민주적 정치 시스템’ 사이 11점 척도(①~⑩) 기준으로 봤을 때, 민주적 정치를 선호하는 집단(6~10점 선택)이 복지 확장을 지지하는 수준은 2.13점이었다. 반면 ‘강한 지도자’를 선호하는 집단은 상대적으로 복지 수준의 유지를 선호했다(평균 1.99점). 두 집단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가 높을수록, 복지 확장에 대해 호의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강력한 지도자를 선호한 비율(문항 0~4점 선택 비율)이 4.8%로 상당히 낮은 점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민주주의 선호 문항에서 중립적인 답을 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복지 확장에 우호적인 점(평균 2.15점)도 눈길을 끈다(〔그림 6-5〕 참고).

[그림 6-5] 민주주의 선호에 따른 복지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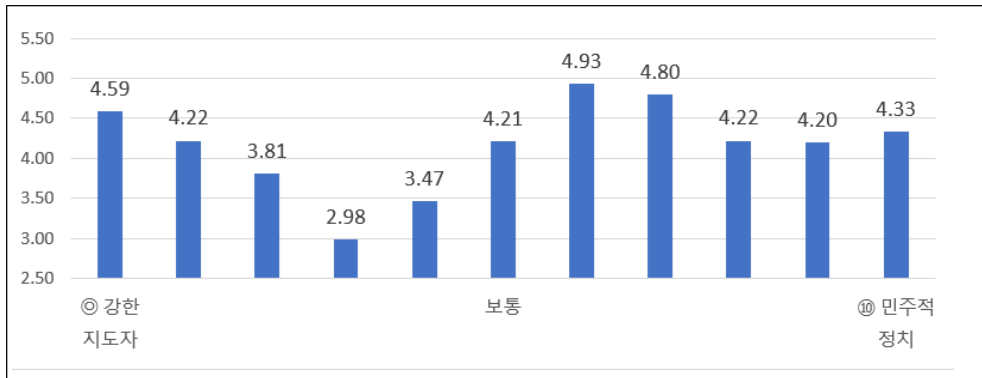
(단위: 점)



다음으로 민주주의 태도에 따른 복지증세 태도를 보겠다. 먼저, 민주적 정치를 선호하는 집단(6~10점 선택)이 복지증세를 지지하는 수준은 평균 4.50점으로, 강력한 지도자를 선호한 집단(0~4점 선택) 평균인 3.45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와 복지 확대에 대한 선호가 일정한 양(+)의 상관관계를 그럴 가능성을 의미한다. 다만, [그림 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 선호 정도와 증세 태도가 일관된 흐름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림 6-7]은 민주주의 태도와 복지 증세 태도의 분포를 보다 상세하게 보여준다.

[그림 6-6] 민주주의 선호에 따른 복지 증세 지지 수준

(단위: 점)



주: '① 의회와 선거를 개입하지 않는 강한 지도자~ ⑩ 민주적 정치 시스템' 사이 11점 척도(①~⑩)에서 0~4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비율은 4.8%로 비율이 상당히 낮은 점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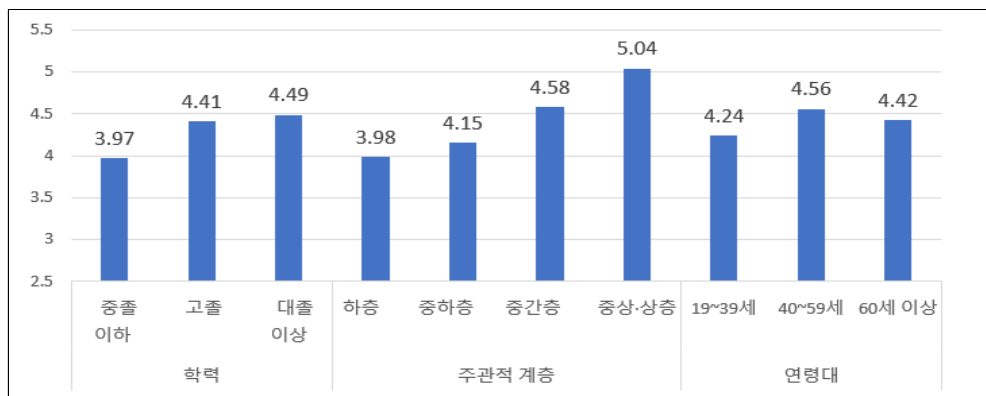
[그림 6-7] 민주주의와 복지 증세에 대한 태도 분포

	㉠ 증세 반대			↔			중립			↔			㉡ 증세 찬성		합계
㉠ 강한 지도자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0.0	0.0	0.1	0.0	0.0	0.0	0.2	0.0	0.0	0.0	0.0	0.0	0.0	0.0	0.4
	0.1	0.0	0.2	0.1	0.0	0.0	0.1	0.0	0.1	0.0	0.0	0.0	0.0	0.0	0.7
	0.2	0.0	0.6	0.2	0.1	0.1	0.1	0.1	0.1	0.1	0.0	0.0	0.0	0.0	1.4
	0.1	0.0	0.7	0.4	0.6	0.3	0.1	0.2	0.0	0.0	0.0	0.0	0.0	0.0	2.2
↕	0.5	0.8	1.3	1.6	1.8	3.2	0.9	1.1	0.7	0.1	0.0	0.0	0.0	0.0	11.9
	0.2	0.5	1.0	1.2	1.1	1.9	1.9	2.0	0.8	0.1	0.0	0.0	0.0	0.0	10.5
	1.0	1.5	2.2	3.4	2.6	3.6	3.7	4.3	2.6	0.5	0.1	0.0	0.0	0.0	25.4
	1.0	2.2	3.9	3.8	2.2	3.0	3.7	2.3	1.8	0.3	0.3	0.0	0.0	0.0	24.6
	0.7	1.2	2.2	1.3	1.7	1.8	1.4	1.4	0.8	0.4	0.1	0.0	0.0	0.0	13.0
㉡ 민주적 정치 시스템	1.4	0.9	1.0	0.7	0.5	1.6	1.5	0.8	0.8	0.2	0.5	0.0	0.0	0.0	9.9
	5.1	7.3	13.2	12.6	10.5	15.8	13.3	12.3	7.6	1.5	1.0	0.0	0.0	0.0	100.0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른 태도를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복지 증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동의 수준이 높았다([그림 6-8] 참고). 이론적으로는 고소득층에서 부담이 대체로 크고, 혜택은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점을 고려하면, 저소득층 및 저학력층에서 복지 증세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복지태도에서의 비계급성(김영순, 여유진, 2011)이 관찰된 바가 있다. 이번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연령대를 보면, 40~59세 사이 세대가 상대적으로 복지 증세에 긍정적이었고, 19~39세 청년 집단이 60세 이상 노인 세대보다 복지 증세에 대해서 보수적이었다.

[그림 6-8]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복지 증세 지지 수준

(단위: 점)



이러한 인구사회적 특성들을 통제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가 복지 증세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자 했다. 성별, 만나이, 가구소득의 로그값, 17개 시도로 구분되는 거주지역, 최종학력, 현재 경제활동 상태, 마지막으로 혼인상태를 통제변수로 넣고, 회귀 분석을 시도했다.

〈표 6-2〉는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가 복지 확대 및 복지 증세 태도와 관계를 각각 분석한 결과다. 분석에는 총 3,003개의 표본이 사용됐고, 개인 모수 가중치를 활용했다. 분석 결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는 복지 확대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 0.023,  $p < 0.01$ ). 즉, 민주주의를 옹호할수록 복지 확대를 더 찬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복지 확대 태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구소득 로그변환값은 복지 확대 태도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Coef. -0.080,  $p < 0.01$ ).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복지 확대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기준 집단인 '무학' 대비 '대학원' 학력자는 복지 확대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Coef. 0.309,  $p < 0.05$ ). 반면, 지역 더미 변수, 성별, 만 나이는 복지 확대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복지 증세 태도는 민주주의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Coef. 0.001). 복지 증세 태도에 가장 두드러진 영향을 미친 변수는 '지역'이었다. 기준 집단인 서울과 비교할 때, 다수의 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관찰됐다. 구체적으로 대구(Coef. -1.244,  $p < 0.001$ ), 경남(Coef. -0.967,  $p < 0.001$ ), 경북(Coef. -0.940,  $p < 0.001$ ) 등 영남지역에서 복지 증세에 부정적인 태도가 도드라졌다. 반면,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성별, 만 나이, 교육수준, 경제활동 상태, 가구소득 로그 변환값, 혼인상태 등 대부분의 인구사회학적,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복지 증세 태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두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인들은 인구사회적 및 사회경제적 변수 등을 통제했을 때, 민주주의에 우호적일수록 복지 확대는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러한 태도가 복지를 위한 증세를 지지하는 성향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6-2〉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복지 확대 및 복지 증세 태도 회귀분석 결과

		복지 확대 태도		복지 증세 태도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0.023**	0.009	0.001	0.034
지역 더미 (ref. 서울)	부산	-0.053	0.053	-0.594*	0.269
	대구	-0.108	0.064	-1.244***	0.302
	인천	-0.040	0.060	-0.535*	0.242
	광주	-0.023	0.070	-0.244	0.236
	대전	-0.002	0.048	-0.531*	0.247
	울산	-0.099	0.064	-0.714*	0.325
	경기	-0.029	0.047	-0.698***	0.205
	강원	0.045	0.056	-0.767**	0.253
	충북	-0.052	0.054	-0.490*	0.249
	충남	-0.057	0.050	-0.075	0.240
	전북	0.156	0.053	-0.675**	0.248
	전남	-0.080	0.043	-0.721*	0.284
	경북	-0.059	0.051	-0.940***	0.258
	경남	-0.143	0.052	-0.967***	0.238
	제주	0.014	0.085	0.143	0.380
	세종	0.162	0.096	-0.115	0.376
성별 (ref. 남성)	여성	0.030	0.028	0.026	0.114
만 나이		0.000	0.001	0.004	0.006
교육수준 (ref. 무학)	초등학교	0.028	0.076	-0.973	0.868
	중학교	0.084	0.072	-0.440	0.849
	고등학교	0.107	0.064	-0.200	0.831
	대학교	0.158*	0.065	0.009	0.832
	대학원	0.309*	0.122	1.345	0.928
경제활동 상태 (ref. 상용)	임시직 임금근로자	0.019	0.051	0.003	0.205
	일용직 임금근로자	0.247**	0.086	0.298	0.348
	특수고용	0.175*	0.089	-0.183	0.311
	고용주	0.046	0.060	0.005	0.268
	고용인 없는 자영업자	-0.071	0.041	-0.174	0.169
	무급가족종사자	-0.132	0.076	0.083	0.362
	실업자	0.005	0.078	-0.014	0.329
비경제활동인구		-0.053	0.039	0.008	0.153
ln가구소득		-0.080**	0.027	0.117	0.114
혼인상태 (ref. 유배우)	별거	0.203*	0.103	-0.688	0.475
	사별	-0.118*	0.052	0.473	0.273
	이혼	-0.007	0.059	0.006	0.240
	미혼	-0.033	0.041	-0.549**	0.176
상수항		2.372***	0.201	4.281***	1.189
N		3,003		3,003	
R <sup>2</sup>		0.040		0.052	

주: 1) \*\*\* p&lt;0.001, \*\* p&lt;0.01, \* p&lt;0.05

2) 개인일반가중치를 활용함

‘증세 지지’라는 명제가 다소 추상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어떤 세금이냐에 따라 지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소득세 증세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적인 지지도는 낮았지만, 법인세 증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다. 따라서, 세목을 일곱 개로 나누어서 회귀분석을 시도했다.

〈표 6-3〉은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와 세 가지 세목, 즉 근로·사업소득세, 소비세, 법인세에 대한 증세 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했다. 앞선 분석과 동일한 통제변수 리스트를 포함했다. 다만, 지면의 한계를 고려해서 표에는 통제변수 관련 분석 결과는 표에서 소략했다. 분석 결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는 법인세 증세 태도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나머지 두 세목의 증세 태도와 민주주의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법인세 증세 태도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모형의 R2값은 0.127로 표에서 제시된 세 모형 중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는 법인세 증세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Coef. 0.032,  $p < 0.05$ ).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법인세 증세를 긍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 변수는 법인세 증세 태도에도 강한 영향을 미쳤다. 서울 대비 부산(-0.457), 대구(-0.410), 울산(-0.368), 경남(-0.766), 제주(-0.655) 등 영남권과 제주 지역에서 증세에 부정적이었다. 반면, 전북(0.339)과 전남(0.615) 지역은 서울보다 법인세 증세 지지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고용 상태에서는 상용직 근로자 대비 일용직 임금근로자가 법인세 증세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Coef. +0.283,  $p < 0.01$ ).

근로·사업소득세와 관련한 분석도 내용도 간단히 살펴보겠다. 가구소득 로그변환값은 증세 태도에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Coef. +0.101,  $p < 0.01$ ). 상용직 근로자 대비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증세 지지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Coef. 0.092,  $p < 0.05$ ). 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사업소득세 증세에 지지율이 높은 점은 다소 뜻밖의 결과다. 다만, 현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이 근로·사업소득세 증세에 긍정적인 점은 기대와 부합했다. 지역 변수의 영향도 두드러졌다. 기준집단인 서울 대비 경남(-0.446), 대구(-0.400), 경북(-0.392) 등 영남권에서 근로·사업소득세 증세에 부정적인 경향이 뚜렷했다. 영남권은 모든 세목의 증세에 대해 일괄되게 부정적이었다.

〈표 6-3〉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세목별 복지 증세 태도 회귀분석 결과 1

	근로·사업소득세		소비세(부가가치세)		법인세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0.003	0.010	-0.019	0.010	0.032*	0.013
상수항	1.588***	0.344	2.204***	0.393	2.350***	0.380
통제	예		예		예	
N	3,003		3,003		3,003	
R <sup>2</sup>	0.084		0.041		0.127	

주: 1) \*\*\* p<0.001, \*\* p<0.01, \* p<0.05

2) 개인일반가중치를 활용함

다른 네 가지 세목에 대한 태도도 분석했다(〈표 6-4〉 참고). 재산세·종부세를 먼저 보면, 주요 독립변수인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는 재산세·종부세 증세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Coef. -0.036,  $p<0.01$ ). 이는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재산 관련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증세에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재산세·종부세 모형과 유사하게, ‘상속세·증여세 증세 태도’는 역시 민주주의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Coef. -0.043,  $p<0.001$ ).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자산세(보유세 및 이전세) 전반에 대한 반대 경향과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태도의 배경에는 민주주의에 대해 우호적인 집단(민주주의 문항에서 6~10 응답 집단)이 ‘강력한 지도자’를 선호한 집단(0~4 응답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점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2025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분석해보면, 전자의 가구 평균 자산이 평균 4억 1,697만 원으로 후자의 평균(3억 6,414만 원)을 크게 웃돌았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집단이 상대적인 자산가로서 ‘부자증세’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 모델에서는 ‘사회보장세’ 증세 태도를 종속변수로 놓고 분석했다. 앞선 두 자산세 모형과 달리,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는 사회보장세 증세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Coef. 0.010). 네 번째 ‘탄소세’ 모델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는 탄소세 증세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Coef. 0.044,  $p<0.001$ ). 이는 자산세 모형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세금인 탄소세 도입에 더 찬성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6-4〉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세목별 복지 증세 태도 회귀분석 결과 2

	재산세·종부세		상속세·증여세		사회보장세		탄소세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0.036**	0.012	-0.043***	0.013	0.010	0.009	0.044***	0.011
상수항	2.862***	0.445	0.711***	0.467	2.425***	0.495	0.584***	0.342
통제	예		예		예		예	
N	3,003		3,003		3,003		3,003	
R <sup>2</sup>	0.068		0.064		0.056		0.070	

주: 1) \*\*\* p<0.001, \*\* p<0.01, \* p<0.05

2) 개인일반가중치를 활용함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 증대에는 우호적인 경향이 나타났지만, 복지 증대를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증세의 세목을 나누어서 보면, 민주주의를 지지할수록 재산세·종부세, 상속세·증여세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지만, 법인세 증세 및 탄소세 신설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다.



# 제7장

## 결론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제2절 제언



## 제 7 장      결론

###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올해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회통합 개념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개념의 확장과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제2장) 연도별 실태조사 자료 및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하여 사회통합의 실태를 진단(제3장)하고자 했다. 제4장에서는 사회통합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통합의 구성 요소인 사회참여를 높일 방안을 찾고자 2014~2025년 자료를 통합 횡단면 자료로 구축하여 로짓분석과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조사 방법과 조사 대상이 달라 비교에서 제외했다. 제5장에서는 통합 횡단면 자료를 기반으로 정치 성향, 가치 지향, 미래 인식과 복지에 대한 태도를, 제6장에서는 민주주의와 복지에 대한 태도를 2025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장별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헌 고찰에 따르면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는 1897년부터 1999년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집단에의 소속과 통합을 강조하는 관점이 주를 이루었으나, 2010년대에 들어서는 다양한 집단을 포용하고 사회자본을 축적하며,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관점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신뢰의 결핍과 정치적 균열이 꼽히고 있다.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서도 국가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증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님을, 타인에 대한 포용성이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높은 불안정성은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수준을 낮추고, 낮은 포용성은 불신을 야기하며, 신뢰의 결핍은 사회정책의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는 국제 논의가 한국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는 사회통합 관련 주요 지표, 사회 인식, 정부 역할 인식, 다양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2025년 조사에서는 여러 지표가 2014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긍정적인 수치가 관찰됐다. 특히, 사회통합 인식 정도(0~10점)와 사회 신뢰수준(0~10점)이 각각 4.87점, 5.70점으로 나타나 2014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

자부심(1~4점)과 사회적 지지(0~10점) 또한 2025년 각각 3.03점, 6.39점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0~10점)와 행복(0~10점) 또한 2025년 각각 6.63점, 7.01점으로 조사 이래 최고점을 기록했다. 3개 연도의 비교가 가능한 일(삶)에 대한 가치(0~10점) 문항 역시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2014년에는 6.43점, 2016년에는 6.57점으로 나타났지만, 2025년 6.81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를 유럽사회조사(ESS, European Social Survey) Round 11을 활용하여 국제 비교를 시도한 결과는 여전히 개선의 필요를 시사했다. 삶의 만족도는 우리나라는 2023년 6.5점, 2025년 6.6점으로 유럽국 중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 포르투갈(6.5점)과 헝가리(6.6점)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행복 수준은 2025년 7.0점으로 주요 유럽국과 비교하면 행복도가 낮은 국가인 이탈리아(6.9점), 포르투갈, 헝가리(7.2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사회통합을 위해 각 항목에 대한 중요성 정도를 분석한 결과, 스물 한가지 과제 중 ‘매우 중요하다’를 기준으로 가장 중요도가 높은 세 가지 항목은 15)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 47.31%, 10) 사회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 41.34%, 17) 좋은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40.95%였다. 반면, 응답이 가장 적었던 항목은 6)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이민자,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인정하는 것(16.08%), 21) 정치적 이념이 다른 사람을 용인(인정, 수용)하는 것(18.51%)으로 나타나, 사회통합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다양성이 강조되어 가는 반면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성의 수용 정도는 높지 않았다.

감소 추세가 확인되는 지표들도 있었다. 사회 이동성(1점~4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꾸준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2.57점으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사회 참여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율도 감소 추세이다. 2014년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7.42%, 2025년은 14.11%였으며, 기부 역시 2014년 33.87%에서 2025년 18.19%로 감소하였다.

사회 인식을 분석한 결과, 2025년 가장 심각한 갈등 1위는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었으며(3.48점), 2순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3.00점), 3순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2.96점)으로 꼽혔다. 가장 낮은 수준의 갈등은 여성과 남성(2.50점),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2.61점)였다.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은 2018년, 2023년, 2025년 꾸준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 간 갈등에 해당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여 실업/구직에 대한 걱정 정도와 재정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집단별로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의 걱정 정도(매우 걱정+걱정) 43.68%와 비교하여, 임시, 일용, 특고의 실업/구직에 대한 걱정 정도(63.04%)가 상용직(36.48%)에 비해 약 두 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상황에 대한 만족도 또한 임시, 일용, 특고는 30.63%가 재정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 것(매우 불만족+불만족)으로 응답하여 이 역시 상용직 14.90%에 비하면 약 두 배가량 높았다.

정부 역할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 것과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는 데 대한 동의는 2014년 이래 가장 낮았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데 대한 동의는 2023년 3.58점에서 2024년 3.47점, 2025년 3.30점으로 점감했다.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 또한 2025년 3.23점으로 이 또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점수이다.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는 3.10점이었으며, 이 또한 2014년 3.31점, 2024년 3.21점과 비교하여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다양성에 대한 수용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정치, 종교, 소득수준, 교육수준, 인종이 다른 사람과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의 경우, 수준이 다르더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응답은 교제 유형과 관계없이 80%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교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응답은 연애 및 결혼(57.74%)을 제외하면, 나머지 세 가지 활동에서는 70% 이상이 함께 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정치 성향과 인종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양상이 관찰됐다.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 및 결혼할 수 있다는 응답은 59.94%였으며, 인종이 다른 사람과 연애 및 결혼할 수 있다는 사람은 42.98%로 다른 특성(소득, 교육, 종교)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은 식사 또는 술자리(77.81%)가 가장 높고 취미·봉사 활동(74.67%), 시민·사회 단체활동(65.17%), 연애 및 결혼(59.94%)의 순이었다.

인종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은 식사 또는 술자리(78.14%)가 가장 높고 그다음이 취미·봉사 활동(71.85%), 시민·사회 단체활동(68.43%), 연애 및 결혼

(42.98%)의 순이었다. 정리하면 다른 정치 성향과 인종에 대한 수용성은 경제적, 교육적 차이에 대한 수용성에 비해 낮은 편이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곽윤경 외(2023)에서 제시된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의 교제 의향은 식사 또는 술자리를 함께할 수 있다는 응답이 66.98%, 연애 및 결혼 41.80%,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28.59%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2025년의 수치는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의 교류 수용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주관적 웰빙과 사회 참여(자원봉사, 기부, 투표에의 참여)와의 관계를 살펴봤다. 먼저,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 삶의 만족도, 행복감, 유다이모니아(일/삶에 대한 가치 인식) 지표가 긍정적일수록, 현재와 5년 뒤를 비교하여 삶을 고통이라 평가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변영할 것이라, 즉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자원봉사 참여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걱정과 같은 부정정서는 자원봉사 참여의 가능성을 낮췄다. 주관적 웰빙과 기부 참여 여부를 로짓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 유다이모니아는 사회단체나 기관 기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정서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 모두에서 삶에 대한 평가가 변영에 해당할 때 참여의 오즈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는 점은 삶에 대한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여건들이 사회참여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7년 자료로 주관적 웰빙과 19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여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는 가구소득을 통제하더라도 투표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가구소득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21대 대통령 선거는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1, 부정정서2, 유다이모니아, 삶에 대한 평가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와의 관계를 살펴봤다. 19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삶의 만족도는 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긍정정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부정정서1(우울감)이 통계적 유의성을 띠지 않은 점은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유다이모니아 지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1표준편차 증가할 때 투표 참여 오즈가 39.5%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에 신규 투입된 부정정서2(걱정), 유다이모니아, 삶에 대한 평가 중에서는 유다이모니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5장에서는 정치 성향, 가치 지향, 미래 인식과 복지에 대한 태도를 살펴봤다. 우선

정치 성향의 경우 2025년 ‘매우 보수적’이라는 응답과 ‘대체로 진보적’, ‘매우 진보적’이라는 응답이 2024년과 비교하여 증가한 점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시계열로 볼 때는 2014년 ‘매우 보수적’이라는 응답이 3.86%로 2025년 3.50%에 비해 더 높다는 점에서 2025년의 수치를 이례적이라 보기는 어렵다. ‘매우 진보적’이라는 응답은 2014년~2025년 중 2025년이 3.57%로 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을 연령 범주에 따라 구분하여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19~39세의 매우 보수적, 중도적, 매우 진보적이라는 응답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시계열로 살펴보면 청년층의 매우 보수적이라는 응답은 2014년이 1.53%로 가장 높았고, 매우 진보적이라는 응답은 2017년 5.20%로 가장 높아 2025년의 분석 결과(매우 보수적 1.24%, 매우 진보적 3.59%)가 이례적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개인주의-공동체주의 가치지향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와 비교하여, 19~39세는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고 공동체와 개인의 이익이 동일한 비중으로 중요하다는 응답은 41%대로 거의 비슷했다. 증세에 대해서는 전체(4.41점)와 비교하여 40~59세의 동의 정도가 4.56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60세 이상(4.42점), 19~39세(4.24점)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치 성향과 복지에 대한 태도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도 집단과 비교하여 매우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집단에서 증세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특히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중도와 비교하여 대체로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증세에 찬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개인주의-공동체주의 가치 지향과 증세에 대한 태도를 회귀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준집단과 비교하여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증세를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준집단에 비해 공동체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증세에 대한 태도의 효과 크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미래 인식과 복지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는 전체 연령을 분석했을 때, 미래를 고통으로 인식한 경우에 비해 분투 혹은 번영을 기대하는 경우 증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층의 경우에는 번영인 경우에만 고통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비해 증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6장에서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조망하면서, 전 세계적인 민주

주의의 퇴조기에 시민들의 복지태도의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축의 현황을 점검했다. International IDEA(2024)는 2000년대 상황을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된 민주주의 후퇴 추세’로 진단했다. 한국 또한 V-DEM(2025)에 의해 2년 연속 ‘권위주의화(Autocratizing)’ 국가로 분류됐다. 세계 가치관조사 7기 분석 결과, 한국은 64개국 중 18번째로 권위적인 리더에 우호적이었으며,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멕시코 다음으로 강력한 지도자를 선호했다.

민주주의 퇴보가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도 일부 살펴봤다. 터키나 폴란드 등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퇴보는 취약계층의 이해 반영 기회를 약화시켜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나, 권위주의적 체제가 체제 정당화 수단으로 복지(조건부 복지, 복지 포퓰리즘)를 활용할 가능성도 확인됐다.

한국 시민의 민주주의 및 복지 증세에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2025년 사회통합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응답자들은 민주적 정치 시스템을 분명하게 선호했지만(평균 7.28),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태도는 중간값(5점)보다 약간 ‘비동의’ 쪽으로 치우쳤다(평균 4.41).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유일하게 다수가 지지하는 증세 수단이었다.

민주주의 선호 집단은 강력한 지도자를 선호하는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복지 확대 및 복지 증세에 더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인구사회적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한 회귀분석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가 복지 증대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맺었지만, 민주주의 태도가 복지 증세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해 우호적일수록 자산 관련 증세에는 부정적이었지만,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법인세와 탄소세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경향이 확인됐다.

지금까지 한국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태도를 복지 증대 및 복지 증세와 연관해서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민주주의의 퇴조 상황에서 한국 복지국가의 방향과 경로를 가늠해 보고자 했다. 다수의 시민이 ‘의회나 선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지도자’를 선호하는 불행한 상황에 대한 선제적인 검토였다. 이번 분석대로라면, 미래 민주주의 퇴보의 상황에서 복지 확장에 대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가능성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미래를 전망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특히, 현시점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복지에 대한 태도에 근거해, 한국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미래를 조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앞서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민주주의와 복지국가가

서로 조용하고 긴장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은 나라마다 매우 동적이면서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는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관계를 시민들의 인식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 제2절 제언

### 1. 학문적, 정책적 함의

2025년에는 사회통합과 관련된 주요 지표들이 조사가 시작된 2014년 이래 가장 긍정적인 수준을 보여주었다. 사회통합 인식, 사회 신뢰, 국가 자부심, 사회적 지지, 삶의 만족도, 행복 지표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와 행복을 유럽사회조사와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포르투갈, 헝가리와 같이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하는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사회통합 관련 주요 지표들의 모니터링과 개선을 위한 지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감소 추세가 확인되는 지표들도 있었다. 사회 이동성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꾸준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에는 2.57점으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사회 참여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와 기부 참여율도 2014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상용직에 비해 실직과 구직에 대한 걱정과 재정 상황에 대한 불만족이 두 배가량 높다는 점도 정책 설계 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회 이동성과 사회 참여는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요소다. 따라서 사회 이동성과 사회 참여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회통합 인식, 사회 신뢰, 삶의 만족도, 행복 등이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추후 학문적, 정책적 고찰이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은 2018년과 2023년에 이어 2025년에도 가장 집단 간 갈등이 높은 것으로 꼽히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를 다양화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갈등은 공동체의 역동성을 증진할 수도, 혁신의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정치적 양극화, 포퓰리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방화, 폭력을 기

반으로 하는 시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을 생산적인 방식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사회 각계의 관심이 요구된다는 점을 언급해 둔다.

정부 역할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가 2014년 대비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 추세 속에서도 정부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5점 척도에서 3점 이상이라는 점은 정부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다양성에 대한 수용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정치, 종교, 소득수준, 교육수준, 인종이 다른 사람과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살펴해보았다.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수준이 다르더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정치 성향과 인종의 경우에는 상대적 수용성이 낮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윤경 외(2023)의 2023년 조사 결과에 비해서는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의 교류 수용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주관적 웰빙이 좋을수록 사회참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제4장의 분석 결과는 긍정정서와 삶에 대한 기대, 삶에 대한 평가 등으로 측정되는 미래에 대한 낙관이 자원봉사, 기부, 투표 참여와 같은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포폴리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Ward, 2019; Ward et al., 2021)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미래를 낙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세간의 우려와 달리 정치 성향의 분화는 생각보다 양극화되지 않았으며, 청년층의 정치 성향 또한 보수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한 차원에서 충분한 표본크기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편, 제6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가 복지 확대 찬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증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은 추후 연구의 여지를 남긴다.

## 2.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4년부터 사회통합 실태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2025년은 12년차 연도 연구에 해당한다.

연도별 주제에 초점이 맞춰온 연구의 특성상, 그동안의 실태조사에서는 별도의 지속 조사 문항이 일관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 즉, 장기 시계에서 추적해 볼만한 사회통합 지표가 일관되게 조사되지는 못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지속 조사 문항 설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객관 지표와 더불어 이 조사에서 포함된 지표들을 활용하여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속 문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지난 10여 년과 향후 10여 년간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과 사회통합 지표에 대한 합의가 요구된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참고로 OECD(2025)는 2025년 10월 주관적 웰빙 개정판을 발간했다. 개정판에는 주관적 웰빙의 측정 핵심 모듈로서 삶에 대한 만족도, 유다이모니아 지표, 지난 일주일간의 통증(pain) 정도를 순서대로 질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일주일간의 통증(pain)은 새롭게 추가된 지표이다. 확장 모듈은 '삶에 대한 평가'를 조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동 모듈은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1년 전의 삶과 미래의 삶 각각에 대해 0~10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강명세. (2014). 민주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재분배. 세종연구소.
- 곽윤경, 김기태, 정세정, 강예은, 김지원. (202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XI - 이주민과 사회통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곽윤경, 여유진, 이한나, 정세정, 강예은, 한겨레. (2023)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X - 공정성과 갈등 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 여유진, 김태완, 정해식, 우선희, 김성아. (2014)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순, 여유진. (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91, 211-240.
- 네덜란드 통계청. (2025). SDG 10.1 Social cohesion and inequality. <https://www.cbs.nl/en-gb/visualisations/monitor-of-well-being-and-the-sustainable-development-goals/sdg-s/sdg-10-1-social-cohesion-and-inequality>(2025.10.24. 검색)
- 동아일보. (2025.10.13.). 최근 5년간 우울증 32.9%·조울증 24.9% 증가...청소년·청년 '경고 등'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1013/132546226/1>
- 버나드 크릭. (2021). 정치를 옹호함. 정치에 실망한 사람들에게(이관후 옮김). 후마니타스.
- 여유진, 우선희, 곽윤경, 김지원, 김상경. (2021)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VIII - 사회적 위기와 사회통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정해식, 김미곤, 김문길, 강지원, 우선희, 김성아. (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II -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엔뉴 안데르손. (2014).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사이에서: 스웨덴 사민주의, 변화의 궤적(박형준 옮김). 책세상.
- 이태진, 김동진, 곽윤경, 이원진, 우선희, 김지원. (2022)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IX)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승진. (2020). 보수적이지 않은 보수주의자와 진보적이지 않은 진보주의자: 이념성향, 정책 선호, 그리고 가치 정향. 한국정당학회보, 19(1), 129-156.
-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문길, 우선희, 김성아. (2016)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III - 사회통합 국민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김성근, 류연규, 우선희, 김근혜. (2018)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V -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 김미곤, 여유진, 전진아, 김문길, 우선희, 최준영. (2017)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IV -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 역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http://info.nec.go.kr/main/main\\_previous\\_load.xhtml](http://info.nec.go.kr/main/main_previous_load.xhtml)
- 캐나다 통계청. (2025). Quality of Life Hub. <https://www160.statcan.gc.ca/society-societe/index-eng.htm>(2025.10.24. 검색)
- 한스 포어랜더. (2023). 민주주의 역사, 형식, 이론(나중석 옮김). 북캠퍼스.
- 한국사회과학데이터 센터. (2017, 2022). 대통령 선거 관련 유권자 의식조사.
- ABC News. (2024). National exit poll: President.
- Afrimadona, D., Darmastuti, S., & Fathun, L. M. (2019). Democracy and economic welfare: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Governance*, 4(1), pp.16-29.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pp.179-211.
- Alabrese, E., & Fetzer, T. R. (2018). Who is NOT voting for Brexit anymore? (No. 7389). CESifo Working Paper.
- Alaluf, M. (1999). Séminaire: "Evolutions démographiques et rôle de la protection sociale: Le concept de cohésion sociale."
- Algan, Y., Beasley, E., Cohen, D., & Foucault, M. (2018). The rise of populism and the collapse of the left-right paradigm: Lessons from the 2017 French presidential election. CEPR Discussion Paper, 13103.
- Aly, G. (2005). Hitler's beneficiaries: Plunder, racial war, and the Nazi welfare state. Metropolitan Books. <https://us.macmillan.com/books/9780805087263>
- Angell, O. H., & De Beer, S. (2022). Social cohesion: Critical theoretical exploration of a concept. In I. Swart, A. Vähäkangas, M. Rabe, & A. Leis-Peters (Eds.), *Stuck in the margins? Young people and faith-based organisations in South African and Nordic localities*. Vandenhoeck & Ruprecht.
- Armingeon, K., Wenger, V., Wiedemeier, F., Isler, C., Knöpfel, L., Weisstanner, D., & Engler, S. (2018). Comparative political data set 1960-2016. Institute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Bern.
- Aruqaj, B. (2023). An integrated approach to the conceptualis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cohes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8, pp.227-263.

- Asher, H. B. (1980). *Presidential elections and American politics* (2nd ed.). Dorsey Press.
- Barnea, M. F., & Schwartz, S. H. (1998). Values and voting. *Political Psychology*, 19(1), pp.17-40.
- Bauer, P. C., Barberá, P., Ackermann, K., & Venetz, A. (2017). Is the left-right scale a valid measure of ideology? Individual-level variation in associations with “left” and “right” and left-right self-placement. *Political Behavior*, 39, pp.553-583.
- Cakanlar, A., & White, K. (2023). A systematic review on political ideology and persuasion. *Psychology & Marketing*, 40(12), pp.2526-2538.
- Caprara, G. V., & Zimbardo, P. G. (2004). Personalizing politics: A congruency model of political preference. *American Psychologist*, 59(7), pp.581-594.
- Caprara, G. V., Schwartz, S., Capanna, C., Vecchione, M., & Barbaranelli, C. (2006). Personality and politics: Values, traits, and political choice. *Political Psychology*, 27(1), pp.1-28.
- Carmines, E. G., Ensley, M. J., & Wagner, M. W. (2012). Political ideology in American politics: One, two, or none? *Forum*, 10(4), pp.1-18.
- Chan, J., To, H. P., & Chan, E. (2006). Reconsidering social cohesion: Developing a definition and analytical framework for empirical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75(2), pp.273-302.
- Cnaan, R. A., Handy, F., Marrese, T., Choi, D. Y., & Ferris, A. (2022). *Generosity trends and impacts: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the USA*. Penn Social Policy & Practi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 CNN. (2020). Exit polls.
- Cole, D. (2025, July 4). Young Europeans losing faith in democracy, poll finds.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5/jul/04/young-europeans-losing-faith-in-democracy-poll-finds>
- Council of Europe. (2008). *Report of High-Level Task Force on Social Cohesion: Towards an active, fair and socially cohesive Europe*.
- De Neve, J.-E., Diener, E., Tay, L., & Xuereb, C. (2013). The objective benefits of subjective well-being. In J. Helliwell, R. Layard, & J. Sachs (Eds.), *World Happiness Report 2013*.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pp.276-302.
- Dolgoff, R., & Feldstein, D. (2012). *Understanding social welfare: A search for social justice* (9th ed.). Pearson.
- Downs, A.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Harper & Row.
- Durkheim, E. (1897). *Le suicide: Étude de sociologie*. F. Alcan.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5, February 27). Democracy index 2024: What's wrong with representative democracy? Economist Intelligence Unit. <https://www.eiu.com/n/democracy-index-2024>
- Ellis, C., & Stimson, J. A. (2012). *Ideology in Ame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estinger, L., Back, K. W., & Schachter, S. (1950). *Social pressures in informal groups: A study of human factors in housing*. Stanford University Press.
- Flavin, P., & Keane, M. J. (2012). Life satisfac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3(1), pp.63-78.
- Fonseca, X., Lukosch, S., & Brazier, F. (2019). Social cohesion revisited: A new definition and how to characterize it. *Innovation: The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32(2), pp.231-253.
- Freedom House. (2025). *Freedom in the world 2025: Uphill battle to safeguard rights*. Freedom House.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world/2025/uphill-battle-to-safeguard-rights>
- Friedkin, N. E. (2004). Social cohes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30, pp.409-425.
- Fuchs, D., & Klingemann, H. D. (1990). The left-right schema. In M. K. Jennings & J. W. Van Deth (Eds.), *Continuities in political action* (pp. 202-234). de Gruyter.
- Goff, L., Helliwell, J., & Mayraz, G. (2018). Inequality of subjective well-being as a comprehensive measure of inequality. *Economic Inquiry*, 56(4), pp.2177-2194.
- Helliwell, J. F., Layard, R., Sachs, J. D., & De Neve, J. E. (2021). *World Happiness Report 2021*.
- Herrin, J., Witters, D., Roy, B., Riley, C., Liu, D., & Krumholz, H. M. (2018). Population well-being and electoral shifts. *PLOS ONE*, 13, e0193401.

- Hicks, A. M., & Swank, D. H. (1992). Politics, institutions, and welfare spending in industrialized democracies, 1960-82.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3), pp.658-674.
- Huber, J., & Inglehart, R. (1995). Expert interpretations of party space and party locations in 42 societies. *Party Politics*, 1(1), pp.73-111.
- Hudde, A. (2025, October). The gender gap in voting behaviour: An analysis through the 2025 German federal election. Bonn: Friedrich-Ebert-Stiftung. <https://www.fes.de/en/stiftung/international-work/articles-international-work/the-gender-gap-in-voting-behaviour>
- IDEA. (2022). Global State of Democracy Report 2022: Forging social contracts in a time of discontent. International IDEA.
- IDEA. (2024). Global State of Democracy Report 2024: Strengthening the legitimacy of elections in a time of radical uncertainty. International IDEA.
- Jeannotte, M. S. (2003). Singing alone? The contribution of cultural capital to social cohesion and sustainable commun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9, pp.35-49.
- Jebb, A. T., Morrison, M., Tay, L., & Diener, E. (2020). Subjective well-being around the world: Trends and predictors across the life span. *Psychological Science*, 31(3), pp.293-305. <https://doi.org/10.1177/0956797619898826>
- Jenson, J. (1998). Mapping social cohesion: The state of Canadian research (Vol. 103).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s.
- Jost, J. T., Nosek, B. A., & Gosling, S. D. (2008). Ideology: Its resurgence in social, personality, and political psycholog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2), pp.126-136.
- Jung, Heejung, Mark Bendeich, and Thomas Escritt. (2025). How a Gen Z Gender Divide is Reshaping Democracy. Reuters, 29 May.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how-gen-z-gender-divide-is-reshaping-democracy-2025-05-29/>
- Jungkunz, S., Helbling, M., & Osenbrügge, N. (2024). Measuring political radicalism and extremism in surveys: Three new scales. *PLOS ONE*, 19(5), e0300661.
- Kitschelt, H., & Hellemans, S. (1990). The left-right semantics and the new politics cleavage.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3(2), pp.210-238.

- Klar, S. (2014). A multidimensional study of ideological preferences and priorities among the American public. *Public Opinion Quarterly*, 78(S1), pp.344-359.
- Knowles, E. D., & Tropp, L. R. (2018). The racial and economic context of Trump support: Evidence for threat, identity, and contact effects in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9, pp.275-284.
- Knutsen, O. (1995). Value orientations, political conflicts and left-right identification: A comparative stud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28(1), pp.63-93.
- Korpi, W. (1983).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Routledge & Kegan Paul.
- Larsen, C. A. (2013). *The rise and fall of social cohesion: The construction and de-construction of social trust in the US, UK, Sweden and Denma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 Bon, G. (1897). *The crowd: A study of the popular mind*. Fischer.
- Lee, Soohyun Christine. (2024). Anti-Gender Politics, Economic Insecurity, and Right-Wing Populism: The Rise of Modern Sexism among Young Men in South Korea.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 Lendvai-Bainton, N., & Szelewa, D. (2021). Governing new authoritarianism: Populism, nationalism and radical welfare reforms in Hungary and Poland.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55(4), pp.559-572.
- Lipset, S. M. (1960). *Political man*. Doubleday.
- Logvinenko, I. (2020). Authoritarian welfare state, regime stability, and the 2018 pension reform in Russia.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53(1), pp.100-116.
- MacWilliams, M. C. (2016). Who decides when the party doesn't? Authoritarian voters and the rise of Donald Trump.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49, pp.716-721.
- Major, B., Blodorn, A., & Major Blascovich, G. (2018). The threat of increasing diversity: Why many White Americans support Trump in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21, pp.931-940.
- Marshall, T. H.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CBO9780511801529>
- Meltzer, A. H., & Richard, S. F. (1981).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ment*.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5), pp.914-927.
- Milosav, Đ., Dickson, Z., Hobolt, S. B., Klüver, H., Kuhn, T., & Rodon, T. (2025). The youth gender gap in support for the far right.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pp.1-25.
- Moustakas, L. (2023). Social cohesion: Definitions, causes and consequences. *Encyclopedia*, 3(2), pp.1028-1037.
- Mulligan, C. B., Gil, R., & Sala-i-Martin, X. (2004). Do democracies have different public policies than nondemocraci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8(1), pp.51-74.
- Mutz, D. C. (2018). Status threat, not economic hardship, explains the 2016 presidential vot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15, E4330-E4339.
- Nelson, D. W. (2009). Feeling good and open-minded: The impact of positive affect on cross-cultural empathic responding.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 pp.53-63.
- Neundorff, A. (2009). Growing up on different sides of the wall—A quasi-experimental test: Applying the left-right dimension to the German mass public. *German Politics*, 18(2), pp.201-225.
- Nord, M., Altman, D., Angiolillo, F., Fernandes, T., Good God, A., & Lindberg, S. I. (2025). Democracy report 2025: 25 years of autocratization – Democracy trumped? V-Dem Institute.
- O'Connor, J. (1973). *The fiscal crisis of the state*. New York.
- OECD Publishing,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9789264191655-en>
- OECD. (2011).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2: Social cohesion in a shifting world*.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persp\\_glob\\_dev-2012-en](https://doi.org/10.1787/persp_glob_dev-2012-en)
- OECD. (2020).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9870c393-en>
- OECD. (2025).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2025 edition*. OECD Publishing.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5/10/oecd-guidelines-on-measuring-subjective-well-being-2025-update\\_](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publications/reports/2025/10/oecd-guidelines-on-measuring-subjective-well-being-2025-update_)

b957f42e/9203632a-en.pdf

- Oishi, S., Diener, E., & Lucas, R. E. (2007). The optimum level of well-being: Can people be too happy?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2(4), pp.346-360.
- Ojeda, C. (2015). Depress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Social Science Quarterly*, 96(5), pp.1226-1243.
- Pahl, R. E. (1991). The search for social cohesion: From Durkheim to the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 Archives Européennes de Sociologie*, 32, pp.345-360.
- Parsons, T. (2013). *The social system*. Routledge.
- Pawar, M. (2025). *World Social Report 2025: A new policy consensus to accelerate social progress*. United Nations.
- Pew Research Center. (2021). *Diversity and Division in Advanced Economies*. Washington.
- Pirralha, A. (2018). The link betwee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A three wave causal analysis of the German SOEP household pan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8(2), pp.1-15.
- Pirralha, A. (2018). The link betwee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A three wave causal analysis of the German SOEP household pan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8(2), pp.1-15.
- Piurko, Y., Schwartz, S. H., & Davidov, E. (2011). Basic personal values and the meaning of left-right political orientations in 20 countries. *Political Psychology*, 32(4), pp.537-561.
- Rajulton, F., Ravanera, Z. R., and Beaujot, R. (2007). Measuring social cohesion: An experiment using the Canadian national survey of giving, volunteering, and participat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80(3), pp.461-492. <https://doi.org/10.1007/s11205-006-0011-1>
- Rudra, N., & Haggard, S. (2005). Globalization, democracy, and effective welfare spending in the developing world.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8(9), pp.1015-1049. <https://doi.org/10.1177/0010414005279258>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 55(1), pp.68-78.
- Scheibehenne, B., Von Helversen, B., & Shevchenko, Y. (2014). Change and status quo in decisions with defaults: The effect of incidental emotions depends on the type of default.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9, pp.287-296.
- Schiefer, D., & van der Noll, J. (2017). The essentials of social cohesion: A literature review.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2(2), pp.579-603. doi:10.1007/s11205-016-1314-5
- Schwartz, S. H., Cieciuch, J., Vecchione, M., Davidov, E., Fischer, R., Beierlein, C., ... & Konty, M. (2012). Refining the theory of basic individual val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3(4), pp.663-688.
- Schwarz, N. (1990). Feelings as information: Informational and motivational functions of affective states. In E. T. Higgins & R. M. Sorrentino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ur* (Vol. 2, pp. 527-561). Guilford Press.
- Sellberg, M. M., Wilkinson, C., & Peterson, G. D. (2015). Resilience assessment: A useful approach to navigate urban sustainability challenges. *Ecology and Society*, 20(1). <https://doi.org/10.5751/ES-07258-20014>
- Shafer, B. E., & Claggett, W. J. M. (1995). *The two majorities: The issue context of modern American politic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Sirovátka, T., Guzi, M., & Saxonberg, S. (2018). Satisfaction with democracy and perceived performance of the welfare state in Europ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https://doi.org/10.1177/0958928718757685>
- Szikra, D., & Öktem, K. G. (2023). An illiberal welfare state emerging? Welfare efforts and trajectories under democratic backsliding in Hungary and Turkey.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33(2), pp.201-215.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5). Democracy index 2024: What's wrong with representative democracy? <https://www.eiu.com/n/campaigns/democracy-index-2024-confirmation/>
- Tourangeau, R., & Yan, T. (2007). Sensitive questions in surveys. *Psychological Bulletin*, 133(5), pp.859-883. <https://doi.org/10.1037/0033-2909.133.5.859>
- UNECE. (2023). *Social cohesion: Concept and measurement*. United Nations.
- Veenhoven, R. (1988). The utility of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20(4),

pp.333-353.

Ward, G. (2019). Happiness and voting behaviour. In World Happiness Report 2019, pp.46-65.

Ward, G., De Neve, J. E., Ungar, L. H., & Eichstaedt, J. C. (2021). (Un)happiness and voting in US presidential ele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20(2), pp.370-395.

Weisberg, H. F. (1980). A multidimensional conceptualization of party identification. *Political Behavior*, 2, 33-60.

Welzel, C., & Deutsch, F. (2012). Emancipative values and non-violent protest: The importance of ecological effect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2(2), pp.465-479.

Wesołowska, M., Kuźmar, S., Totleben, B., & Piątek, D. (2025). Distributional consequences of political freedom: Inequality in transition countrie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pp.1-32.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n.d.-a). 2017-2021 World Values Survey wave 7 master survey questionnaire.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7.jsp>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n.d.-b). 한국어 설문지.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7.jsp>

Yörük, E., & Comin, A. (2020). Electoral polarization, class politics and a new welfare state in Brazil and Turkey. *European Review*, 28(3), pp.513-535.

Zhong, Y., & Chen, J. (2002). To vote or not to vote: An analysis of peasants' participation in Chinese village election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5(6), pp.686-712.



## [부록 1] 2025 사회통합 실태조사 표본 설계

### 1. 모집단 정의 및 분석

#### 1) 모집단의 정의

##### □ 목표 모집단

- 2025년도 6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5세 이하 전체 국민

##### □ 조사 모집단

- 2025년도 6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가구 중 집단시설가구, 외국인가구 및 비 민간 시설에 거주하는 가구를 제외한 일반 가구

##### □ 표본 추출틀

- 2024년 기준 통계청의 SGI 집계구를 표본 추출틀로 이용함.

#### 2) 모집단 분석<sup>16)</sup>

- 2024년 기준 모집단 집계구 분포를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면, 전체 집계구는 112,353개이며, 동부는 76.5%, 읍면부는 23.4%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16.9%, 경기도가 24.9%를 차지하고 있음(<부표 1> 참조).

- <부표 2>로부터 가구 규모를 파악해보면, 전체 가구는 23,611천 가구이며, 이 중 동부의 가구는 전체는 75.9%를 차지하며, 읍면부는 24.1%로 나타났으며, 서울

16) 지역별 인구 분포와 성별 분포 간의 차이는 집계구 내 성별 데이터의 집계구별 합산 결과의 차이로 발생된 결과로서 모집단 분석 과정에서 일부 통계수치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이 전체 가구의 17.6%, 경기도가 23.5%를 차지하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전체 가구의 4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편, 전체 인구는 54,598천 명이며, 이 중에서 경기도의 인구 비율이 전체의 25.4%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서울이 17.2%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인구비율은 48.2%로 2023년 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음(〈부표 3〉 참조).

〈부표 1〉 모집단 집계구 분포

(단위 : 개)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9,553	9,488	.	.	19,041
부산	2,406	3,939	97	267	6,709
대구	1,607	2,765	232	416	5,020
인천	2,198	3,743	193	13	6,147
광주	872	2,170	.	.	3,042
대전	1,147	1,880	.	.	3,027
울산	571	1,264	203	268	2,306
세종	17	579	143	78	817
경기	7,532	15,680	2,714	1,994	27,920
강원	655	1,282	1,287	393	3,617
충북	685	1,271	1,501	582	4,039
충남	684	1,468	2,239	966	5,357
전북	883	1,779	1,630	200	4,492
전남	503	1,144	2,849	597	5,093
경북	1,104	1,757	3,005	811	6,677
경남	1,463	2,888	2,176	1,073	7,600
제주	680	340	408	21	1,449
계	32,560	53,437	18,677	7,679	112,353

주: 가구가 있는 집계구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음.

〈부표 2〉 모집단 가구 분포

(단위 : 천 가구)

구 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2,344	1,809	0	0	4,153
부산	593	799	21	52	1,464
대구	374	546	49	82	1,051
인천	500	706	43	2	1,251
광주	199	434	0	0	633
대전	279	377	0	0	656
울산	127	241	41	51	460
세종	3	108	34	15	160
경기	1,713	2,909	540	377	5,539
강원	155	264	309	76	805
충북	154	259	354	114	881
충남	157	282	497	188	1,124
전북	196	356	381	43	977
전남	112	232	633	112	1,089
경북	261	350	718	162	1,490
경남	329	560	506	204	1,598
제주	135	64	76	4	279
계	7,631	10,295	4,203	1,483	23,612

〈부표 3〉 모집단 인구 분포

(단위 : 천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4,700	4,686	0	0	9,386
부산	1,137	1,954	43	132	3,267
대구	743	1,353	103	209	2,408
인천	1,086	1,861	91	6	3,044
광주	393	1,066	0	0	1,459
대전	530	937	0	0	1,467
울산	261	620	93	134	1,108
세종	6	283	65	36	391
경기	3,758	7,804	1,323	982	13,868
강원	294	619	625	182	1,719
충북	310	629	723	277	1,939
충남	312	720	1,065	470	2,566
전북	396	860	776	101	2,133
전남	230	554	1,281	283	2,348
경북	512	858	1,430	393	3,193
경남	674	1,409	1,025	519	3,627
제주	322	160	184	10	675
계	15,664	26,372	8,828	3,733	54,597

〈부표 4〉 모집단 인구의 성별 분포

(단위: 천 명)

구 분	동부				읍면부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2,204	2,318	2,172	2,390	0	0	0	0
부산	545	545	920	993	22	19	62	66
대구	360	352	633	681	53	45	102	102
인천	547	500	886	922	45	41	3	3
광주	200	176	504	538	0	0	0	0
대전	268	239	446	470	0	0	0	0
울산	136	114	307	298	50	39	66	64
세종	3	3	134	140	35	27	20	19
경기	1,909	1,710	3,707	3,885	719	549	484	477
강원	148	132	296	315	314	280	91	90
충북	158	139	302	316	363	321	141	133
충남	162	136	345	353	534	476	239	225
전북	199	179	411	434	374	363	50	50
전남	117	103	271	271	616	590	141	136
경북	259	231	418	427	695	655	199	196
경남	349	297	683	693	503	468	252	254
제주	158	154	76	81	92	84	5	5
계	7,720	7,328	12,510	13,207	4,415	3,958	1,854	1,820

□ 지역별 성별 분포를 파악해 보면, 〈부표 4〉와 같이 전국 남성의 비율은 50.2%, 여성은 49.8%로 나타나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로 남녀 성별 규모를 비교했을 때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이며, 나머지 지역은 남성의 비율이 높았음.

□ 동부지역에서 남녀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지역은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지역 등 9개 지역이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울산과 경남으로 나타났다.

□ 한편, 읍면부에서는 동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으로는 부산이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남성 비율이 높게 나타남.

〈부표 5〉 시도별 인구의 연령별 분포

(단위 : 천명)

구 분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서울	1,187	1,398	1,436	1,405	1,493	1,335	1,041	9,294
부산	437	385	397	478	529	555	453	3,234
대구	357	290	289	359	421	373	295	2,383
인천	470	368	433	488	518	448	289	3,014
광주	244	203	182	232	245	191	148	1,444
대전	234	220	190	220	240	202	145	1,452
울산	182	121	144	180	205	170	94	1,096
세종	92	41	61	77	54	38	23	386
경기	2,254	1,691	2,000	2,300	2,362	1,869	1,255	13,731
강원	220	178	177	226	291	328	280	1,700
충북	253	214	220	258	323	348	301	1,917
충남	361	281	305	366	405	414	404	2,534
전북	278	224	206	275	355	369	402	2,110
전남	284	210	218	285	395	426	500	2,318
경북	382	293	317	407	532	607	616	3,154
경남	522	344	405	539	630	618	528	3,586
제주	118	73	85	111	116	91	73	669
계	7,874	6,533	7,065	8,206	9,117	8,381	6,848	54,024

주: 인구수 합계의 차이는 집계구 내 가구가 없으나, 사람이 살고 있는 거처를 제외하여 총가구에 대한 인구수와는 차이가 있음.

□ 시도별 연령분포는 〈부표 5〉와 같이 전체 연령대를 시도별로 분석하였으며, 서울은 40대와 50대 연령이 32.1%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은 60대 연령이 부산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였고, 대구는 50대 연령이 17.7%였으며, 상대적으로 20대 연령이 12%로 타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남. 인천은 20대 미만 연령대가 15.6%로 20대 12.2%보다 높게 나타남. 광주는 20대 미만이 16.9%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전 또한 20대 미만이 16.1%로 높게 나타났음. 울산도 50대가 1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대 미만이 17.5% 나타났음. 세종은 20대 미만이 23.8%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해당 연령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70대 이상 연령층의 비율이 5.9%로 가장 낮았으며, 60대의 비율은 9.8%로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는 50대가 1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원은 60대가 19.3%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은 60대가 1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가 16.8%로 높았고, 충남은 60대가 1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전북은 70대 이상이 19.1%, 전남은 70대 이상이 21.6%로 가장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20대가 9.1%로 타지역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음. 경북은 70대 이상이 19.5%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은 50대가 17.6%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는 20대 미만이 1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전체적으로 50대 인구 비율이 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대 미만이 17.6%, 50대가 17.3%의 순이며, 60대 이상이 24.5%로 고령층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2. 표본 설계

### 1) 2025년도 사회통합조사 표본설계의 기본 방향

- 모집단으로 2024년 통계청의 SGI 데이터인 집계구를 활용하여 표본 설계함.
- 이를 위해 기존의 조사 설계와 같이 층화변수를 사용하고, 각 층별로 산출되는 통계값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배분 방법 및 조정이 가능한 층화추출방법을 적용함.
- 면접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비표본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표본설계방안을 제시함.

### 2) 표본규모의 결정

- 층화표본추출의 경우 비례배분과 네이만 배분 가정하에서 전체 표본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산식은 다음과 같음.

$$\bullet \text{ 비례배분 : } n = \frac{\sum_{h=1}^L N_h S_h^2}{ND + \sum_{h=1}^L W_h S_h^2}$$

$$\bullet \text{ 네이만배분 : } n = \frac{(\sum_{h=1}^L N_h S_h)^2}{N^2 D + \sum_{h=1}^L N_h S_h^2}$$

○ 여기서  $S_h^2$  은  $h$ 층의 모집단 분산이며,  $W_h = N_h/N$ 이고,  $D = B^2/4$ 임.

○ 모집단 분석에서 조사 대상 연령대인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연령대의 비율 ( $P_h$ )을 변동으로 고려하여  $S_h^2 = P_h Q_h$ 로 고려하여 표본 규모를 산정할 수 있음.

〈부표 6〉 표본 규모 산정

(단위 : %, 가구, 명)

B	비례배분		네이만배분	
	가구기준	개인기준	가구기준	개인기준
1.1	5,841	5,878	5,819	5,858
1.2	4,908	4,939	4,890	4,922
1.3	4,182	4,208	4,167	4,194
1.34	3,936	3,961	3,922	3,947
1.35	3,878	3,902	3,864	3,889
1.36	3,821	3,845	3,807	3,832
1.4	3,606	3,629	3,593	3,616
1.5	3,141	3,161	3,130	3,150
1.55	2,942	2,960	2,931	2,950

□ 표본 규모는 조사 대상 연령에 대해 통계값의 추정오차가 1.5%로 관리할 경우 가구 기준으로 비례배분인 경우 약 3,141가구가 요구되며, 개인 기준으로는 3,161명의 표본으로 필요함. 만일 추정오차를 1.55%로 관리할 경우 비례배분의 경우 가구 기준으로 2,942가구, 개인 기준으로 2,960명의 표본이 필요함 (〈부표 6〉 참조).

□ 또한 네이만 배분의 경우 가구 기준으로 목표오차 1.5%인 경우 3,130가구의 표본이 요구되며, 개인 기준에서는 3,150명의 표본이 요구됨.

□ 따라서 목표 오차를 1.5% 내외로 관리할 경우 개인 기준 또는 가구 기준으로 약 3,000가구(명)의 표본이 요구됨.

### 3) 표본배분 방법

□ 층별 표본배분 방법으로는 모집단의 층별 규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과 모집단의 층별 변동을 고려한 표본배분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비례배분법 : 
$$n_h = n \times \frac{N_h}{\sum_{k=1}^H N_k}$$
- 네이만 배분법 : 
$$n_h = n \times \frac{N_h S_h}{\sum_{k=1}^H N_k S_k}$$
- 제곱근 비례배분법 : 
$$n_h = n \times \frac{\sqrt{N_h}}{\sum_{k=1}^H \sqrt{N_k}}$$

□ 방안1: 지역별 가구 수에 대한 비례배분

- 층별 가구 수에 비례하도록 표본을 배분하는 방안으로 표본 가구 수 3,000가구를 집계구당 6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할 경우 요구되는 집계구는 500개이며, 이를 지역별 가구 수에 비례하여 배분할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의 47%가 배분되어 가구 규모가 큰 지역에 과다 배분되는 결과가 나타남(<부표 7> 참조).

〈부표 7〉 표본 집계구 배분: 비례배분

(단위: 개)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50	38	-	-	88
부산	13	17	0	1	31
대구	8	12	1	2	23
인천	11	15	1	0	27
광주	4	9	-	-	13
대전	6	8	-	-	14
울산	3	5	1	1	10
세종	0	2	1	0	3
경기	36	62	11	8	117
강원	3	6	7	2	18
충북	3	5	8	2	18
충남	3	6	11	4	24
전북	4	8	8	1	21
전남	2	5	13	2	22
경북	6	7	15	3	31
경남	7	12	11	4	34
제주	3	1	2	0	6
계	162	218	90	30	500

## □ 방안2: 층별 조사 대상 연령의 비율 변동에 따른 네이만 배분

○ 층별 조사 대상 연령의 비율을 고려하여 변동이 큰 층에 많은 표본을 배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층의 규모와 조사 대상 연령대의 변동이 큰 층에 많은 표본을 배분함으로써 추정오차를 줄일 수 있음.

○ 배분 결과를 보면 〈부표 8〉에서와 같이 비례배분보다 더 많은 표본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배분되어 규모가 큰 층에 더 많은 표본이 배분되었음을 알 수 있음.

〈부표 8〉 표본 집계구 배분: 네이만 배분

(단위: 개)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47	41	-	-	88
부산	13	18	0	1	32
대구	8	12	1	2	23
인천	11	16	1	0	28
광주	4	10	-	-	14
대전	6	9	-	-	15
울산	3	6	1	1	11
세종	0	3	1	0	4
경기	36	67	11	9	123
강원	3	6	5	2	16
충북	3	6	5	3	17
충남	3	7	8	4	22
전북	5	8	5	1	19
전남	3	5	9	3	20
경북	6	8	10	4	28
경남	7	13	8	5	33
제주	3	2	2	0	7
계	161	237	67	35	500

□ 방안3: 지역별 가구 수의 제공근에 비례하도록 배분.

○ 층별 가구 수의 제공근에 비례하도록 표본을 배분하는 방안으로 집계구당 6가구를 표본으로 조사할 경우 요구되는 집계구는 500개이며, 이를 지역별 가구 수의 제공근에 비례하여 배분할 경우 방안1)의 특정 지역에 과대하게 배분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음(〈부표 9〉 참조)

○ 배분 결과를 보면 〈부표 9〉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오차를 관리하기 위한 수준으로 방안1과 방안2의 배분보다 많은 수의 집계구가 전국적으로 배분되었음

〈부표 9〉 표본 집계구 배분: 제곱근 비례배분(최종안)

(단위: 개)

구분	동부		읍면부		계
	일반	아파트	일반	아파트	
서울	24	21	-	-	45
부산	12	14	2	4	32
대구	9	11	3	4	27
인천	11	13	3	2	29
광주	7	10	-	-	17
대전	8	9	-	-	17
울산	5	8	3	3	19
세종	2	5	3	2	12
경기	20	26	11	9	66
강원	6	8	9	4	27
충북	6	8	9	5	28
충남	6	8	11	7	32
전북	7	9	10	3	29
전남	5	7	12	5	29
경북	8	9	13	6	36
경남	9	12	11	7	39
제주	6	4	4	2	16
계	151	182	104	63	500

□ 최종적으로 표본배분은 층별 가구 수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방안3의 배분 방법을 적용하고자 함.

#### 4) 표본 집계구 대체

□ 조사과정에서 응답거부 또는 재개발 등으로 인한 집계구 소멸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동일 지역의 대체 집계구로 대체하도록 함.

□ 이를 위해 2배수의 집계구를 추가로 추출하였으며, 집계구 대체 방법은 기본적으로 동일층에 속하는 집계구를 대체하도록 함.

## 5) 가구 내 응답자의 선정 방법

- 본 조사는 표본 가구 내에서 대표 응답자를 선정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서 대표 가구원의 선정은 Kish(1970)에 의해 제안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나, 조사 현장에서 조사원의 방법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생일법(last birthday)”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즉,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19세 이상 가구원 중 가장 근접한 시점의 생일인 가구원을 선정하여 이들로부터 응답을 받는 방법을 적용함(2025년 6월 현재 만 19~75세).
- 예를 들어 가구주 및 배우자 2인과 만 19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대표 가구원 선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되며, 이들 2명 중 조사 시점 기준으로 가장 생일이 빠른 사람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방법임.
-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최근 생일자를 접촉하기 어려운 경우 가구주 또는 배우자를 응답 가구원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완료하도록 함.

## 3. 추정방법

### 1) 가중치의 계산

- 층별의 모집단 규모에 따른 비례 배분인 경우 자체 가중치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모집단 분포와 표본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각 층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조사는 표본 집계구에서 표본 가구를 선정하기 때문에 설계 가중치를 기본가중치로 고려한 후 지역별, 조사구별, 가구원 수별로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함.

$N$  : 모집단 총 집계구수( $=\sum_{h=1}^H N_h$ )

$N_h$  :  $h$ 층의 모집단 집계구수

$n_h$  :  $h$ 층의 표본 집계구 수

$M_{hi}$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총 가구수

$m_{hi}$  :  $h$ 층의  $i$ 번째 집계구내 표본 가구수

$x_{hij}$  :  $h$ 층의  $i$ 번째 집계구내  $j$ 번째 표본가구에서 만 19세 이상 가구원수

$r_{hi}$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응답 가구수

$w_{hij}$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j$ 번째 가구의 추출가중치

$w_{hi}^r$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무응답조정가중치

$w_{hij}^p$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j$ 번째 가구의 사후가중치

$WH_{hij}$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j$ 번째 가구의 가중치

$WP_{hij}$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j$ 번째 가구내 응답자의 개인가중치

$WP_{hij}^p$  :  $h$ 층의  $i$ 번째 집계구의  $j$ 번째 가구내 개인 응답자의 최종 가중치

①  $h$ 층의  $j$ 번째 집계구의  $i$ 번째 가구의 기본가중치

$$w_{hij} = \frac{M_{hi}}{m_{hi}} \times x_{hij}$$

② 무응답 조정가중치

$$w_{hij}^r = w_{hij} \times \frac{m_{hi}}{r_{hi}}$$

③ 가구 최종 가중치

$$WH_{hij} = w_{hij}^p = w_{hij}^r \times \frac{X_h}{\hat{X}_h}$$

여기서  $X_h$ 는  $h$ 층의 추계 가구,  $\hat{X}_h$ 는 가중치의 합을 의미함

④ 개인 가중치 : 가구 최종 가중치를 기반으로 응답 가구 내 19세 이상 성인 수에 따라 개인가중치를 산정함

$$WP_{hij} = WH_{hij} \times (\text{가구내성인수})$$

⑤ 개인 최종 가중치

$$WP_{hij}^p = WP_{hij} \times \frac{A_h}{\hat{A}_h}$$

여기서  $A_h$ 는  $h$ 층의 추계 인구,  $\hat{A}_h$ 는 가중치의 합을 의미함.

## 2) 추정치의 계산

### ① 평균 소득 및 지출

$$\hat{\bar{Y}} = \sum_h^L \sum_i^{n_h} \sum_j^{m_{hi}} W_{hij} y_{hij} / W_{...}$$

여기서  $W_{...}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를 나타내며, 분석단위가 가구인 경우  $WH_{hij}$ , 개인인 경우  $WP_{hij}^p$  가중치를 사용하며, 가중치 표현을 위해  $W_{hij}$ 로 통합하여 표기함.

### ② 표본평균 $\hat{\bar{Y}}$ 의 분산 추정치

$$\hat{V}(\hat{\bar{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여기서  $e_{hi} = \left( \sum_{j=1}^{m_{hi}} W_{hij} (y_{hij} - \hat{\bar{Y}}) \right) / W_{...}$ ,  $\bar{e}_{h..} = \sum_{i=1}^{n_h} e_{hi} / n_h$  임.

$$SE(\hat{\bar{Y}}) = \sqrt{\hat{V}(\hat{\bar{Y}})}$$

### ③ 상대표준오차

$$R\widehat{SE}(\hat{\bar{Y}}) = \frac{SE(\hat{\bar{Y}})}{\hat{\bar{Y}}} \times 100\%$$

## [부록 2] 2025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표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집계구 번호					
-----------	--	--	--	--	--

응답자 ID					
-----------	--	--	--	--	--

## 2025년

# 사회통합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저는 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의 면접원 \_\_\_\_\_입니다.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로 「2025년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다른 분들의 의견과 함께 집계분석되어 우리 국민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 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 수립에 귀중한 기초 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주관기관**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문 의 처**  
 김지혜 팀장  
 02-3014-0122

집계구 번호 (4자리)		표본가구 여부	① 표본가구	② 대체가구
		가구원 대체 여부	① 빠른생일자	② 대체가구원

※ 응답자 선정 후 체크해주세요.

응답자 이름 (빠른생일자)		응답자 연락처 (빠른생일자)	
응답자 성별 (선문1)	① 남      ② 여	응답자 나이 (선문2-1)	_____세(만으로 계산)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세부주소)		

※ 조사 종료 후 면접원이 체크해주세요.

응답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문2-값)	① 가구주 본인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기타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 응답 도움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유치조사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	--------------------------------	------------------------------	--------------	------------	--------------

※ 방문 기록 적어주세요.

1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3)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2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3)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3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3)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4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input type="checkbox"/> 1) 조사완료 <input type="checkbox"/> 2)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3) 부재중 <input type="checkbox"/> 4) 미완성 <input type="checkbox"/> 5) 조사불가
면접원 성명		면접시간	분
수퍼바이저 검증		검증결과	



## 응답자 선정 문항

- ★ 만19~75세의 가구원 중, 생일이 가장 빠른 가구원을 본 조사의 응답자로 선정합니다(주민등록 생월일 기준).
- ★ 만19세 이상(2006년 6월 1일 이전 출생)에서 만75세 이하(1949년 5월 31일 이후 출생)가 응답합니다.

선문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선문2. 귀하의 생년월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년 \_\_\_\_\_월 출생(※ 1949년 6월생 ~ 2006년 5월생 응답가능)

선문2-1. 나이 (※ 면접원 입력)

※ 1~5월생 : 2025년 - 출생년도 / 6~12월생 : 2025년 - 출생년도 -1

\_\_\_\_\_세 (※ 만19세 ~ 75세 응답 가능)



## A. 가구 구성 및 응답자 일반사항(※'빠른 생일자'께서 응답)

★ 2025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말씀해주세요.

문A1. 귀댁의 가구원 수는 몇 명이십니까? 그리고 가구원 중 다음의 가구원은 몇 명입니까?

구분	가구원 수	본인해당 여부
문A1-1.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수 (본인 포함) ※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도 포함 즉, 주거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소득을 공유하는 가족은 포함	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A1-2. 가구원 중 노인 수 ※ 만 6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기준 1960년 5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명 →	① 해당 ② 비해당
문A1-3. 가구원 중 장애인 수 ※ 등록장애인 기준	명 →	① 해당 ② 비해당
문A1-4.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 수 ※ 만성질환자는 3개월 이상 투병·투약하는 경우임. 단, 투약이 필요하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기간은 최초 투병 및 투약시점부터 산정함	명 →	① 해당 ② 비해당
문A1-5. 가구원 중 아동 수 ※ 만18세 미만으로 주민등록기준 2007년 6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A1-6. 가구원 중 실업자 수 ※ 2025.5.31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 중인 자	명 →	① 해당 ② 비해당

문A2. 귀하와 가구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가구주의 \_\_\_\_\_)

- ① 가구주 본인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기타

문A3. 귀하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최종 학교	2) 이수 여부
	① 무학 → A3-2로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석사/박사)	① 재학 ② 휴학 ③ 중퇴 ④ 수료 ⑤ 졸업 ※ 최고학력 기준으로 응답
문A3-1. 교육수준		
문A3-2. 혼인상태	① 유배우(사실혼 포함)      ② 별거      ③ 사별      ④ 이혼      ⑤ 미혼(미혼 부·모 포함)	

문A4. 귀하의 현재 경제활동 참여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포함)
- ④ 특수고용(택배기사, 배달원, 보험설계사, 학습지도사 등)
- ⑤ 고용주
- ⑥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 ⑦ 무급가족종사자
- ⑧ 실업자(※2025. 5. 31.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중인 경우임) → A5로
- ⑨ 비경제활동인구(주부, 학생, 군복무 등)(※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 A5로

문A4-1. (문A4에서 ①~⑦ 취업자만)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군인

문A4-2. (문A4에서 ‘① 상용직’ 응답자만) 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문A5. 귀하께서는 나의 일(직업)을 잃는 것 혹은 일자리를 찾는 것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 ① 매우 걱정한다  
② 걱정한다  
③ 걱정하지 않는다  
④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문B6. 맨 아래 0점부터 꼭대기 10점까지 매겨진 사다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사다리의 꼭대기는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삶을 뜻하고, 맨 아래는 최악의 삶을 나타냅니다.

귀하는 현재 자신이 사다리의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숫자에 표시해 주십시오.	10	5년 뒤, 귀하는 자신이 사다리의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숫자에 표시해 주십시오.	10
	9		9
	8		8
	7		7
	6		6
	5		5
	4		4
	3		3
	2		2
	1		1
0	0		

문B7. 귀하는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사회적 지지란, 다른 사람(가족, 친척, 선생님, 친구 등)으로부터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일상적인 고민을 나누고 감정과 정보를 나누는 것을 포함합니다.

전혀 받고 있지 않다	← 보통 →										매우 많이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B8. 우리 사회의 소득계층을 다섯 집단으로 구분할 때, 귀하는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①	②	③	④	⑤

문B9. 귀하는 현재의 재정 상황에 얼마나 만족하거나 불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①	②	③	④	⑤

문B10. 지난 10년 동안 귀댁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까?

상당히 좋아졌다	다소 좋아졌다	차이가 거의 없다	다소 나빠졌다	상당히 나빠졌다
①	②	③	④	⑤

문B11.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문B12. 귀하는 일반적으로 본인 세대에 비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높아질 것이다	약간 높아질 것이다	약간 낮아질 것이다	매우 낮아질 것이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믿을 수 없다							보통							매우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신뢰한다	다소 신뢰한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1) 대기업	①	②	③	④
2) 종교계	①	②	③	④
3) 교육계	①	②	③	④
4) 노동조합	①	②	③	④
5) 언론계(신문사, TV 방송국 등)	①	②	③	④
6) 의료계	①	②	③	④
7) 행정부 (중앙부처)	①	②	③	④
8) 입법부 (국회)	①	②	③	④
9) 헌법재판소	①	②	③	④
10) 법원	①	②	③	④
11) 군대	①	②	③	④
12) 금융기관	①	②	③	④
13) 시민운동단체	①	②	③	④
14) 검찰	①	②	③	④
15) 경찰	①	②	③	④
16)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일반)	①	②	③	④
17) 대통령실	①	②	③	④
18) 빅테크기업 (예: 구글, 네이버)	①	②	③	④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1)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만약 조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사람들은 대개 이기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C4. 귀하는 다음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동의도 반대도 아니다	약간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1) 오늘날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의 소득 격차는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3)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정부는 실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실을 제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줄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C5. 귀하는 다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부는 우리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나라에서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C6. 귀하는 우리나라의 갈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하다	대체로 심하다	별로 심하지 않다	전혀 심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문C7.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와 ~간의 갈등이	매우 심하다	대체로 심하다	별로 심하지 않다	전혀 심하지 않다
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①	②	③	④
2) 경영자와 노동자	①	②	③	④
3)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①	②	③	④
4) 정규직과 비정규직	①	②	③	④
5) 여성과 남성	①	②	③	④
6) 고령자와 젊은이	①	②	③	④
7) 진보와 보수	①	②	③	④
8) 지역 간(수도권과 지방)	①	②	③	④
9) 기존 주민과 이주민(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①	②	③	④
10) 대기업과 중소기업	①	②	③	④

문C8. 귀하는 다음의 성향이나 특성이 다른 사람과 함께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1) 정치 성향	이 다른 친구 및 지인과의 식사 또는 술자리	①	②
	이 다른 이와와의 연애 및 결혼	①	②
	이 다른 이와 취미·봉사 활동	①	②
	이 다른 이와 시민·사회단체 활동	①	②
2) 종교	가 다른 친구 및 지인과의 식사 또는 술자리	①	②
	가 다른 이와와의 연애 및 결혼	①	②
	가 다른 이와 취미·봉사 활동	①	②
	가 다른 이와 시민·사회단체 활동	①	②
3) 소득수준	이 다른 친구 및 지인과의 식사 또는 술자리	①	②
	이 다른 이와와의 연애 및 결혼	①	②
	이 다른 이와 취미·봉사 활동	①	②
	이 다른 이와 시민·사회단체 활동	①	②
4) 교육수준	이 다른 친구 및 지인과의 식사 또는 술자리	①	②
	이 다른 이와와의 연애 및 결혼	①	②
	이 다른 이와 취미·봉사 활동	①	②
	이 다른 이와 시민·사회단체 활동	①	②
5) 인종	이 다른 친구 및 지인과의 식사 또는 술자리	①	②
	이 다른 이와와의 연애 및 결혼	①	②
	이 다른 이와 취미·봉사 활동	①	②
	이 다른 이와 시민·사회단체 활동	①	②

문C9. 귀하께서는 정치, 경제, 문화, 성적 정체성 등 어떠한 이유로든, 사회로부터 차별받거나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div> <div>전혀 그렇지 않다</div> <div>←————→ 보통 ←————→ 매우 그렇다</div> </div>										
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C10. 귀하께서는 한국 사회에 혐오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심각하다
- ② 조금 심각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심각하지 않다
- ⑤ 전혀 심각하지 않다

문C1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혐오 표현을 보거나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매우 자주 있다
- ② 자주 있다
- ③ 별로 없다
- ④ 전혀 없다 (→ 문C12)

문C11-1. 귀하가 혐오 표현을 접하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① 친구/가족/지인
- ② 온라인포털/카페/커뮤니티
- ③ 메신저 서비스(카카오톡, 밴드, 라인, 위챗 등)
- ④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 ⑤ TV/라디오
- ⑥ 인터넷 방송(유튜브, 아프리카TV 등)
- ⑦ 캠페인, 거리 집회
- ⑧ 기타(적을 것: \_\_\_\_\_)

문C11-2. 혐오 표현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해당 사항 모두 선택)

- ① 여성
- ② 남성
- ③ 아동·청소년
- ④ 노인
- ⑤ 장애인
- ⑥ 이주민(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등)
- ⑦ 북한이탈주민
- ⑧ 난민
- ⑨ 성소수자
- ⑩ 특정 종교인
- ⑪ 노숙인
- ⑫ 특정 지역 출신인
- ⑬ 정치인
- ⑭ 연예인
- ⑮ 기타(적을 것: \_\_\_\_\_)

문C11-3. (문C11-2에 3개 이상 선택하였을 경우) 문C11-2에서 선택하신 혐오 표현 대상 중 혐오 표현의 내용이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문C12. 이주민에 대한 다음 진술문에 대해 귀하는 어느정도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이주민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①	②	③	④
2) 이주민이 늘면 범죄율이 증가한다	①	②	③	④
3) 이주민의 유입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①	②	③	④
4)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이주민들이 채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C18. 귀하는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 다음 각각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조금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	①	②	③	④
2)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	①	②	③	④
3) 남성과 여성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①	②	③	④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①	②	③	④
5)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①	②	③	④
6)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이민자,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인정하는 것	①	②	③	④
7) 사회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	①	②	③	④
8) 사회구성원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①	②	③	④
9)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①	②	③	④
10) 사회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	①	②	③	④
11) 사회 고위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노블레스 오블리주)	①	②	③	④
12) 사회구성원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①	②	③	④
13) 사회구성원이 여러 모임 등에서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①	②	③	④
14)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①	②	③	④
15)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	①	②	③	④
16)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드는 것	①	②	③	④
17) 좋은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	①	②	③	④
18)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	①	②	③	④
19)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	①	②	③	④
20)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	①	②	③	④
21) 정치적 이념이 다른 사람을 용인(인정, 수용)하는 것	①	②	③	④

문C19. 성공하기 위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필요하다
- ② 매우 중요하다
- ③ 대체로 중요하다
- ④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 ⑤ 전혀 중요하지 않다
- ⑥ 모르겠다



## D. 사회 참여

문D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 각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셨습니다?

	했다		안했다	
	지난 1년 동안 3번 이상	지난 1년 동안 1~2번	지난 1년은 아니지만 해본 적 있음	한번도 해본적 없다
1) 자원봉사	①	②	③	④
2) 사회단체나 기관에 기부	①	②	③	④
3) 정치집회, 모임 및 시위	①	②	③	④

문D2. 귀하는 다음의 선거 때 투표하셨습니다?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투표권이 없었음
1)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①	②	③	④
2) 2022년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	①	②	③	④
3)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①	②	③	④
4)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①	②	③	

문D3. 귀하는 평소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약간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D4. 지난 1년을 기준, 정치 관련 뉴스 혹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하루 평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셨습니까?

- ① 거의 접하지 않는다 → D5 문항으로  
 ② 일부 접하지만 30분 이내 → D4-1 문항으로  
 ③ 30분~1시간 → D4-1 문항으로  
 ④ 1시간~2시간 → D4-1 문항으로  
 ⑤ 2시간 이상 → D4-1 문항으로

문D4-1. 정치 관련 콘텐츠 소비 시간에서 다음 미디어의 사용 비율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총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 부탁드립니다.

- ① 전통적 미디어(예: 방송사/신문사 등)가 만든 콘텐츠 (            % )  
 ② 온라인에서 생산·유통되는 콘텐츠(예: 개인 유튜브 제작물) (            % )

문D5. 귀하는 다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해 주는 정당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해 주는 단체(노조, 직능단체 등)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D6. 귀하의 정치에 대한 인식 정도는 어떻습니까? 아래 항목별로 동의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2) 정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에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 현안과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D7. 귀하의 이념적 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매우 보수적	대체로 보수적	중도적	대체로 진보적	매우 진보적
①	②	③	④	⑤

문D8.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모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만일 다음과 같은 선상에 자유와 평등을 위치시킨다면 귀하의 의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Freedom)가 더 중요				평등(Equality)이 더 중요
①	②	③	④	⑤

문D9. 귀하는 다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국회는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법률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법원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4) 국회는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를 적절히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국회는 법원에 대한 견제 및 감시를 적절히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법원은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를 적절히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D10. 귀하는 다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정치사위 참가자들은 법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사회에서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장치로 작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법은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을 평화롭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기준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사회가 통합되기 위해서는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D11. 법은 일반시민과 정부(입법·행정·사법) 가운데 어느 쪽에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정부	← 동등하게 적용 →					→ 일반시민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12. 다음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데 포함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는 아님 →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임			
1) 정부는 부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고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종교 지도자가 법을 해석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사람들은 자유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국가는 실업자에게 수당을 제공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정부가 무능하면 군대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시민권은 국가 탄압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국가는 국민의 소득을 동등하게 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사람들은 통치자에게 복종한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13. 다음 두가지 통치 방법 중 어느 쪽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선거를 개입하지 않는 강한 지도자	← 보통 →					→ 민주적 정치 시스템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14. 귀하는 우리나라의 정치 시스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만족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15. 귀하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지 않다		←————→ 보통				←————→ 완전히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16.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D17. 테러 행위가 곧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가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귀하는 정부당국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가져야 한다	아마도 가져야 한다	아마도 가져서는 안된다	당연히 가져서는 안된다	선택할 수 없음
1) 정부 당국이 필요로 하는 기간만큼 재판 없이 사람을 구금할 권한	①	②	③	④	⑤
2) 사람들의 전화 통화를 도·감청할 권한	①	②	③	④	⑤
3) 불심 검문·검색할 권한	①	②	③	④	⑤

문D18. 귀하는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E. 복지에 대한 태도

문E1. 귀하는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E2. 귀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수준보다 축소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 수준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
- ②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
- ③ 현재 수준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E3. 귀하는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E4. 귀하는 다음의 증세 방안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높인다	①	②	③	④
2) 소비세(부가가치세)를 높인다	①	②	③	④
3) 기업의 법인세를 높인다	①	②	③	④
4)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높인다	①	②	③	④
5) 상속세/증여세를 높인다	①	②	③	④
6) 사회보험료를 대체하는 사회보장세를 신설한다	①	②	③	④
7) 탄소세를 신설한다	①	②	③	④



## F. 가구의 경제상태

- ★ 응답자가 가구의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경우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조사해 주세요.  
 ★ 2025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문F1. 귀댁의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재산과 부채에 대한 질문입니다.

※ 단위는 만원으로 작성하되 반올림하여 처리합니다. (예: 11만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

문F1-1. 금융재산	2025.5.31. 기준 귀댁의 금융재산은 얼마입니까?								만원
	※ 금융재산(정기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청약예금, 주식, 빌려준 돈 등)								

문F1-2. 기타 부동산 및 재산	2025.5.31. 기준 금융재산을 제외한 부동산 및 재산은 얼마입니까?								만원
	※ 사업목적의 (소유 또는 점유) 부동산의 경우, 부채를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 소유부동산(거주주택 및 그 외 주택, 상가, 토지, 콘도, 별장, 오피스텔 등) ※ 점유부동산(전세보증금, 권리금 등) ※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및 기타(회원권, 골동품 등)								

문F1-3. 부채 총액	2025.5.31. 기준 총 부채액은 얼마입니까?								만원
	※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합니다. ※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 일반사채, 카드빚 ※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 ※ 외상, 미리 탄 갯돈(미리 탄 갯돈의 경우 향후 부어야 하는 금액만 기재) ※ 기타부채(미린 월세, 체납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공과금 등)								

문F2. 지난 3개월(2025.3.1.~2025.5.31.)동안 귀댁의 월평균 부채원금 상환액과 이자의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총 부채원금 상환액과 이자 합계 월평균

						만원
일억	천	백	십	일		

문F3. 지난 3개월(2025.3.1.~2025.5.31.)동안 귀댁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세전 소득 기준)

※ 총 가구소득= 가구원 전체 근로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공적 이전소득

총 가구소득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면접원 확인 : ① 한 달 기준 가구소득입니다. 연봉을 기입하지 않았는지 체크하십시오.  
② 가구소득이 0만원인 경우는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을 확인하십시오.

문F4. 지난 3개월(2025.3.1.~2025.5.31.)동안 귀하의 월평균 총 근로소득은 얼마입니까? (※ 세전 소득 기준)

※ 근로소득= 임금 + 사업소득(자영소득 포함)

※ 사업소득자= 순소득(총소득-경비)

총 근로소득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 면접원 확인 : ① 한 달 기준 개인 근로소득(3개월 평균)입니다.  
② 가구소득이 0만원인 경우 개인 근로소득은 0만원 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문F5. 귀댁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단독주택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 ② 아파트
- ③ 연립 및 다세대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 ④ 기타 (영업용 건물,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컨테이너 등)

문F6. 귀댁이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 ② 전세
- ③ 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
- ④ 월세(사글세)
- ⑤ 기타 (무상, 사택 등)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며 통계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 「2025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조사참여·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2025년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다른 분들의 의견과 함께 집계·분석되어 우리 국민의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 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생명윤리위원회(IRB) 제2025-048호)를 받아 진행되며,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조사 결과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 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및 기타 정보는 **코드화되어 결과 분석이나 해석 시 오직 코드번호로만 식별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에 따라 조사 내용은 안전하게 보관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 6개월 간 보관 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본인은 「2025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수행과 관련하여 통계 작성의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조사·이용 목적]** ① 사회 및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인식

②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 마련

**[조사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만 75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의 남녀 3,000가구

**[조사 기간, 방법]** 2025년 7월~9월, 대면면접조사

**[조사답례품]** 5,000원 상품권

**[문의처]** - 조사: 한국리서치 02-3014-0122

- 연구 참여권익 및 활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44-287-8317

**[개인정보 조사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정보 조사 항목]** 소득, 생활비, 재산, 부채, 건강 등 설문 문항 항목

-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더라도 이익에 대한 손실 없이 참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2025년 사회통합 실태조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의(自意)에 의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본인은 위 사항들을 이해하였고,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의 조사 대상으로 참여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2025년      월      일

응답자 : \_\_\_\_\_ (인)

조사원 : \_\_\_\_\_ (인)





## Abstract

### **A Study of Assessment of Social Cohesion Status with Policy Implications (XII): The Multidimensionality of Changes in Social Perceptions**

Project Head: Cheong, Sejeong

This study examines, through a combination of literature review, empirical survey data, and multiple auxiliary data sources, (1)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of social cohesion and the need for its conceptual expansion; (2) trends in social cohesion and social perceptions using data from surveys conducted between 2014 and 2025; (3)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social participation and (4) the linkages between political orientation, value orientation, and future outlook and attitudes toward welfare; and (5) the association between democratic attitudes and welfare attitudes.

First, the concept of social cohesion, which throughout the late twentieth century centered on individuals' attachment to and integration within groups, has expanded since the 2000s into a broader notion emphasizing social capital, inclusion, and equality of opportunity. This shift indicates that social cohesion now encompasses not only interpersonal bonds but also the structural conditions of inclusion, trust, and equitable opportunity.

Second, the 2025 survey results show that perceptions of social cohesion, social trust, national pride, social support,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reached their highest levels since the survey began in 2014. However, comparisons with the European Social Survey (ESS) indicate that Korea remains closer to lower-tier countries such as Portugal and Hungary, highlighting that despite domestic improvements, Korea's rela-

tive international standing remains modest due to persistent structural limitations.

Third, analys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well-being and social participation reveal that higher levels of subjective well-being are associated with increased volunteering, charitable giving, and voter participation. These findings align with prior research suggesting that optimism promotes civic engagement and mitigates susceptibility to populism. They underscore the need for policy efforts that enhance overall quality of life and foster more optimistic future expectations as a pathway to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Meanwhile, contrary to common public discourse suggesting intensified polarization and youth conservatization, the study finds no evidence of extreme political polarization nor clear conservative shifts among younger cohorts. This highlights the necessity of rigorous, long-term monitoring using sufficiently large and representative samples.

Finally, the analysis of democratic attitudes indicates that positive views of democracy significantly increase support for welfare expansion but do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ax acceptance. This suggests the need for further investigation into the complex interplay between welfare preferences, tax politics, and political trust.

**Key words:** Social cohesion, Social perception, Democracy